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제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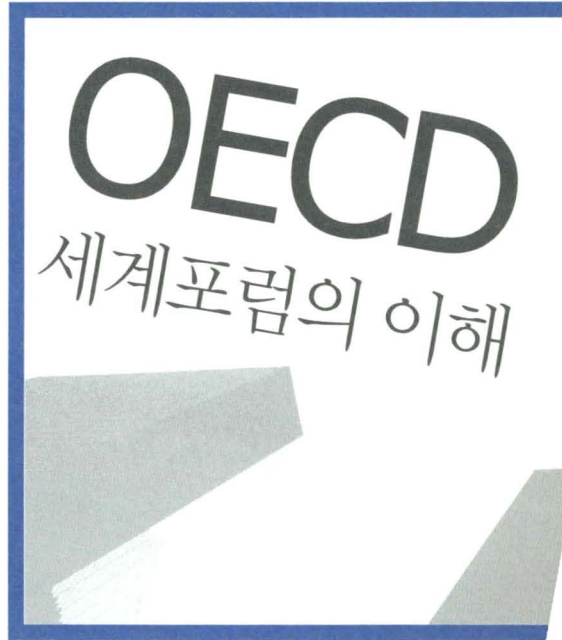


OECD World Forum

B U S A N , K O R E A 2 0 0 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지난 6월에 발간한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제1권 역대 주요 발표문
발췌·요약집」에 이어 이번에 그 후속으로 「제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획물은 200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국내 및 세계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급적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하는 연사들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관련 의제 동향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련 분야의 전문가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들께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박명호 교수(스티글리츠 위원
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 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연구위원(국가 통
계인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이양희 교수(아동의 웰빙),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기후 변화), 녹색성장위 강연화 전문위원(저탄소 녹색성장)
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기획물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일동

발간에 즈음하여

Is life getting better?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OECD 글로벌 프로젝트팀 홈페이지(<http://www.oecd.org/progress>)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입니다. 매우 짧은 질문이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무언가를 우리가 잊은 채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우리 인사말인 '안녕' 에도 이와 비슷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직후 가난에 허덕일 때도 우리네 인사말은 '안녕' 이었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을 자랑하는 지금도 우리네 인사말은 '안녕' 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어사전에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 로 나와 있습니다만, 안녕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나 구를 찾아보니 peace(평화), tranquility(평온), good health(건강한 상태), well-being(참살이), welfare(복지) 등 그 개념이 매우 복잡적이며 광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인 '안녕' 이 우리 삶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임을 은근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GDP 중심의 발전 논리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사회 발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1960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최근 OECD 세계포럼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통하여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진정한 사회 발전에 대한 의미를 되짚고, 이를 측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획된 OECD 세계포럼은 2004년 11월 이탈리아, 2007년 6월 터키에 이어 2009년 10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통계청과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는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지혜와 경험을 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계청은 동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OECD 세계포럼의 취지 및 그간의 논의 내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물 『OECD 세계포럼의 이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물을 통하여 OECD 세계포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희망합니다.

통계청장 이 인 실

CONTENTS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제3차 OECD 세계포럼 의의
프로그램

주요 의제 (Agenda)

1 장 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거시적 접근

- 1절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 · 12
- 2절 OECD 회원국의 웰빙 측정 · 39
- 3절 OECD 비회원국의 웰빙 측정 · 47

2 장 발전으로 가는 길 - 미시적 접근

- 1절 신뢰 측정과 형성 · 58
- 2절 빈곤에서 권력으로 · 68
- 3절 국가통계인의 역할 · 75

- 4절 국제보건원조 현황 · 81
- 5절 아동의 웰빙에 대한 국제적 기준 · 93
- 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01
- 7절 세계 평화 측정 · 111

3 장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1절 기후 변화 · 122
- 2절 저탄소 녹색성장 · 139

부 록

- 1. 제3차 OECD 세계포럼 주요 연사 · 168
- 2. 제3차 OECD 세계포럼 전시회 · 222

OECD 세계포럼 의의

- GDP에 근거한 경제 중심의 발전 개념을 뛰어 넘어(Beyond GDP), 새로운 사회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개발 및 이를 정책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공유
 - ※ 1차 포럼은 '04.11월 이탈리아, 2차 포럼은 '07.6월 터키에서 개최
- **일시/장소** : 2009.10.27(화)~10.30(금), 부산 BEXCO
- **포럼 주제** :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 **참가 규모** : 130여 개국 1,500여 명 (국내 300명, 국외 1,200명)
각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대표, 노벨상 수상자 및 해외 유명 석학, 재계 인사, 언론인 등
약 180여 명 발표·토론 예정
- **주 관** : OECD, 대한민국 통계청



제 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날짜	시간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10.27. (화)	09:30 - 11:00	[워크숍] (1) 인간 개발 측정의 미래 (2) 발전 측정 : 새로운 증거, 새로운 이니셔티브 (3) 외부 감사 시스템에 있어 핵심 국가지표 (4) 시간 활용과 웰빙 측정 (5) 다차원적 빈곤 및 번영 측정 (6) 사회 발전 측정 : ICT와 교육의 역할 (7)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11:30 - 12:3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4:00 - 16:00	[전체회의]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16:30~18:00	[전체회의]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09:00 - 10:30	[전체회의]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10.28. (수)	11:00~12:30	[부문회의] (1) 웰빙, 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정 사례(OECD 회원국) (2) 인적 자본 및 능력 배양 (3) 불평등 (4) 싱크 탱크의 역할 (5) 신뢰 측정과 형성 (6) 빈곤에서 권력으로 (7) 웰빙 및 사회 발전 측정과 촉진에서의 시민참여
	14:30~16:00	[전체회의] 새로운 발전 측정, 새로운 정책
	16:30~18:00	[부문회의] (1) 국가통계인의 역할 (2) 저탄소 녹색성장 (3) 의회의 역할 (4) 일다운 일과 직장에서의 웰빙 (5) 사회 발전 측정 : 이론에서 적용까지 (6)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측정 (7) 증거에 의한 행동양식 변화

날짜	시간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10월 29일 (목)	09:00 - 09:30	[연설] 증거, 인간, 행동양식 : 변화의 법칙
	09:45 - 11:00	[부문회의] (1) 모자보건 및 신생아 돌봄 분석 및 개선 (2) 기후 변화 (3) 삶의 질과 행복
	11:30 - 12:45	[부문회의] (1)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 (2) 웰빙, 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정 사례(OECD 비회원국) (3) 아동 웰빙 (4) 사회의 취약성 측정 (5) MDGs(새천년개발목표) (6) 사회 발전 측정과 국가 통계 발전 전략
	14:30 - 16:00	[부문회의] (1)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2) 기업의 지배 구조 및 사회적 책임 (3) 시민사회의 역할 (4)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5) 도시와 웰빙 (6)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부여 (7) 재단의 역할
	16:30 - 18:00	[전체회의]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09:00 - 09:30	[시상식] OECD 세계포럼 기여자 시상
	09:30 - 10:00	[전체회의] Wiki-progress
10월 30일 (금)	10:00 - 11:00	[전체회의] 위기의 시대에서의 발전 : 리더십 모색
	11:30 - 13:00	[폐회식] 향후 과제 : 이행 약속 및 결론

제 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개괄

구분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오전	워크숍 09:30~11:00	전체회의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09:00~10:30	기조연설 및 부문회의 09:00~11:00	시상식 및 전체 회의 위기의 시대에서의 발견 리더십 모색 09:00~11:0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1:30~12:30	부문회의 11:00~12:30	부문회의 11:30~12:45	폐회식 향후 과제 : 이행 약속 및 결론 11:30~13:00
오찬	오찬	오찬	오찬	
오후	전체회의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14:00~16:00	전체회의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14:30~16:00	부문회의 14:30~16:00	
	전체회의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16:30~18:00	부문회의 ^{주)} 16:30~18:00	전체회의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16:30~18:00	
만찬	환영 만찬	발표자·고위급 만찬	갈라 디너	
연계행사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			
	양·다자회담			

주) 동 부문회의(총 7개) 중 1개 세션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우리 단이 독자 구성
 ※ 1개 부문회의당 3~7개 세부회의 동시 개최 예정

주요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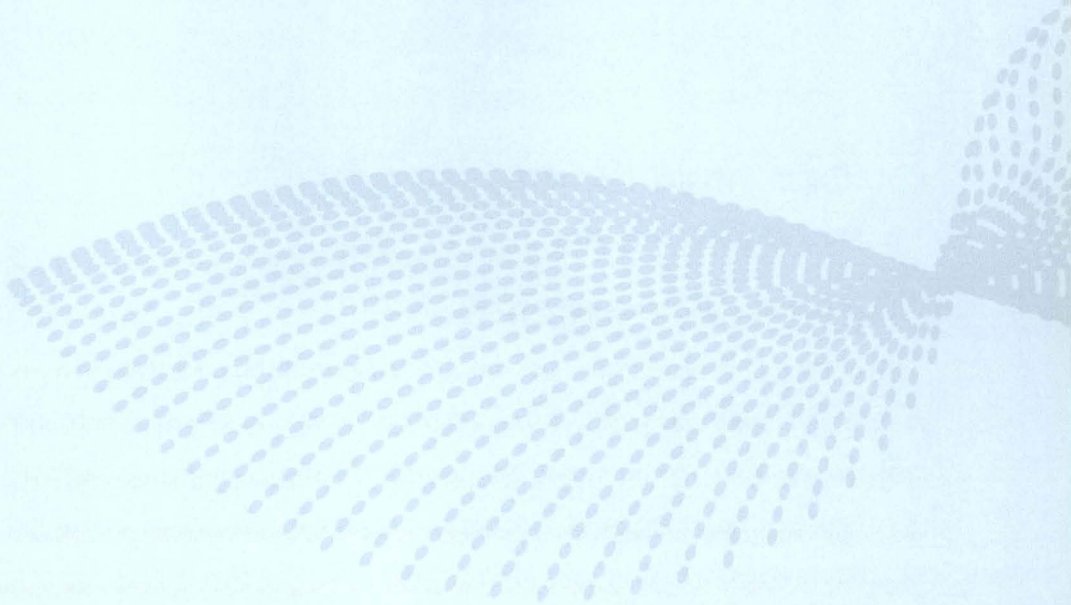
1장 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거시적 접근

2장 발전으로 가는 길-미시적 접근

3장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거시적 접근



1 절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전의 전체회의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세션¹⁾에서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경제성과 및 사회 발전 측정 위원회'가 제시하는 사회 발전 측정 관련 권고안을 살펴보고, 정책 입안자와 통계 전문가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서는 박명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의 원고를 통하여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그 시사점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등장 배경

1) 국민소득 추계의 진화 과정

● 생산적 플로우로서의 국민소득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민소득은 일반적으로 GDP로 측정된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생산 국민소득)이고, 경제 활동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의 합(분배 국민소득)이며 동시에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합(지출 국민소득)으로 구성된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GDP의 추정은 1934년 쿠즈네츠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지만 국민소득 개념은 근대경제학의 출발과 같이 하였다.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노동과 자본과 같은 저량(스

1) 동 세션에는 Jean-Paul Fitoussi(프랑스 국립경제동향조사국 대표; 좌장), Joseph Stiglitz(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조연설), David Gruen(호주 재무부 거시경제그룹 국장; 토론1),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토론2), Pali Lehohla(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장, PARIS21 공동의장; 토론3)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독) 사용에 따른 생산적 유량(플로우)을 측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의 추계는 중농학파의 케네부터 시작된다. 흔히 중농학파라 불리는 케네는 경제의 순환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경제표(Economic Table)를 만들었다. 경제표의 중요한 의미는 경제의 순환이 플로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당시 왕비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케네는 생산적 유량의 기여를 통해 경제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사람 몸에서 피가 순환되는 모습처럼 표를 통해 보여 주었다. 케네는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직업별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여러 경제 주체 중 농민의 생산 활동 참여가 국부 증진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중농주의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케네의 이런 경제관은 애덤 스미스에게 그대로 답습되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는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면서 소득과 부는 더 이상 귀금속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스미스가 목격한 사회에서의 소득과 부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미스는 케네의 영향으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였고 국부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인구 중 생산적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태생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적 플로우의 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급자족하는 사람들과 같이 시장에서 화폐 단위로 거래되지 않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생산적 플로우를 측정하므로 자연자원 스톡 또는 스톡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활동은 간과한다. 그러므로 GDP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서 일부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웰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점은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전문가들 역시 일관되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 GDP의 한계 지적 : 70년대 성장 침체기

GDP 추계는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 30여 년 동안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생활수준 역시 급격히 향상되

2) 스미스에서의 비생산적 노동은 하인, 집사, 악사 등 귀족과 관련된 노동력이었던데 반해, 현대에서의 비생산적 노동은 시장에서 화폐 단위로 보상을 받지 않는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었다. 그러면서 GDP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간접적 지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성장 지향적인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회의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일부는 GDP가 국민 생활의 질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삶의 질을 반영하는 대안 지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GDP의 한계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경제학자인 이스털린³⁾에 따르면, 주어진 한 국가 내에서는 고소득층 사람이 저소득 계층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되어지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비교에서는 개인의 행복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46년부터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복 수준은 1960~70년 기간에 감소했다고 한다.⁴⁾ 이렇게 볼 때 한 국가의 운영은 일단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경제적 성장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한편, 노드하우스와 토빈⁶⁾은 GDP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일종의 경제복지 지수인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를 개발하였다. MEW는 GDP를 근간으로 하면서 육아, 여가 활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계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GDP 추계에 보완하였고 내구재 사용에 따른 서비스 가치를 포함시켰으며 교육과 건강 등에 대한 투자에서 얻는 서비스 역시 GDP 추계에 포함하였다. 반면 GDP 추계에는 포함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효용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MEW를 추계할 때 GDP에서 차감하였다. 예를 들면 출퇴근에 수반되는 비용, 치안, 국방, 공공 보건, 도로 유지 비용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개인의 효용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MEW에서는 제외시켰다. 이와 더불어 소음, 공해, 체중,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이 개인의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MEW에서 차감하였다.

3) Easterlin(1974) 참조

4)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부른다.

5) 통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에 도달하면 국가의 정책 기조는 경제 중심에서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IU(2005) 참조.

6) Nordhaus and Tobin(1972) 참조

MEW 개념은 기본적으로 Hicks의 소득 및 저축 개념에서 나왔다.⁷⁾ Hicks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의 스톡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득과 저축 개념을 정의했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득이란 기존의 부의 스톡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되어질 수 있는 플로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진정한 저축은 주어진 기간에 총 부의 변화량을, 진정한 투자는 총 자본 스톡의 변화를 지칭한다. 같은 맥락에서 MEW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지속가능한 소비 및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은 개인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1970년대 이후 GDP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안 지표 개발은 GDP 중심 세계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전개된 미국 및 유럽 등의 악화된 경제 상황은 더 이상 GDP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실업 문제, 지속적 생산성 하락 추이 등 전통적인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GDP 대안 지표 작업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 대안 작업의 활성화 : 90년대 이후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일변도에서 다시 삶의 질 및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GDP 대안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여기에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 HDI(Human Development Index)가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인간개발지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en의 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⁸⁾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Sen에 따르면, 사람들의 복지 수준은 단순히 물질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이나 지적 능력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성장과 인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대수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 문자 해독률과 초·중·고대 등록률을 반영한 교육 관련 지표를 포함하

7) Hicks(1946)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Hicks가 정의한 원문을 번역 없이 인용하였다. Hicks defined income as "the maximum value which [a man] can consume during a week, and still expect to be as well off at the end of the week as he was in the beginning." One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s well off" is that consumption must be sustainable over time. Income would then be defined as the maximum consumption level that can be sustained, that is, as maximum sustainable consumption.

8) Sen(1999) 참조

고, 마지막으로 생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기 위해 1인당 실질 GDP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고조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환점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나는 지속가능 성장의 정의를 알려준 브룬드란드 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리우 회담이다.

1987년 브룬드란드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⁹⁾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지 않도록 하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 환경, 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1992년 리우회담의 '의제 21' 역시 지속발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지속발전 지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삶의 질을 반영하는 대안 지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을 고려하는 지표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두 개밖에 없던 사회발전 종합지표의 수가 현재에는 40개를 넘고 있다. 지표 내용 및 체계의 변화는 결국 사회발전의 목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주관적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하는 국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¹⁰⁾이 일리노이 대학의 디너 교수로 중심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주관적 만족도 지표는 건강한 삶의 질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구성 요인이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인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관적 만족도 지표는 보건, 공공 의료, 환경, 사회 서비스, 공원, 여가, 시간, 운송, 가족 등과 관련된 정책 이슈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¹¹⁾

9)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10) Guideline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dec. 1, 2005)

11) 디너 교수에 따르면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만들 때의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주관적 만족도의 전반적 측정은 정책 토론에서 매우 유용하므로 가능하면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ii) 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를 잘 감지해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targeted population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사용하는 지표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검증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iv) 비록 기존 지표가 다소 미흡할지라도 유용한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v) 주관적 만족/불만족은 모든 시민과 리더에게 공개되어지고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스티글리츠 위원회 설립 배경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2008년 1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가 사회적 웰빙,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중의 우려를 환기시키면서 사회 발전을 보다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 위원회에 주문한 내용은 종합적인 사회 발전 지표를 만드는 작업으로 이미 1990년대 이후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졌던 것이다. 사회 발전의 종합 지표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던 나라는 많지 않았다. 그러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 프랑스의 경제 상황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은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현재 프랑스 경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지난 3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선진국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므로 만성적인 실업을 유발시켰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경제는 1990년 이후 경제구조의 비효율 증대로 실질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6~2000년 평균 2.7%에서 2001~2005년 기간 평균 1.5%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는 2.2%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독일(2.8%)과 영국(2.8%)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1.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국가	(단위 : %)								
	'91~'95	'96~'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	12.3	8.6	8.4	8.3	9.1	10.0	10.1	10.4	10.7
인도	5.1	6.0	5.3	4.1	4.3	7.3	7.8	9.2	9.2
프랑스	1.1	2.7	4.0	1.8	1.1	1.1	2.0	1.2	2.1
영국	1.6	3.2	3.8	2.4	2.1	2.7	3.3	1.9	2.8
미국	2.4	4.1	3.7	0.8	1.6	2.5	3.9	3.2	3.3

출처 : OECD

〈표 2. 명목 GDP 규모 추이〉

(경상가격, 조 달러)

	1980	1990	1999	2005
미국	2,79	5,80	9,27	12,46
일본	1,06	3,03	4,38	4,56
독일	0,83	1,55	2,15	2,79
중국	0,31	0,39	1,08	2,24
영국	0,54	1,00	1,47	2,23
프랑스	0,69 (4위)	1,25(4위)	1,46(5위)	2,13(6위)

출처 : OECD, IMF

이에 따라 명목 GDP 기준 경제 규모의 세계 순위도 종전 4위에서 1999년 5위, 2005년 6위로 하락하였다.¹²⁾ 2000년대 이후 프랑스 경제가 둔화되면서 언론 등에서는 이를 빗대어 프랑스를 “유럽의 새로운 병자”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성장 둔화는 국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삶의 향상과 성장 촉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프랑스의 저조한 경제 성장은 무엇보다도 경직된 시장 규제 및 규제를 강화시킨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규제 강도는 프랑스의 규제 지수를 다른 경쟁 국가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규제 강도를 규제가 가장 낮은 수준인 0에서 가장 높은 5까지 책정한 결과 프랑스의 노동시장 규제 지수는 2.9로 미국(0.7), 영국(1.1), 독일(2.5)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규제 수준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뿐이 아니고 상품시장의 경우도 프랑스의 규제 지수는 2.3으로 미국(1.3), 영국(1.4), 독일(1.8) 등을 크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 사르코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 유명 인사와 위원회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정책, 주 35시간 노동제 개편 등 성장 위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7년 5월 취임 직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12) 프랑스는 일본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 현상을 겪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매우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켰지만 최근 그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2006년도 기준으로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과 비교해 25%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의 생활 수준 격차 중 5~10%는 생산성 차이로, 나머지 15~20% 격차는 프랑스의 적은 노동시간과 낮은 고용률로 설명되어진다. Cette, Gilbert,(2005) 참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하고 실업률 또한 20여 년간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용, 소득, 사회통합 이사회」(Conseil de l'emploi, des revenus et de la cohésion sociale, CERC)와 「성장촉진위원회」(Commission pour la libération de la croissance française) 활동이다. 「고용, 소득, 사회통합 이사회」는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 총재를 역임했던 칸드쉬 책임 하에 “1993~2005 프랑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수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성장촉진위원회」의 활동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개혁 청사진을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고 아탈리에게 요청하였다. 아탈리는 프랑스의 사회당 집권 시 미테랑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낸 대표적인 좌파 기반 지식인이다. 그런 아탈리에게 우파 대통령이 개혁 청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장촉진위원회」 보고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 대통령 직속의 「성장촉진위원회」는 CEO, 경제학자, 노조 관계자, 사회단체 종사자, 학계 인사를 포함하는 44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아탈리는 각종 규제 철폐,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개혁안을 제안한 최종 보고서를 2008년 1월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¹³⁾ 칸드쉬의 「고용, 소득, 사회통합 이사회」와 아탈리의 「성장촉진위원회」 활동은 모두 프랑스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제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명사를 대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¹⁴⁾ 이런 맥락에서 사회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스티글리츠, 셴 등과 같은 유명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스타일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3) 보고서의 핵심은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성장하는 데 반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개혁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아탈리는 316개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여 정책화 하였다.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보너스 지급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 IMF 총재이었던 칸드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 받는 은행 보너스 지급 연구 위원회를 만들어 보너스 지급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9월 미국에서 개최될 G20 회의에서 금융권 보너스 지급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9년 8월 27일 기사 참조

● 통계에 대한 불신 해소

이 밖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 국민의 통계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학계에는 널리 알려진 상식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통계원(INSEE)은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 측면에서도 프랑스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통계 전공 학생들이 지원하는 국립 통계학교(ENSAE)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통계원은 통계와 관련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는 기관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국민들 사이에서 공식 통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문제의 발단은 통화 통합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화폐 단위인 프랑이 유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피부로 물가 상승을 크게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물가지수는 피부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물가 통계에 대한 불신은 가처분소득, 실업 등에 대한 통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통계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었다. 물론 이는 거시적 통계 발표와 개인 차원에서 느끼는 미시적 인식(micro-perception)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득이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구성 및 일정

● 구성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위원장은 스티글리츠 교수, 위원장 고문(chair advisor) 센 교수, 간사(coordination) 피투시 교수로 하는 3두 체제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22인의 위원과 8명의 사무국 실무진(rapporteur)으로 구성되었다. 22인의 위원 중에는 애로우, 핵만, 카네만 교수와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외에 앳킨슨, 크루거, 퍼트남, 부르기농, 게느리, 스텐 등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프랑스 통계원장 코티, UNDP의 커말, OECD 통계국장 조바니 등과 같은 국제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8명의 사무국 실무진은 프랑스 통계원, OECD, OFCE(Observatoire Français des Conjonctures Economiques)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3개의 분과(working group)로 구성되었다.

〈표 3.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구성〉

분과	분과 장	위원	전임 연구 인력
GDP 이슈	Enrico GIOVANNINI	Anthony B. ATKINSON François BOURGUIGNON Jean-Philippe COTIS Nancy FOLBRE	Paul SCHREYER, OECD, Paris Xavier TIMBEAU, OFCE, Paris Pierre-Alain PIONNIER, Insee, Paris
지속가능성과 환경	Geoffrey HEAL	Kemal DERVIS Roger GUESNERIE Claude HENRY Justin LIN Nick STERN	Didier BLANCHET, Insee, Paris, Jacques LE CACHEUX, OFCE, Paris
삶의 질	Alan B. KRUEGER	Bina AGARWAL Angus DEATON Marc FLEURBAEY Jean GADREY Daniel KAHNEMAN Robert D. PUTNAM	Marco MIRA D'ERCOLE, OECD, Paris Laurence RIOUX, Insee

1분과는 고전적인 GDP 이슈(Classical GDP Issues)를 다루고, 2분과는 지속가능성과 환경(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3분과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다루고 있다. 1분과는 OECD의 지오반니니 통계국장, 2분과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힐 교수, 3분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크루저 교수가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전공에 따라 특정 분과에 나누어져 있고, 사무국에 파견된 연구 인력은 각 분과에 고루 배치되어 있다.

● 일정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위원회 이름 그대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 발전의 측정」(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 작업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 중심이 아닌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¹⁵⁾ 그리고 OECD, Eurostat, UN 통계국, 각 국의 통계국 등과 협조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및 미국 등의

15) UNDP의 HDI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인데 국민소득, 수명, 교육은 선진국일수록 보다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중립적인 측정 방법을 개발하도록 요청받았다.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적 의미를 지닌 측정을 시도하고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 받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전통적인 GDP 이슈, 삶의 질, 지속가능성과 환경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지표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2008년 4월 1차 모임 이후 2008년 7월까지 이슈 페이퍼를 발표했고¹⁶⁾, 11월에 2차 모임, 2009년 1월에 3차 모임을 가졌으며 2009년 4월에 4차 모임 후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져 2009년 9월 14일에 개최되었다. 최종 보고서의 초안은 2009년 6월 초에 발표되었다.

3. 보고서 내용 정리

2009년 8월 말 현재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못하였지만 6월에 발표된 초안과 그 동안 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¹⁷⁾을 토대로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대로 동 보고서는 GDP,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이라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2008년 7월 1일부터 프랑스가 EU의 의장국가가 될 것이었으므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장직을 수행하는 7월까지 이슈 페이퍼를 작성토록 해 그 결과를 EU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17)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발표된 주요 working paper는 다음과 같다. 원문은 모두 <http://www.stiglitz-sen-fitoussi.fr/en/documents.ht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urvey of Existing Approaches to Measuring Socio-Economic Progress, Joint Insee-OECD document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by (at Insee) Cédric Afssa, Didier Blanchet, Vincent Marcus, Pierre-Alain Pionnier, Laurence Rioux, and (at OECD) Marco Mira d'Ercole, Giulia Ranuzzi, Paul Schreyer, April 2008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Notes on the Theory, Marc Fleurbaey, document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April 2008

Minutes of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22 - 23 April 2008

Issues Paper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July, 25, 2008

Note Problématique de la Commission sur la Mesure des Performances Economiques et du Progrès Social, 25 juillet 2008 (traduction en français de l' "Issues Paper")

Beyond GDP: Is There Progress in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Marc Fleurbaey, August 2008, revised version of the paper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Notes on the Theory"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1) 고전적인 GDP 이슈

● 품질 개선, 소득 전가

GDP 이슈는 경제학 전문가에게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GDP 추계에서 논의되는 품질 변화 이슈, 소득 및 가격 전가의 측정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출발한다. 우선 보스킨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질적 변화의 추계 오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시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품질 개선에 따른 조정 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가(imputation)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계정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invariance principle을 강조한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임대료 전가, FISIM(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 현물로 제공되는 사회 이전소득 등 세 가지 소득 전가를 논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핀란드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 전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임대료 전가는 GDP의 6.9~12.2%, FISIM은 1.5~4.3%, 현물로 제공되는 사회 이전소득은 7.9~22.3%로 나타났다. 그리고 3국을 대상으로 이들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85년에서 2007년까지 프랑스는 27.4%에서 30.4%, 미국은 19.6%에서 22.8%, 핀란드는 30.6%에서 36.8%로 모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 전가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 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한편,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의 GDP 관련 이슈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제안은 국민소득을 기본적으로 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지적이다. 앞서 지적된 공공서비스의 소득 전가 역시 국민소득을 가계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정부 현물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가계 소득에 이전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가계 소득을 다룰 때는 평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위값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 동 보고서에서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80%씩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을 포함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10쪽 참조.



프랑스 INSEE의 코티¹⁹⁾는 국민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계 수지와 동향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NSEE는 가계 수지 동향을 소득 계층별로 소득 대비 지출수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 중에서 교육, 교통, 광열수도비, 통신 등과 같이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고정적인 지출과 가계가 처분 가능한 소득(revenu arbitable)을 구분하고 소득 계층별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하여 어떤 계층이 어떤 지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소득 분배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가계 수지 관련 단순한 평균 수치의 제공만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실태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 생활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 개선 과제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민소득 측정틀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계정에서 GDP 아닌 다른 개념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GDP의 취약점의 하나는 국민소득을 순(net) 개념이 아닌 조(gross)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추계가 GDP가 아닌 NDP일 때 추계가 보다 적절하다는 점에는 이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가상각 추정의 어려움으로 순 개념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NDP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동 보고서는 GDP의 현실적 대안으로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r-NNDI)을 제안한다. 그리고 r-NNDI를 근거로 국민소득을 재추정한 결과 아일랜드는 국민소득이 25% 가량 감소하는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1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측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방 같은 공공서비스, 의료교육스포츠 시설 등은 측정이 잘 안 되는 대표적 분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투입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투입 기준 측정이 산출 측면보다 열등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건비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1인당 보건비용은 유럽보다 높지만 미국의 보건 시스템이 유럽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추계를 산출이

19) Cotis(2008) 참조.

나 성과 위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보고서에서는 방어적 지출(defensive expenditure)을 재정의하고 그 규모의 추정을 제안한다. 이미 노드하우스와 토빈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교도소 운영, 출퇴근 비용은 그 자체로서 직접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효용을 가져오는 활동에 필요한 투입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국민소득 추계를 고려할 때 교도소, 국방 등의 공공서비스는 소득 추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²⁰⁾

넷째, 소득과 부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만들듯이 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국가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고 한다.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 부의 변화를 계산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2) 삶의 질

● 접근 방법

삶의 질은 경제적 생산이나 생활수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을 구성하는 많은 자원이 시장에서 거래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물적 자원이 아닌 생활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토론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심리적 연구와 연관된 주관적 웰빙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조건을 가장 잘 판단한다고 보는 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접근은 공리주

20) 출퇴근 비용과 같은 가계의 방어적 소비는 생산을 위한 중간 투입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업의 이윤 감소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 투자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의와 일맥상통하면서도 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보다 포괄적인 가정에 의존한다. 그리고 주관적 웰빙 연구는 삶의 질 그 자체의 추정보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역량(capabilities) 접근이 가능하다. 역량 접근에 의하면 인생은 다양한 행위와 존재(doings and beings)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량이란 이런 조합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역량은 영양 공급이나 유아 사망률에서 탈피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능력 같은 것은 매우 복잡적일 수 있다. 역량 접근은 사회 정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을 존중하지만 감정과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경제적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모형은 거부한다. 한편, 좋은 사회를 고안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셋째, 후생경제학 전통에서 발전된 공평한 배분 접근 방식을 들 수 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차원에 대해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금전적 차원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사람들의 상황과 선호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접근 방식은 공통점과 차이를 지니고 있다. 주관적 웰빙 접근은 역량이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라는 속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든 역량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역량 접근 주창자들은 주관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회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한편, 역량 및 공평 배분 접근은 모두 개인의 객관적인 속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런 속성의 합산 및 가중치 부여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접근 모두는 시장 거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 주관적 측정의 유용성

삶의 질 측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현실적 선호이론에 입각해 사람들의 선택 행위 속에 자신의 선호가 나타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웰빙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택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 생각했다. 그러다 최근 경제학과 심리학이 융합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주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인플레이와 실제 인플레이를 비교할 수 있지만 오직 응답자만이 자신의 주관적 상태와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노동자가 이직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측정은 예측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다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행복하다고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정보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주관적 측정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

삶의 질을 측정하려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관적 차원(사람들의 주관적 경험과 평가)과 이들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들을 구분해야 한다. 주관적 차원에는 우선 사람들의 가족, 일, 재정 상태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고통, 근심, 기쁨 등 사람들의 실제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 선택을 하고, 선택은 기억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물론 기억과 평가는 때로는 근본적인 실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에 대한 평가는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와 감정을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하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삶의 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수명, 사망률, 질병 등을 포함하는 보건을 들 수 있다. 보건은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게 누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요인은 교육으로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 측정은 보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셋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개인 행동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인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시간 활용 조사와 시간 활용에 대한 만



족도를 동시에 조사해서 측정할 수 있다. 넷째는 정치적 목소리와 지배 구조로 이는 민주주의와 보통선거, 의사 결정에서의 분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요인은 사회적 연계로 이는 그 자체로서 보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로 나타난다. 단체 가입률, 활동 빈도 등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활동에 관한 서베이가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환경 조건은 보건뿐만 아니라 물, 자연, 기타 권리 등의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곱 번째는 범죄, 사고, 자연 재앙을 포함하는 개인적 불안전성을 지적하고, 마지막 요인으로는 실업, 병, 노령을 포함하는 경제적 불안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 이론적 이슈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이론적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관계를 보다 잘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의 발전이 어떻게 보건, 정치적 목소리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들 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 정책은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과 병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의 삶의 질 손실이 빈곤과 질병이 각각 따로 생겼을 때의 손실의 합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손실의 누적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통계의 특성상 모든 통계가 분야별로 칸막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특성 변수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개인 조건들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개별 국가의 평균 조건은 국가 내의 불평등의 증가하는 간격(growing gap)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제안한 배경에서도 나타났듯이 통계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측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비금전적 차원의 불평등은 측정되기 어렵다. 이는 불평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하나의 불평등은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3) 지속가능성과 환경

● 접근 방법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는 노드하우스-토빈 방식부터 NGO들에게 친숙한 환경에 특화된 방식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므로 아직까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 관련 이슈는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부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스톡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의 가능한 접근을 제시한다.

첫째는 지난 몇 십년간 UN, OECD, Eurostat, 유럽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택한 접근 방식으로 dashboard 접근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지표들을 모아서 순서를 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오스버그와 샤프²¹⁾의 경제후생지표(IEW), 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와 ESI의 축약본인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등과 같은 복합지표 방식이다. 복합지표 방식은 결과를 순위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특정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셋째는 조정된 GDP(adjusted GDP) 방식이 있다. 이는 노드하우스와 토빈의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에다가 전체 부의 변화를 포함시킨 접근 방식으로 여기서 부의 변화는 재생 가능한 자본, 재생 가능하지 않은 자본(토지와 해외 자산에 국한), 교육 자본과 보건 자본으로 구성된다.²²⁾ 넷째로는 과잉 소비와 과소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은행의 조정된 순 저축(Adjusted Net Saving, ANS) 접근이다. ANS는 인적 자본 투자, 자연자원의 고갈, 공해로 인한 손상 등을 감안한 경제의 진정한 저축률을 나타낸다. 세계은행은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ANS를 추정한다.

21) Osberg and Sharpe(2002), Osberg and Sharpe(2005), Sharpe(2005) 참조

22) 이렇게 볼 때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GPI(Genuine Progress Index), 녹색 GDP는 조정된 GDP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녹색 GDP의 추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GDP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NDP를 추계하고 여기에다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를 포함한 자연자원 소비를 포함하면 eaNDP(environmentally-adjusted GDP)인 녹색 GDP를 추정할 수 있다.

● 목적에 부합한 지표 만들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각기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지표가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룰 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과연 무엇을 측정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만족스럽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차선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 무엇을 측정하려는지부터 살펴보자. 지속가능 발전의 관건은 현재 수준의 웰빙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웰빙을 누릴 능력은 결국 현 세대가 웰빙에 중요한 자산을 충분히 넘겨주는지에 달려 있는데 동 보고서에서는 이를 확장된 부(Extended Wealth, EW)라 부른다. 그러므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의 관건은 EW의 변화율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EW가 얼마나 변했는지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양한 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만일 모든 자산의 미래시장이 존재해서 오늘 거래가 가능하다면 미래의 웰빙도 할인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자산이 시장의 불완전성, 미시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EW의 가치 변화가 시장 가격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전가된 회계 가격(imputed accounting prices)에 의해 미래의 환경 파괴 등이 추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 및 환경을 포괄하는 의미 있는 지표를 기대할 수 있다.²³⁾ 그러나 동 보고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EW의 변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그 자체로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3) EW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 환경 발전을 예측하고 이런 발전 과정이 어떻게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이런 완전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므로 미래에 대한 해석은 확률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확실성은 여러 양상을 띠므로 확률 계산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미래 예측에 따른 문제점은 상존한다.

4.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성과

● 사회 발전 지표의 중요성 강조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가장 큰 기여는 사회 발전 지표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사실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이론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위원회가 실무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명사들의 모임에 가까운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 발전의 측정' 또는 'GDP를 넘어서' 등으로 불리던 중요 이슈를 특정 국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다수를 포함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데 일단 성공적이었다 하겠다. 이를 계기로 사회 발전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 되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보고서는 향후 논의될 사회발전지표 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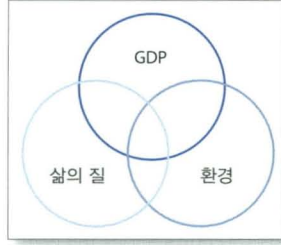
● 사회 발전 방향의 제시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내용 측면에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사회 발전을 GDP를 보완하는 경제,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다루었는데 이렇게 사회 발전을 세 가지 분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지표 작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GDP, 삶의 질, 환경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으므로 그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 분야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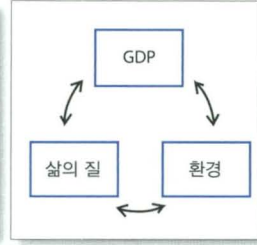
<그림 1>은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가 공동의 영역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의 영역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경제와 환경이 겹치는 분야에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

24) 한국에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1>



<그림 2>



차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²⁵⁾ 그리고 삶의 질과 환경이 겹치는 부분에는 파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삶의 질과 성장의 공통 영역에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 중 서로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는 경우 이를 사회 발전이라 부를 수 있다.

한편 <그림 2>에서는 사회 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 간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그린 것으로 이들 세 분야가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 발전 모형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지라도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이들 세 분야의 공통 영역 확대 또는 상호 교류 강화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 지표 설정 작업에 기여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향후 사회발전지표는 만드는 작업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하겠다. 우선 GDP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기존 GDP 틀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계의 관점에서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정한 점은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평가된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서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방법론 논의부터 시작해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 방법, 그리고 삶의 질 관련 객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 점 역시 매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삶의 질 측정은 개인의 선호, 특히 시장에서 표출되지 않는 선호를 파

25) 현재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목표를 지녔다는 점에서 GDP와 환경의 교집합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속 발전과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제시와 함께 지속 발전을 단일 지표를 만드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 놓았다. 특히 환경 관련 지표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 작업이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으리라는 점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2)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발전지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사회 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시각을 제공한 점이 매우 유용하다. 물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경제, 삶의 질, 환경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각각 1/3씩의 가중치를 두면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성장 일변도 정책이 아닌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 하겠다.

● GDP 이슈 관련 : 가계 관점의 필요성

우선 GDP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감안해서 한국 사회에 적용이 가능하다. GDP의 일차적 보완 단계인 실질 순 국민 가처분 소득 추정은 현 단계에서도 문제없이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투입 측면이 아닌 성과 측면에서 측정하는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한두 개 공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시도하면서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어적 지출에 대한 추계는 현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가계의 관점에서 GDP를 추정하는 시도 역시 대부분 설득력이 있고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권고하는 방향대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가계 관점에서 국민소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의 지적대로 소득 통계가 평균보다는 중위 값과 더불어 소득 10분위별로 보여 주는 것이 실태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소득 분배 조건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평균값만의 제시로는 국민생활 실태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가계의 필수적인 소비와

26)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AHP를 시도할 수 있다.

가계가 여유 돈으로 지출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여유 정도를 소득 계층별로 보여 주는 경우, 어떤 계층이 어떤 품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INSEE가 제공하는 소득 계층별 가계 수지 동향 데이터를 통한 가계 생활 실태 분석은 우리 정부의 중산층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의 이해

삶의 질과 관련해 위원회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GDP 이슈 부분과는 달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 지적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지표를 작성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단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인 여덟 가지(보건, 교육, 개인 활동, 정치 및 지배 구조, 사회적 관계, 환경 조건, 개인적 안전, 경제적 안전)에 대한 내용은 향후 지표 작업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 EW 변화율과 지속가능 발전의 관계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도 지적하였듯이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큰 분야이다.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환경 문제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는 플로우가 아닌 스톡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은 합당하다. 환경의 과다 소비 또는 과소 투자를 감안하는 ANS나 발자국(footprint) 역시 사회 전체의 자산(Extended Wealth, EW)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대안 지표로 활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자산 변화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나라의 자산이 빨리 증가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다시 말하면 왕성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다소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순 투자 증가가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과거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ANS에서 높은 순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ANS가 유리한 지표일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OECD의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ANS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이 5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위를 보였고, G20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1위를 하다가 점차로 순위가 낮아져 현재는 4위이다.²⁷⁾

한편,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ESI 및 EPI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ESI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최하위인 29위를 나타냈다.²⁸⁾ ESI를 축약한 지표인 EPI 순위는 2008년 현재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6위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신경제재단(NEF)의 HPI²⁹⁾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965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1위에서 15위 사이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생태 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EF)는 동 기간 17위에서 23위 사이로 중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 관련 지표의 경우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한 나라의 순위가 크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 관련 지표를 작성할 때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성장과 분배의 조화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의 하나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를 우선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때로는 다수의 소득은 다소 감소시키면서도 일부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평균 소득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경험하고 있다.³⁰⁾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과 지출을 평균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소득 계층별로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 발전을 안정적으로 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당 평균 소득은 증가하지만 중하위 소득 이하의 계층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에 비해

27)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1997년의 ANS 순위가 가장 떨어져서 3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4개 년도에서도 2위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낸다. ANS를 G20 회원국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1993년까지는 한국이 1위를 하다가 1994년 이후에는 중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8)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빠져 29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9) HPI는 웰빙을 유지하는 환경 효율성의 지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PI is best conceived as a measure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supporting well-being in a given country.)

30) Piketty, T., Saez, E.(2006), Atkinson, A., Piketty, T., Saez, E.(2009), 유경준(2007) 참조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근로 빈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³¹⁾ 더욱이 사람들은 소득 손실로 인한 고통을 같은 금액의 소득 증가로 인한 웰빙 증가보다 두 배나 크게 느낀다는 사실³²⁾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중하위 계층의 소득 손실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 상위 20%의 소득 증가 총액이 하위 20%의 소득 손실액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20%가 느끼는 고통이 상위 20%가 느끼는 안락보다 두 배나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 성장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 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Atkinson, A., Piketty, T., Saez, E. (2009),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in [Top Incomes; A Global Perspective], Chapter 13, Oxford University Press
- Blanchet D., Simon O., Sylvander M., Niveaux de vie, productivite et bien-etre en longue periode: la France et les principaux pays developes, L'Economie Francaise, edition 2007
- Cédric Afssa, Didier Blanchet, Vincent Marcus, Pierre-Alain Pionnier, Laurence Rioux, and (at OECD) Marco Mira d'Ercole, Giulia Ranuzzi, Paul Schreyer, Survey of Existing Approaches to Measuring Socio-Economic Progress, Joint Insee-OECD document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by (at Insee) April 2008
- Cette, Gilbert, Productivité : Les Etats-Unis distancent l'Europe dans les années 1990, Problèmes économiques du 2 mars 2005
- CMEPSP, Issues Paper of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July, 25, 2008
- CMEPSP, Note Problématique de la Commission sur la Mesure des Performances Economiques et du Progrès Social, 25 juillet 2008 (traduction en français de l' "Issues Paper")
-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P) (2008). Survey of Existing Approaches to Measuring Socio-economic Progress

31) 노대명(2008) 참조

32) Layard(2003) 참조

- Cotis J-Ph, Conference de Presse 20 mai 2008, INSEE, 2008
- Diener, Ed. (1993)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103-157.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 of life index, EIU, 2005
- Kahneman, Daniel, Alan Krueger, David Schkade, Norbert Schwarz, Arthur A. Stone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Vol. 306, No. 5702
- Layard R.,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delivered on 2002/3, 3, 4, 5 March 2003, LSE, 2003
- Marc Fleurbaey, Beyond GDP : Is There Progress in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August 2008, revised version of the paper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Notes on the Theory"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 Marc Fleurbaey,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Welfare : Notes on the Theory, document prepared for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CMEPSP, April 2008
- Nordhaus W., and Tobin J., Is Growth obsolete?, NBER 1972
- OECD Statistics Directorate (2008)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Strategic Action Plan
- Osberg L, and Sharpe A.,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p. 2002
- Osberg L, and Sharpe A.,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June. 2005
- Oswald, Andrew, "The Hippies Were Right all Along about Happiness" *Financial Times*, January 19, 2006.
- Piketty, T.(2003), "Income Inequality in France, 1901-199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5), 1004-1042
- Piketty, T., Quian Nancy(2009), "Income Inequality and Progressive Income Taxation in China and India, 1986-2015,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009, 53-63
- Piketty, T., Saez, E.(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2), 200-205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Books.



- Sharpe A., A Survey of indicators of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CPRN, 2005
- United Nations. 1983. "Process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to the Year 2000 and Beyo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8/161, 19 December 1983. Retrieved: 2007-04-11.
- United Nations.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42/187, 11 December 1987. Retrieved: 2007-11-14
- 김태완,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32, 2009
- 노대명, 서구 근로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8-1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12
- 유경준,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2007



OECD 회원국의 웰빙 측정

[캐나다 웰빙지표]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전의 부문회의 ‘웰빙 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정 사례(OECD 회원국)’ 세션¹⁾에서는 OECD 회원국에서 추진 중인 웰빙 및 새로운 사회 발전 측정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본 세션의 주제인 웰빙²⁾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발전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 웰빙연구소(Institute of Wellbeing)³⁾에서 작성 중인 캐나다 웰빙지표(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⁴⁾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IW의 필요성

삶의 질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국가적 도구가 부족하여 그동안 GDP가 웰빙에 대한 척도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GDP가 증가하면 국가가 잘하고 있는 것

1) 동 세션에는 John Parker(영국 이코노미스트紙 세계화 담당기자; 좌장), Chris Hoening(미국 The State of the USA 대표; 발표), Brian Pink(호주 통계청장; 발표), Mariano Rojas(멕시코 FLACSO 경제학 교수; 발표), 이재열·장덕진(서울대 사회학 교수; 발표)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2) 웰빙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간단히 정의하기 어렵다. 캐나다 웰빙연구소는 웰빙을 좋은 생활수준, 건강,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사회 생명력, 교양 있는 대중, 적절한 시간 활용, 높은 시민 참여도, 예술과 문화에의 적극적 참여 등에 초점을 두어 최상의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웰빙을 참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웰빙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캐나다 웰빙연구소(Institute of Wellbeing)는 워터루대학교와 제휴하고 있는 웰빙연구소로 캐나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이사회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4) 여기에 소개되는 CIW 내용은 캐나다 웰빙연구소의 2009년 6월 보고서 「캐나다인들의 실상(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과 CIW 홈페이지(<http://www.ciw.ca>)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으로 판단하고, GDP가 감소하면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GDP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GDP는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일 뿐,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GDP 개념의 창안자인 쿠즈네츠마저도 “한 나라의 안녕(安寧)은 GDP에 의해 정의되는 국가의 소득만으로 유추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였다. 소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GDP는 다다익선의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 소비나 재해, 범죄 등의 증가는 삶의 질을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도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즉, GDP는 삶의 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나 환경 파괴 등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웰빙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로서 CIW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CIW는 GDP와는 달리, 웰빙에 유익한 활동과 유해한 활동들을 구분하여 경우에 따라 오히려 적은 것이 더 나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다.

2. CIW의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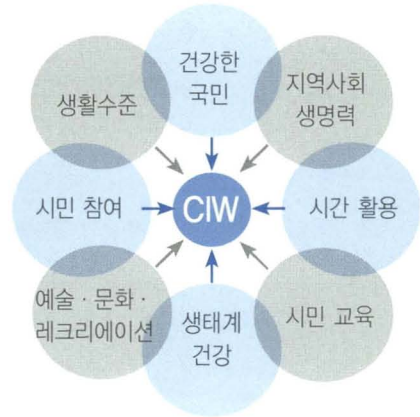
1999년, 애킨슨 자선재단(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은 경제보건·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캐나다인들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독립된 여론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진정한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애킨슨 자선재단은 캐나다 정책 연구 네트워크(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와 공조하여, 삶의 질에 대한 표준 국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캐나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웰빙지표의 중요성과 개념을 소개하였다. 2002년에는 지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한 전국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웰빙 측정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양시켰으며, 2004년에는 지표 전문가 이외에도 정부, 학계 및 지표 이용자들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캐나다 연구자문그룹(Canadian Research Advisory Group)이 설치되고 2008년 9월 캐나다 웰빙연구소가 창립되면서 CIW 개발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애킨슨자선재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시작된 CIW는 현재 여러 후원단체들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1 CIW의 8가지 영역〉



3. CIW의 구성 체계

CIW는 삶의 8가지 영역(예술·문화·레크리에이션, 시민 참여, 지역사회 생명력, 시민 교육, 생태계 건강, 건강한 국민, 생활수준, 시간 활용)에 있어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할 것이다.

현재 8개 영역 중 '생활수준', '건강한 국민', '지역사회 생명력'의 3가지 영역에 대한 작업을 마쳤으며, 2010년 나머지 영역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8개 영역의 대표 지표(headline indicators)를 합성하여 하나의 종합지수를 작성·공표함으로써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지수는 국민보건조사(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가 처음 실시되었던 1994년을 기준년도⁶⁾로 하여 작성되며, 그 결과는 2010년에 공표될 예정이다.

CIW의 8가지 영역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1>과 같다.

4. CIW 영역 간 연계

CIW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각 영역 간 상호 교류 없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공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구상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작

5) 후원단체로는 애킨슨자선재단(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 RBC재단(RBC Foundation), 온타리오주정부(Province of Ontario), 로슨재단(The Lawson Foundation), 맥코넬 재단(J.W. McConnell Family Foundation), 캐나다 학습의회(Canadian Council on Learning)가 있다.

6) 1994년 측정값을 100으로 설정한 것으로,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1994년에 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100 미만인 경우에는 1994년에 비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 CIW의 영역별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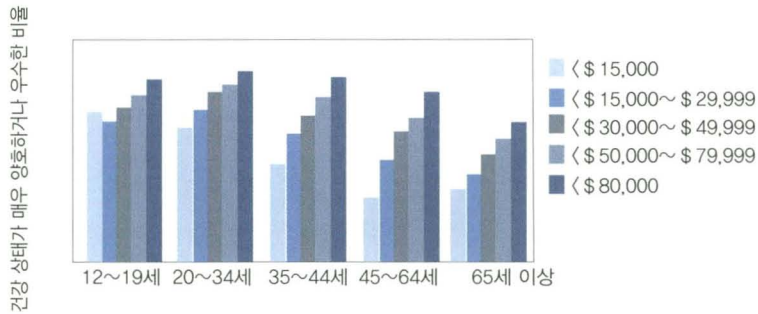
영역	세부 내용
① 예술·문화 · 레크리에이션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문화 영역의 활동, 특히 예술 분야에 중점을 둔 공연예술, 시각예술, 미디어예술, 예술 관련 기관이나 협회,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측정한다.
② 시민 참여	공공생활 및 거버넌스(개방성, 투명성, 효과성, 공정성, 형평성, 접근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의 정부의 기능)에 대한 시민 참여도,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등을 측정한다.
③ 지역사회 생명력	주민, 민간기관, 공공기관, 자치 조직들 간의 관계성, 활동성, 결속력을 측정한다.
④ 시민 교육	캐나다인들의 문맹률과 기술 수준, 개인의 역할과 미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측정한다.
⑤ 생태계 건강	생태시스템·하천·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를 측정한다.
⑥ 건강한 국민	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웰빙, 기대수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생활환경, 건강관리에 있어 질적 측면과 접근성, 공공보건 서비스 등을 측정한다.
⑦ 생활수준	소득 및 부의 정도와 분배, 빈곤율, 소득 변동성 및 불균형, 경제적 안보(고용, 식량, 주거, 사회안전망) 등을 측정한다.
⑧ 시간 활용	시간 활용, 시간 활용의 결정 요인, 시간 활용과 웰빙과의 관계 등을 측정한다.

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작업이 끝난 '생활수준', '건강', '지역사회의 생명력'의 세 영역에 있어서 웰빙지표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인들의 건강은 그들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수명이 길고, 당뇨 등 다른 만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많다. 가구 소득은 미래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된다.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보고(캐나다 지역사회 보건조사, 2005년) 결과를 보면, 소득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들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하위 빈곤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 유사한 소득 수준의 남성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보고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과 비교하여 약 2%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교육 수준은 지역사회의 생명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 단체 가입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2005년도 소득과 연령에 따른 자가진단 건강 상태〉



출처 :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지역사회 보건조사

특히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확률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캐나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여 소득과 건강에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청년층(14~24세)의 저임금 노동 비율은 1980년에는 31.2%였으나 2000년에는 4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캐나다의 교육 수준, 생산성, GDP의 꾸준한 증가와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특히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많은 빚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년층의 저임금 일자리 증가는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 결혼 등의 기회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부와 건강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근거할 때, 십대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웰빙의 각 영역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가능한 타 영역과의 상호 작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캐나다인들의 웰빙을 개선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영역들이 언제,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이 만족하는 전 국민 대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 간 의료서비스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다양한 지역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이 매우 바람직하고 절실히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규제 및 제도, 세금 등 사적 경제 활동이나 공공 정책에 의하여 형성되는 많은 사회경제

적 상황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들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 적합한 공공 정책이나 기존 의료 분야 이외의 빈곤 감축 조치(최저생활임금, 적절한 주택 보급, 식량 보장, 초등교육, 육아서비스 등) 등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영역별 측정 사례 : 생활수준⁷⁾

생활수준 영역은 '세후 중간 소득', '소득 분배', '부의 분배', '저소득 빈도', 'CSLS 경제적 안보 지수⁸⁾', '장기 실업', '고용률', 'CIBC 고용의 질 지수⁹⁾', '주거 적합성 및 감당 가능성' 등 9종의 지표를 통하여 소득 및 부의 정도와 분배, 빈곤율, 소득 변동성 및 불균형, 경제적 안보(고용, 식량, 주거, 사회 안전망)를 측정한다.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인들의 생활수준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성장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3. 생활수준 모델〉



7)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작업이 완료된 3개 영역 중 '생활수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한다.

8) CSLS 경제적 안보 지수는 캐나다 생활수준학습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 CSLS)에서 개발한 지수이다.

9) CIBC 고용의 질 지수는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에서 개발한 지수이다.

- 1981년에서 2008년까지 1인당 실질 GDP는 총 52.6% 증가하였으나, 1인당 개인소득은 단지 36.5% 증가하였고 1인당 개인가처분소득은 28.8% 증가에 그쳤다.
- 동 기간 노동생산성의 경우 연평균 1.3%씩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실질 임금은 연평균 0.8%씩 증가하였다.

● 캐나다인들의 소득은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근로시간의 증가 때문이다.

-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세전 1인당 실질 개인소득은 36.5%, 세후 1인당 실질 개인소득은 28.8%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세전 실질 가구소득은 14.1%, 세후 실질 가구소득은 11.7% 증가하였다.
- 실질 소득 증가는 근로시간의 증가에 일부 기인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동 기간 2.9% 증가하였다.
- 50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의 비율은 1981년 12.1%에서 2008년 12.9%로 0.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5~64세 근로자층에서의 증가폭이 1.3% 포인트로 가장 컸다.

● 캐나다인들은 평균적으로 더 부유해졌다.

- 1981년 대비 2007년의 평균 실질 순자산은 1인당 기준으로 73.7% 증가하였으며, 가구 기준으로는 51.7% 증가하였다.

● 불평등이 심화되어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졌다.

-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상위 20% 가구의 세후 소득은 38.7% 증가한 반면, 그 이외의 가구는 21%~26% 증가하였다.

● 빈곤층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빈곤 퇴치에 있어서의 발전은 미미하였다. 전체 인구 중 빈곤율은 1981년 11.6%에서 2007년 도에 9.2%로 약간 낮아졌다.
- 빈곤 격차¹⁰⁾는 1981년과 2007년 모두 6,700달러로 동일하였다.

● 노동시장 조건은 개선되었으나, 장기 실업률은 증가하고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었다.

10) 빈곤가구(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간의 격차를 말한다.

- 2008년 실업률은 6.1%로 1981년의 7.6%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52주 이상의 장기 실업률은 1981년 5.7%에서 2008년 6.7%로 증가하였다.
- CIBC 일자리 질 지수로 측정된 일자리의 질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1.3% 하락하였다.
-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의 증가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이 늘면서 고용률이 1981년 60.1%에서 2008년 63.6%로 증가하였다.
- **핵심 사회 프로그램은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였다.**
 - 실질 복지수당은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네 가지 유형¹¹⁾ 모두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2008년 고용보험 제도가 1981년에 비해 복지수당 인증 기간, 혜택 범위, 혜택 기간에서 까다로워지면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 반면, 아동세금융자(Child Tax Credit)와 국가아동수당지원(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을 1990년대 중반에 도입하여 가난한 근로 가정에 추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이 그룹의 빈곤율을 다소 감소시켰다.
 - 1983년 평균 산업 임금의 35% 수준이었던 국가 최저임금이 2008년에는 42%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모두 199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 **경기 침체의 영향**
 - CIW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생활수준 영역의 상황은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1사분기에 매우 급진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가 캐나다인들의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 연구를 위탁한 상태이다.

11) 복지수당은 대상에 따라 단신, 장애인, 1자녀를 둔 한부모, 2자녀를 둔 부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3절

OECD 비회원국의 웰빙 측정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수]

제3차 OECD 세계포럼 3일차(10월 29일) 오전의 부문의회의 '웰빙 사회 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의 측정 사례(OECD 비회원국)' 세션¹⁾에서는 OECD 비회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 및 새로운 사회 발전 측정과 관련된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션의 주제인 웰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발전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 있다. 여기서는 GDP 등의 경제적 측면에선 가난할지라도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무척 높다고 알려진 부탄에서 개발한 국민총행복지수²⁾를 중심으로 본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면적 46,620km², 인구 60만 명 정도의 왕정국가인 부탄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부탄은 비록 GDP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빈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종교적 신념, 문화적 특성 등의 영향으로 국민 행복도가 무척 높은 국가이다. 부탄은 30여 년 전부터 국민 행복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설정하고, 발전 일변도의 세계화 추세를 피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등 나름대로의 통제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NH에 근거하여 국가의 프로젝트나 정책을 평가하고 추진하고자

1) 동 세션에는 Dasho Karma Ura(부탄 부탄학센터 소장; 발표), Xianchun Xu(중국 통계청 차장; 발표), Luay Shabaneh(팔레스타인 통계청장; 발표), Seeta Prabhu(인도 UNDP 수석 ACD; 발표), Byron Villacis Cruz(에콰도르 센서스연구소 국장;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2) 여기에 소개되는 GNH 내용은 부탄학센터의 'GNH Index' 논문과 GNH 홈페이지(www.grossnationalhappiness.com)에 게재된 핵심 내용만을 번역한 것이다. GNH는 최종적으로 단일 지수 형태를 취하지만, 여러 영역의 개별 지표들을 사용하여 합성하였으므로 문맥에 따라 GNH 지수(index)로, 때로는 GNH 지표(indicators)로 언급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1972년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그메 싱예 왕추크는 좋은 발전이란 한 사회에 행복과 웰빙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GDP를 근거로 한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을 비판하며 행복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개념을 제시하였다. 2005년 부탄연구센터(Center for Bhutan Studies)의 설립으로 GNH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2008년 11월 제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일 왕추크 대관식에서 GNH가 국가 지표로 채택되었다. 부탄이 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보다 앞서 행복을 국가 발전의 목표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부탄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 있는 독특한 불교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고립주의를 택하면서도 끊임없이 선진국이 겪어 왔던 발전의 장단점을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2. GNH 지수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지표들은 주로 시장거래, 무역, 환율, 주식시장,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GDP를 들 수 있으나, GDP는 오직 생산과 소비의 증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산출물의 특성³⁾에는 관심이 없다.

현재 활용되는 많은 발전 지표들이 GNH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탄정부는 부탄연구센터로 하여금 국민총행복 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GNH 지수는 최종적으로는 단일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여러 개의 개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부처별분과별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활용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GNH 지표들을 통하여 지표에 내포된 비전을 파악하고,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쉽게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GNH 지표는 행복과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며, 삶의 객관적·주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필요성(necessity), 바람직함(desirability) 등의 특성을 말한다.

3. GNH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

부탄연구센터는 부탄정부와 UNDP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GNH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목적으로 부탄의 도심지역, 외곽지역, 시골지역 등 총 9개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의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1인당 7~8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탄의 12개⁵⁾ 지역에서 총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가 너무 장황하다는 비판이 있어 본 조사에서는 만나질 정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간소화하였다. 설문지는 총 188개 문항으로 GNH의 가치와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을 다루고 있으며 객관적 질문과 주관적 질문, 개방형 질문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4. GNH 핵심 영역과 세부 지표들

부탄왕국의 목표와 부탄인들의 행복은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행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부탄은 행복이라는 말 속에 인간 웰빙의 모든 차원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수준, 건강,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시간 활용, 감정적 웰빙, 문화, 지역사회 생명력, 생태계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GNH 지수는 부탄 국민들의 행복과 웰빙을 보다 정확하고 심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행복과 웰빙의 요소가 되는 9개의 핵심 영역들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었으며, 9개의 영역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중요도는 동일하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9개의 각 영역 안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면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지표들을 여러 개 선정하였다. GNH의 영역별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이란 9개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성취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4) Paro, Chukha, Punakha, Trongsa, Bumthang, Mongar, Lhuentse, Sarpang, Thimphu로 총 9개 지역이다.

5) 부탄은 총 20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12개 지역(Dagana, Tsirang, Wangdiphodrang, Samtse, Zhemgang, Pemagatshel, Samdrupjongkhar, Tashigang, Tashiyangtse, Gasa, Haa, Thimphu)만 조사할 수 있었다.

〈표 1. GNH의 영역별 세부 내용 및 지표〉

영역	세부 내용	세부 지표 (예시)
심리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과 주관적 웰빙을 의미하며, GNH의 목적인 사회 전체의 행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핵심적 영역이다.	· 스트레스 지표 · 영성 지표 · 감정 균형 지표
시간 활용	삶의 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예로는 수면, 돌봄, 지역사회 참여,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 총 근로시간 지표 · 수면시간 지표
지역사회 생명력	지역사회 및 개인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파악한다. 신뢰, 소속감, 상호 관계에 대한 관심,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안전, 후원 및 봉사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 가족 활력 지표 · 안전 지표 · 상호 호혜 지표 · 신뢰 지표 · 사회 후원 지표 · 사회화 지표 · 친족 친밀도 지표
문화	부탄은 문화 전통의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문화 전통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 시설의 특성과 현황, 언어 사용의 다양성, 지역사회 축제 참여도 등을 조사하고 사회의 핵심 가치 및 전통의 변화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 방언 사용 지표 · 기초 인식 지표 · 가치 전달 지표 · 장인 기술 지표 · 전통 스포츠 지표 · 지역사회 축제 지표
보건	국민의 건강 상태와 결정 요인, 의료 시스템 등을 평가한다. 자가진단 건강 상태, HIV 감염과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의 확산 정도, 양·한방 의료시설까지의 접근 거리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 건강 상태 · 건강 지식 지표 · 보건 장벽 지표
교육	교육 성과 및 교육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웰빙 측면의 영향력과 효과를 평가한다.	· 교육 달성도 지표 · 지역 언어 지표 · 민속 및 역사적 문헌 해독 지표
생태계	천연자원 및 생태계, 생태 다양성, 복원력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와 공급이 부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단, 생태 다양성과 복원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은 다른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GNH 조사에서는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적 부분을 파악한다.	· 생태환경 악화 지표 · 생태환경 지식 지표 · 조림 지표(afforestation indicator)
생활수준	사람들의 기본적 경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구별 소득 수준, 재정적 안전도, 식량 안보, 주택 소유 등을 파악한다.	· 소득 지표 · 주택 지표 · 식량 안보 지표 · 곤궁 지표
좋은 거버넌스	정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효능성, 정직성 등의 질적 측면에서 평가한다. 인권, 정부 각 기관별 리더십, 서비스 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 관리 등에서의 정부의 성과나 언론·사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 정부 성과 지표 · 제도에 대한 신뢰 지표

5. GNH 지수 작성법

GNH 지수의 작성 과정은 크게 식별(identification)과 합산(aggregation)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식별 단계는 조사 대상별로 9개 영역에서의 충족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충족 기준선(sufficiency cutoff)이 필요하다. 충족 기준선은 지표에 따라서 최고 수준의 성취 정도로 설정되기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수준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충족 기준선을 어느 선에서 설정해야 하는가는 충분히 논의해야 하나, 정확한 기준선에 대한 설정이 어렵다고 해서 충족 기준선의 설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충족 기준선이 설정되고 나면, 조사 대상 별로 충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이때, 충족 기준선 이상의 성취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충족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 그는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간주할 뿐, 충족 기준선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충족 기준선이 적용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이 충족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충족 기준선 미만일 경우에는 충족 기준선과의 거리⁶⁾를 계산한 값을 가진다.

행복한 사람을 식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GNH는 연합 접근법(union approach)을 채택한다. 이는 9개 영역 중 한 영역에서라도 충족 기준선에 미달할 경우 GNH가 감소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 하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란 9개 영역 모두에서 충족 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식별된 개별 데이터를 합산하는 과정이다. 식별된 개별 데이터는 기준선으로부터의 제곱 거리 값을 가지게 되므로 이들 데이터를 모두 평균할 경우 국민총행복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게 되어 국민총행복은 아래 수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text{GNH} = 1 - \text{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제곱 거리}$$

6) 거리는 표준화(normalization)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거리를 제곱할 경우 충족 기준선에 미달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 GNH 작성 시에는 제곱 거리(squared distance)를 사용하였다.

표준화된 거리: $\frac{\text{충족기준선} - \text{실제달성도}}{\text{충족기준선}}$, 제곱 거리: $\left(\frac{\text{충족기준선} - \text{실제달성도}}{\text{충족기준선}} \right)^2$

6. 정책 및 프로젝트 심사 틀

GNH 지표가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탄연구센터는 정책과 프로젝트 심사 틀을 개발하여 GNH를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틀의 목적은 GNH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나 정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GNH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나 정책은 추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GNH 심사 틀은 ①모든 부처 및 영역을 위한 것(예: 좋은 거버넌스, 스트레스 정도), ②각각의 부처를 위한 것(예: 문화, 교육, 의료), ③개별 영역을 위한 것(예: 신체 활동, 청소년, 고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탄연구센터는 GNH 지표 9개 영역의 심사를 위한 질문 유형을 개발하였으며, 모든 프로젝트나 정책은 이러한 심사 틀에 의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정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 A에 대하여 스트레스 정도, 문화,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표 2-4>에 해당하는 3개의 점검 질문만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때 정책 A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중립적 점수인 9점을 받아야 한다.

$$\text{중립적 점수} = 3 \times \text{점검 질문 개수} = 3 \times 3 = 9$$

만약 점수가 9점 미만인 경우 정책 A는 재검토 또는 중단하게 된다. 정책 A가 스트레스 부문에서 4점, 문화와 신체활동 부문에서 각 3점을 받았다면, 합산된 점수는 4+3+3=10점으로 정책 A를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A는 문화, 신체 활동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스트레스 정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프로젝트나 정책들도 GNH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표 2. 정책 A에 대한 질문 유형 사례 - 스트레스>

① 대중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다.	② 대중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	③ 대중의 스트레스에 어떤 감지할 만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 대중의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1	2	3	4
부정	불확실	중립	긍정

〈표 3. 정책 A에 대한 질문 유형 사례 - 문화〉

①대중이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 배우거나 참여할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다.	②대중이 문화적 관습을 배우거나 참여할 기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 수 없다.	③대중이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을 배우거나 참여할 기회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대중이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 배우거나 참여할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1	2	3	4

〈표 4. 정책 A에 대한 질문 유형 사례 - 신체 활동〉

①대중의 신체 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②대중의 신체 활동을 방해할지 알 수 없다.	③대중의 신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④대중의 신체 활동을 장려할 것이다.
1	2	3	4

GNH 심사 틀은 프로젝트나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GNH 각 영역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프로젝트 개발에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을 취하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심리적 웰빙⁷⁾ 영역 선정 배경 및 조사 결과

부탄이 심리적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선정한 것은 기존의 사회경제 지표가 사회 발전이 인간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과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 지표들은 범죄, 이혼, 환경문제, 양성평등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치는 관계나 감정의 문제, 고립과 우울함 등은 표현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지표는 시장의 모습만을 나타낼 뿐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부작용과 역효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부탄은 심리적 웰빙 지표를 통해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심리적 웰빙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심리적 웰빙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즉, 국가가 생산성의 가치에 집중할 경우 국민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되고, 반대로 심리적 웰빙에 집중할 경우 국민은 자신들의 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 심리적 웰빙의 결정 요인

심리적 웰빙의 결정 요인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20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적 안정성(51.5%)과 도로 접근성(32.0%)⁸⁾이 꼽혔다. 그 외 교육, 농업 생산성, 전기, 토지 소유권 등이 고용, 스포츠, 여행보다 행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탄의 특성에 기인한다.

● 스트레스

행복을 느끼는 정도⁹⁾에 대한 조사에서는 평균 6.15로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85% 정도가 '적절하다' 또는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삶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부탄인의 58%는 그들의 삶을 '상당히 즐

7) 여기서는 GNH 지수의 9개 영역 중 심리적 웰빙 영역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사례로 제시한다. 이 영역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GNH의 목적을 가장 잘 집약하여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8) 부탄의 지형적 특성상 국경이 모두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1개 고속도로뿐으로 대부분의 가구들이 수송과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9) 10점 리커트 척도로 1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은 '매우 행복함'을 나타낸다.

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인구의 47%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부탄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영성

불교적 신앙심이 깊은 부탄에서는 심리적 웰빙의 요소로 영성(Spirituality)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 중 자신의 영적 수준이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무할 만큼 영성은 부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성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불경을 암송하거나 명상을 하는 빈도수, 절에 다니거나 가족들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빈도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대다수의 부탄인들이 영적 생활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불경 암송과 행복의 상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정

심리적 웰빙의 수준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기 때문에 평온함, 측은지심, 용서, 만족감, 관대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 화, 죄책감, 이기심, 질투, 실망, 슬픔,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탄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NH 지수 보고서는 노동시간이 긴 농부나 실업자 등과 같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용서의 감정을 갖지 못하며, 화 또는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표 1. 긍정적인 감정>

	자주	때때로	전혀	합계
평온함	16.67	58.86	24.47	100
측은지심	27.29	62.49	10.22	100
용서	20.93	61.72	17.35	100
만족감	17.65	61.51	20.82	100
관대함	28.71	61.62	9.67	100

<표 2. 부정적인 감정>

	자주	때때로	전혀	합계
화	6.31	67.09	26.60	100
죄책감	4.63	44.27	51.10	100
이기심	2.63	23.66	73.71	100
질투	1.37	19.56	79.07	100
실망	6.01	58.38	35.62	100
슬픔	6.53	55.16	38.32	100
좌절	4.63	55.52	39.85	100

● 인구학적 분석

현재의 행복 정도를 묻는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10점 척도에서 여성은 6.0, 남성은 6.25로 남성의 행복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현재 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을 묻는 5점 척도¹⁰⁾의 질문에서 여성은 3.21, 남성은 3.35로 남성의 삶의 질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고용 상태별로 살펴보면 학생(6.35), 근로자(6.25), 가정주부(5.92), 실업자(5.58)의 순으로 학생이 가장 높고 실업자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다. 일자리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실업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구조별 행복도(5점 척도)에서는 비혼(3.40)인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3.03)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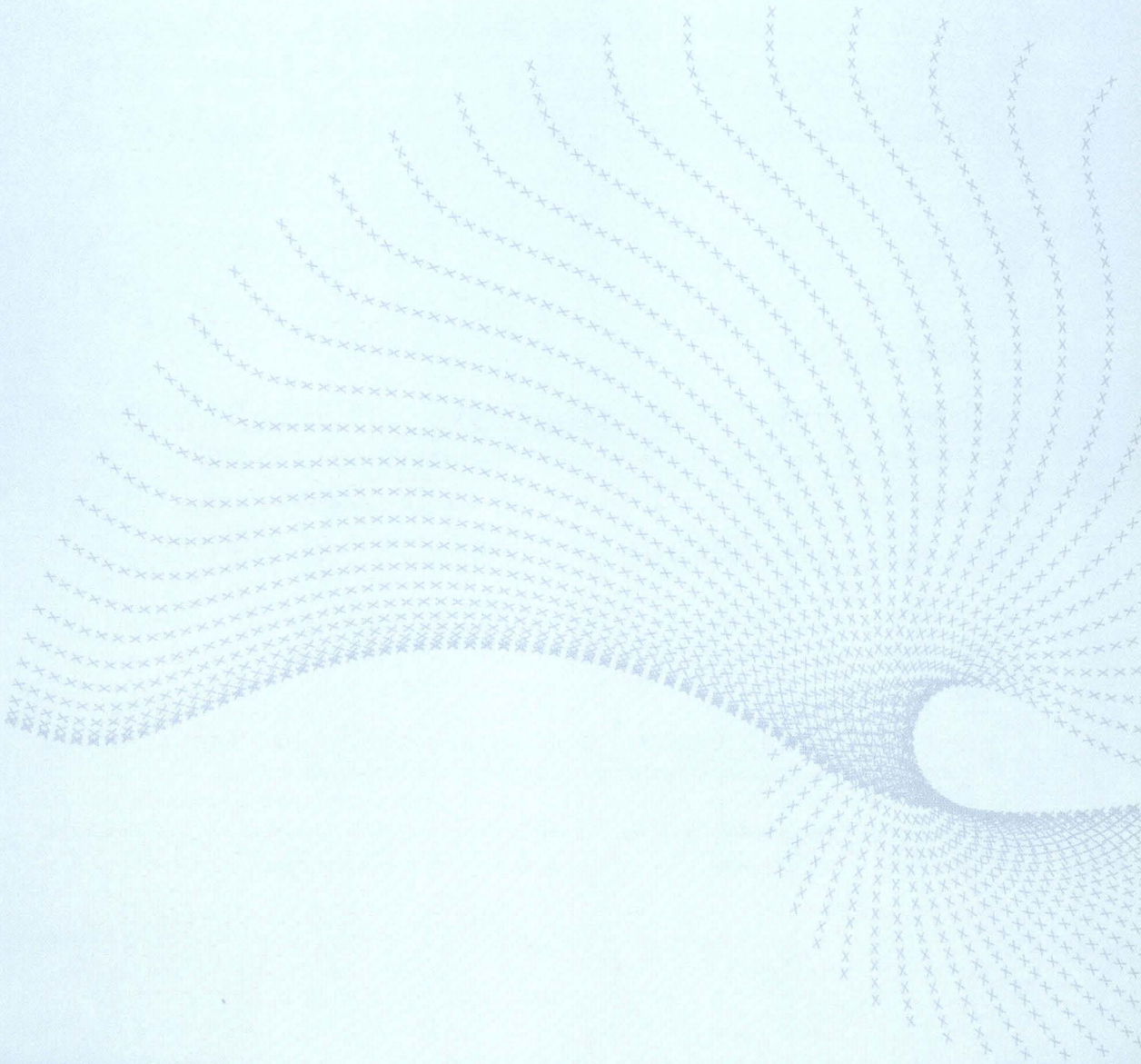
삶의 질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인 팀부가 삶의 질과 부정적 감정지수가 각각 3.58, 2.65로 타 지역¹¹⁾과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팀부의 경우 병원과 학교 등 사회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삶의 질은 다소 높은 편이나 인간관계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성 등에서는 만족도가 낮아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꼭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5점 척도에서 1은 “매우 낮음”을 5는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11) 타 지역의 경우 삶의 질은 3.11~3.4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은 1.83~2.47로 나타났다.

2장

발전으로 가는 길 - 미시적 접근



1 절

신뢰 측정과 형성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전의 부문회의 '신뢰 측정과 형성' 세션¹⁾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신뢰의 측정 방안 및 그 의의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동 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하는 존 헬리웰의 논문²⁾을 바탕으로 동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자본과 신뢰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인의 웰빙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 유형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장비 등의 물질 자본과 교육 수준, 기술력 등의 인적 자본이 있다. 하지만 물질, 인적 자본만으로 사회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제 성장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

1) 동 세션에는 John Helliwell(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Ben Rimmer(호주 총리실 차관; 발표), Tania Guzman(콜롬비아 UNDP 인간개발보고서; 발표), 김용학(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2) 여기서는 다음 2개 논문을 위주로 번역·요약하였다.

- John F. Helliwell & Robert D. Putnam(2005), "Social Context of Well-Being", In Felicia A. Huppert, Nick Baylis and Barry Keverne, eds. *The Science of Well-Being*(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35-459
- Stuart N. Soroka, John F. Helliwell, and Richard Johnston(2007), "Measuring and Modelling Interpersonal Trust", In Fiona Kay and Richard Johnston, eds., *Diversity, Social Capital and the Welfare State*(Vancouver: UBC Press, 2006). 95-132

구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과 관련된 무형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1993)³⁾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호혜적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려 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개인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속한 조직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신뢰(특히 타인에 대한 신뢰)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범죄율이나 탈세, 부정부패가 적으며, 아동 복지, 공공보건 등 사회간접자본의 질이 양호하고 정부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의 경제성과 및 교육성과도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신뢰가 형성된 사회라야만 경제적 효율성과 삶의 만족도나 사람들의 웰빙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다. 즉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서 핵심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2. 캐나다의 ESC 조사⁴⁾

우슬라너(2002)⁵⁾는 신뢰를 도덕적 신뢰(moralistic trust)와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로 구분하였는데, 도덕적 신뢰가 타인들에 대한 일반적 믿음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전략적 신뢰는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타인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슬라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뢰를 측정하였으나, 그의 연구는 전략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의 질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측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비교 가능한 대안 측정법의 부재로 보다 자세한 신뢰 관련 응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평등·안전·지역사회 조사(Equality, Security and Community Survey, ESC 조사)를 활용하여 신뢰를 측정하고, 질문 내용에 따

3) Putnam, Leonardi and Nanetti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USA.

4) 캐나다 요크대에서 1999년~2000년에 걸쳐 실시한 '평등·안전·지역사회 조사(Equality, Security and Community Survey, ESC 조사)를 근거로 한다. 동 조사는 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태도, 웰빙과 정책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중 '신뢰' 부문이 별도의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다.

5)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른 영향 등을 분석한다.

‘당신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반세기 동안 신뢰를 측정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기본 질문만으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 신뢰에 관한 연구는 신뢰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상황적 결정 요인이나 신뢰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과 실제 행동과의 연관 관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질문이 실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신뢰 측정을 위한 질문에 있어 응답자가 개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도덕적 경향을 바탕으로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제시되어야 하며, 타인 중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신뢰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 질문뿐만 아니라, 200달러가 든 지갑의 분실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시하여 신뢰를 측정하는 질문들을 함께 비교하였으며, 캐나다의 특성에 맞는 여러 독립변수들을 고려하여 신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ESC조사에서는 질문 유형을 크게 일반 상황과 특수 상황으로 구분하고, 일반 상황에 대해서는 균형효과(balance effect)와 묵인효과(acquiescence effect)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균형효과는 상반된 상황을 함께 질문함으로써 균형적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며, 묵인효과는 하나의 상황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의 질문에서 Q1이 신뢰와 불신에 대한 응답자 간의 비교적 균형 있는 분포를 이끌었다면, 균형을 맞추지 않은 Q2~Q4의 질문들은 상당한 묵인효과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답변의 차이는 묵인효과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문 Q2와 질문 Q3에 대한 응답 차이는 질문 내용의 미묘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Q3에 동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 Q2에 대한 동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정 신뢰 전략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Q3과 Q4에 대한 응답 결과의 차이도 질문 내용의 미묘한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표 1. ESC 신뢰 측정 관련 질문 유형 및 응답 결과〉

질문유형		불신	중립	신뢰	총계
		(%)			N
일반 상황	Q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까?	42,8	4,4	52,7	4,485
	Q2.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동의 또는 동의 않음)	14,2	2,9	82,8	6,557
	Q3.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22,7	3,5	73,8	3,540
	Q4.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68,0	4,4	27,6	3,465
특수 상황	Q5. 만약 20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까운 이웃이 발견했을 때 200달러가 포함된 지갑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은?	13,3	38,6	48,1	6,408
	Q6. 만약 20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렸을 경우,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료품가게 점원이 발견했을 때 200달러가 포함된 지갑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은?	9,5	33,3	57,3	6,413
	Q7. 만약 20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관이 발견했을 때 200달러가 포함된 지갑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은?	5,5	23,1	71,3	6,412
	Q8. 만약 20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렸을 경우, 완전히 낯선 사람이 발견했을 때 200달러가 포함된 지갑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은?	39,3	49,8	10,7	6,380

질문 Q5~Q8은 200달러가 든 지갑의 분실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의 신뢰 대상을 ①가까운 이웃, ②식료품가게 점원, ③경찰관, ④낯선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다. 질문에서 강제적인 메커니즘이나 보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Q5~Q8의 응답 결과, 신뢰 정도는 경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식료품가게 점원, 가까운 이웃, 낯선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 상황 하에서의 응답 결과는 일반 상황에서의 응답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지갑 분실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60%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이들의 일반 상황에서의 신뢰 정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신뢰 대상이 경찰관인 경우 다른 신뢰 대상에 비하여 양자 간의 변별력이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황에 상관 없이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일반 상황과 특수 상황에서의 응답 관계〉

특수 상황 -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일반 상황	
		사람을 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이웃	돌려줄 확률 : 무	65.5% (359)	34.5% (189)
	돌려줄 확률 : 유	34.5% (688)	65.5% (1,307)
점원	돌려줄 확률 : 무	66.8% (268)	33.2% (133)
	돌려줄 확률 : 유	36.6% (879)	63.4% (1,522)
경찰관	돌려줄 확률 : 무	65.5% (146)	34.5% (77)
	돌려줄 확률 : 유	39.7% (1,192)	60.3% (1,811)
낯선 이	돌려줄 확률 : 무	60.8% (996)	39.2% (643)
	돌려줄 확률 : 유	27.6% (124)	72.4% (325)

3. 신뢰 모형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일반 상황과 특수 상황에서의 신뢰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의 모형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은 일반 상황에서의 신뢰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형 1은 인구 변수 등 국내적 요인들로 구성되며, 모형 2는 모형 1에 국가 차원의 신뢰를 추가하였고, 모형 3은 모형 2에 네트워크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형 2에서는 국가 차원의 신뢰에 대한

〈표 3. 일반 상황에서의 신뢰 모형〉

모형	범 주	세부 독립 변수
모형1	인구통계학	성, 연령(30-49, 50-65, 66 이상), 교육 정도(고졸, 전문대학/대학 중퇴, 전문대학/대학 졸업), 종교(가톨릭, 개신교), 불어 사용자, 이민자, 건강
	인종	소수 인종(visible minority)* 여부, 소수 인종 비율, 상호작용
	경제	경제 전망, 가구 소득 중앙값, 소득 다양성
	기타 상황	교육(고졸 이상), 유동성(5년 이상), 인구 밀도
모형2	모형1	모형1의 세부 독립변수
	국가적 신뢰	이민자의 출신국에 대한 신뢰,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신뢰
모형3	모형2	모형2의 세부 독립변수
	네트워크	이혼, 가족 · 친구 · 이웃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지 여부, 종교 · 인종 · 기타 모임

* visible minority는 캐나다 원주민이나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며, 여기서는 간단히 소수인종으로 하였다.

자체 분석뿐만 아니라 국가적 신뢰 변수들이 인종적 변수나 이민 상태에 대한 초기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등의 국내적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일반 상황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뢰성 있는 행동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사고한다. 셋째, 교육은 시민 행동 양식을 고양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도덕적 기준에서 신뢰를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며, 지역의 자원 봉사단체에 대한 참여를 향상시킨다.

-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francophone)⁶⁾은 신뢰가 낮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별로 잃어버린 지갑의 실제 회수 여부에 대한 예측치를 조사한 내크의 연구⁷⁾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실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은 건수로는 프랑스가 유럽 평균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신뢰에 대한 평가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가 캐나다인들의 신뢰 경향에 중요한 요인이라면, 신뢰를 측정할 때 캐나다로 이민한 초기 이주 세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민자들이 캐나다 태생들보다 덜 신뢰한다.**

이는 이민자와 토착민 사이의 인종적 차이를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신뢰에 담긴 의미는 그것이 캐나다인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출신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민 1세대의 경우는 출신국에 대하여 캐나다인들보다 신뢰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민 2세대 이후로는 출신국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는 캐나다가 다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민자들이 캐나다 지역사회에 보다 빠르게 흡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어를 말하는 사람, 특히 모국어로 불어를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공식 언어로 영어와 불어를 쓰는데, 특히 퀘벡 주와 뉴브런즈윅 주가 불어권이다.

7) Knack, Stephen (2001), "Trust, Associational Lif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ontribution of human and social capital to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well-being, pp172-202. Ottawa: HDRC

- 네트워크는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회원 간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때문에 대인간의 신뢰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뢰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단체 활동을 통해 신뢰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단체 활동이 개인의 신뢰 성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높은 신뢰 성향이 단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트워크의 각 유형별 멤버십에 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종교와 인종에 관련된 멤버십은 다른 유형의 멤버십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종교와 인종에 관련된 멤버십은 로버트 퍼트넘의 연결형 및 결합형 사회자본(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⁸⁾ 정의에 기초하여 결합형의 성향이 강한 반면, 다른 그룹은 연결형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 상황에서의 신뢰에 대한 결과는 일반 상황에서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일반 상황과 특수 상황에서 신뢰는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 상황에서 신중성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질문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신뢰만 언급된 비균형적 질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신중함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 상황의 질문은 신중함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찰관, 점원, 이웃, 낯선 사람 중 이웃을 제외한 나머지 신뢰 대상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인구 밀도와 유동성은 일반 상황보다 특수 상황에서 더 의미를 갖는다.

일반 상황보다 특수 상황에서 지역사회 변수가 더욱 유의해졌는데,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만큼 높았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의 경우 대개가 소규모이고 고립되어 있어 주민들은 이웃, 경찰, 지역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낯선

8)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연결형과 결합형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연결형(bridging)이란 다른 축구팀의 팬클럽과 같은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생기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며, 결합형(bonding)이란 또래나 같은 인종, 같은 종교 등과 같은 사회화과정의 동일한 특성들 사이에 생겨나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다른 곳에 비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표본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지갑을 누가 발견하든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높은 인구 밀도와 유동성을 가진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웃을 알고 있을 확률이 더 낮으므로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더 낮을 것이다. 이렇듯 인구 밀도와 유동성은 일반 상황보다 특수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일반 상황에서보다 특수 상황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이웃, 경찰관, 낯선 사람에 의해 발견될 때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이웃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갑을 발견했을 때 되돌려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일반 상황에서보다 특수 상황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 **소수 인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경찰관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수 상황에서 인종 관련 변수들은 색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소수 인종의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수로 나타나, 이들의 불신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경찰에 대해서도 낮은 신뢰 계수를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는 응답자 자신의 소수 인종 여부와 함께 지역의 소수 인종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지역에 소수 인종 비율이 증가할수록 주류 인종들은 불신도가 높아지는 반면, 소수 인종들은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소수 인종 비율이 지역 거주민들의 60퍼센트가 될 때 주류 인종과 소수 인종의 신뢰도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트워크 영향은 일반적 상황에서보다 특수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웃을 만나는 것은 이웃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낯선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경찰관, 가게 점원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반 상황에서 강력한 네트워크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종교 집단의 영향력이 특수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네트워크 영향력이 약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활동 계수의 대조적 결과는 신뢰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일반 상황에서의 질문 내용과 도덕적 전제와의 연계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 시사점

ESC 연구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일반적 신뢰에 대한 측정은 문화적 학습 효과를 반영하는 반면, 지갑을 잃어버린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신뢰에 대한 측정은 경험에 근거한 응답자들의 전략적 기대와 신뢰에 대한 지표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 신뢰는 교육, 출신국, 문화-종교에의 참여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신뢰나 불신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지역사회나 이웃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였는데, 이에 근거할 때 일반적 신뢰는 개인이 학교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갑을 잃어버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웃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소규모의 응집된 지역의 거주자들은 특이하게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이웃 간의 밀집도, 유동성, 평균 교육 수준 등 대인간 신뢰 형성 요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신뢰에 대한 응답자의 경험과 크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화된 신뢰의 경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양성의 효과이다.

민약 어떤 사람이 피부색 등이 눈에 띄는 소수 인종으로 주류 인종이 대다수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주류 인종에 비하여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이웃이 지갑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신뢰 정도가 낮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불신한다. 그러나 그 동네에 소수 인종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수 인종의 신뢰도는 증가하는 반면, 주류 인종의 신뢰도는 점차 낮아진다.

한편, 이러한 신뢰 분석으로 예상 밖의 또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지갑 관련 질문은 집단의 내재된 적대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주민의 분포⁹⁾로 인해 완화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화된 대인간의 신뢰의 영역에 있어 캐나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비록 캐나다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의 신뢰가 그들의 출신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하더라도, 이러한 출신국에 따른 영향은 이민 1세대 이후 세대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캐나다인들의 출신국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캐나다의 규범을 받아들

9) 주류 민족은 이웃의 대다수가 주류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눈에 띄는 소수 민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도록 해야 한다. 출신국의 차이가 이민자들과 토착민 간의 모든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출신국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캐나다로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캐나다 태생보다 일반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2절

빈곤에서 권력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능한 정부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전의 부분회의 '빈곤에서 권력으로' 세션¹⁾에서는 가난의 굴레에 속박되어 빈곤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션의 주제인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영국의 민간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인터네셔널(Oxfam International)²⁾의 대표인 던컨 그린의 저서 「빈곤에서 권력으로(From Poverty to Power)」³⁾에서 따왔으며, 이 책은 국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 및 빈곤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향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빈곤에서 권력으로」요약 자료⁴⁾를 통해 본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유추하고자 한다.

1. 불평등한 세계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은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난제들이다.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가난, 기근, 질병 및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0명의 소득이 4억 1천 6백만 극빈자들의 소득보다도 많다. 또한 선진국에서 무

1) 동 세션에는 Duncan Green(영국 옥스팜 대표; 좌장), Sabina Alkire(영국 옥스퍼드 빈곤-인간개발이니셔티브 국장; 발표), Andrea Brandolini(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구조·노동시장 부장; 발표), Pedro Conceicao(UNDP 개발학 국장;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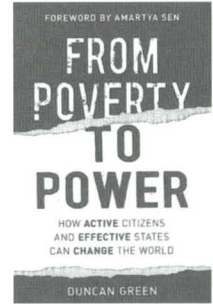
2) 옥스팜은 1942년 영국에서 처음 결성되었으나 현재는 옥스팜 인터네셔널이란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국제구호단체로 성장하였다. 빈곤과 부당함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00여 개국, 3천 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3개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다.

3) 2008년 옥스팜 인터네셔널에서 'From Poverty to Power'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책은 옥스팜이 지원하는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국가 및 기구들의 경험 및 많은 개발 분야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에 근거하여 저술되었다.

4) Duncan Green(2008), "From Poverty to Power :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Summary, Oxfam International

분별하게 배출하는 탄소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세네갈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극빈 가정의 경우 부유한 가정보다 2-3배 높게 나타난다. 브라질에서는 중남미 흑인계가 백인계에 비하여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2배가량 높으며,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 Uttar Pradesh와 Bihar 지역에서는 카스트 제도하의 남아 및 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77%, 60%에 이르나, 불가촉천민⁵⁾ 계층의 여아의 경우 37%에 불과하다.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모든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인권을 존엄성을 가지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아상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 기회, 재산의 재분배와 같은 글로벌 뉴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결책 없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이 점차 커지는 세상,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확연히 분리되는 이원적인 세상으로 변하여 대륙 간, 국가 간, 지역 간에 소외된 집단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일례로 현재 자카르타, 마닐라, 나이로비의 빈민층에서 지불하는 물의 단가는 같은 도시 내의 부유층이 지불하는 단가보다 5-10배 정도 높고, 런던이나 뉴욕의 시민들이 지불하는 단가보다도 높다. 이러한 반유평등적 사회는 스스로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상위층(upper)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특권의 문턱을 배회하는 하위층(lower)을 배척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적극적인 시민과 유능한 정부

세계 100여 국가 이상에서의 옥스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언급한 재분배 정책은 적극적인 시민과 유능한 정부의 조합을 통해서 가장 잘 실행될 수 있다.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

5) 인도의 카스트는 브라만(승려), 크샤트리아(왕이나 귀족), 바이사(상인), 수드라(피정복민 및 노예, 천민) 등 4개로 구분하지만 최하층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신분 계층을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라고 한다.

는 존엄성이 보장되고, 정부와 기업 등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행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정의와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늘날 한 국가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유능한 정부는 왜 중요한가? 이는 발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없이 그 어느 나라도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 베트남, 한국, 태국,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과 같은 국가에서 경험한 현저한 사회 발전은 정부가 해당 국민들의 보건과 교육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에 가능하였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국가를 예술 작품으로 묘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고안된 훌륭한 헌법과 정부는 인간의 문명에서 가장 정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미술, 음악, 철학 또는 시와 견줄 수 있다고 하였다.

3. 21세기를 위한 경제학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고파는 노동, 재화, 용역 등의 시장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된다. 시장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권력의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국제 사회 등 모든 차원을 망라한 시장에서의 권력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장만으로는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능한 정부와 적극적인 시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고, 가사노동과 같이 여성들에게 만연된 무급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며, 빈곤 및 불평등 퇴치를 목표로 하는 21세기를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의 권리와 웰빙을 경제학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4. 리스크와 취약성(Vulnerability)

빈곤한 삶은 저임금과 근심으로 특징된다.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 실업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지진, 분쟁과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에 더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보(security)에 대한 의미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은 국방 안보 또는 군사 안보와 같은 관점 대신,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인간 안보란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생 조직을 지원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인간 안보를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금이나 기초소득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빈민 가정과 지역사회가 자연재해분쟁 등의 충격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극빈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5. 국제 사회 제도

역사는 성공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혹한 변화가 주로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임을 보여 주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유 국가나 사회, 기업들의 책임은 막대하다. 불평등한 글로벌 지배구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 자본 흐름, 이주, 분쟁, 무역 및 투자와 같은 전 세계적 이슈에 있어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 있어서 강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그들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유능한 정부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하여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체적으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대국은 자국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무기 거래, 인력지식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기업 부패, 무역 및 자본시장의 강제적인 자유화, 비상식적인 탄소 배출량과 같은 유해한 활동들을 단속해야 한다. 이러한 '유해 활동을 중단하자'는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과 그들 지역사회가 벌리는 투쟁과 연대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외 원조에 있어 양적질적 확대를 내포한다.

20세기 이전이 노예제도나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되듯이, 21세기는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에 대한 투쟁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투쟁이 실패한다면 후손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그들은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불필요한 부당함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6. 네 가지 성공 사례

1) 모로코, 여성의 권리 획득

가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모로코 의회는 한때 절대 불가침으로 알려진 이슬람 가족법(Moudawana)⁶⁾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은 법적인 독립성을 획득하고 결혼, 이혼, 양육, 가족관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 권리 획득을 위해 수십 년 간 여성단체들이 노력해 온 결과로, 특히 지난 2000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의 시위를 벌인 것이 전환점이 되어 이룬 쾌거였다. 당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모로코의 국왕 모하마드 6세는 40명의 시민사회 단체 여성 지도자들로 하여금 시민들과 타협하게 하고, 주요 여성 인사 3명을 가족법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로도 몇 년간 시민운동가들은 왕립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로비 활동과 대규모 시위 및 공공 캠페인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로코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미래 개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AIDS 치료 활동 캠페인

남아공의 '치료 활동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은 1만 5천 명 이상의 HIV 양성반응 보유자 단체로 인구의 약 20%가 HIV 보균자인 남아공 내에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6) Moudawana는 이슬람 정신에 충실한 모로코의 가족법이다. 2004년 모로코 정부는 '여성을 영원한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남성의 권위 아래에 둔' 옛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결혼 연령 하한선을 15세에서 18세로 올리고, 일부다처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남성 위주의 이혼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성의 권한과 인권이 신장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공이 저렴한 복제약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TAC는 HIV에 효과를 보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약물의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다. TAC는 ARV 수입법과 관련하여 남아공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불평등한 정책에 맞서 대항하고, 남아공 정부 안팎으로 광범위한 연맹을 구축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일련의 법적 다툼을 벌여 승리를 일궈냈다.

TAC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ANC의 정책을 규탄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TAC가 다른 캠페인들과 달랐던 점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민주적 질서와 절차를 준수하고 수용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3) 인도, 국가농촌고용보장법 캠페인

인도 농촌의 주민들은 2005년 국가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NREGA)에 따라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인도의 라자스탄 지방의 가뭄과 생활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당시 인도의 시민단체들은 기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식량 배급 및 고용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었다.

시민사회가 주도한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캠페인의 성공으로 당시 '권리 기반(right-based)' 접근 방식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인도 의회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고용 보장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야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고용 보장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재정부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농촌고용보장법을 지지하는 시민 캠페인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빈곤층의 적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비록 정부와의 타협이 불가피하였으나, 시민 사회의 정치적 로비와 공공 캠페인의 결과로 잠재 가능성 높은 최종 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볼리비아, 치키따노 원주민들의 혁명

25년 전 볼리비아의 치키따노(Chiquitano) 원주민⁷⁾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된 상태에서 지주를 위하여 무보수로 일하는 등 거의 봉건제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2007년 수년간의 투쟁 끝에

7) 치키따노 원주민들은 원래 볼리비아의 엘차코(El Chaco) 지역의 반습윤 산림지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으나, 19세기에 볼리비아 정부가 동쪽 저지대를 식민지화하면서부터 정부로부터 차별과 배척을 당해 왔었다.

그들은 몬테베르데의 토착 영토에 대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차키파노 원주민들이 토착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계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1995년 최초로 영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요구하였고, 이후 수년에 걸친 거리 집회 같은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를 의회에 알렸으며, 볼리비아 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저항의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대통령 탄핵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2005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7년 영토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3 절

국가통계인의 역할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후의 부문의회의 ‘국가통계인의 역할’ 세션¹⁾에서는 사회 발전 측정에 있어 국가통계인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이재형 전 통계개발원장(현 KDI 연구위원)의 원고²⁾를 통하여 국가통계인의 역할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사회 발전과 국민 욕구의 다양화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혹은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볼 때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외적의 침략, 집안의 위기 등 외부로부터 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주인공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막상 그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행복이 찾아온 시점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된다. 동지들이 분열되어 시기하고 싸우고, 형제자매가 반목하며, 삼각관계, 사각관계로 부부 사이가 갈라진다. 건국공신 한신과 장량이 팽(烹) 당하고 집안 내에 살육이 벌어진 한고조 유방(劉邦)의 비극이나 조선 초 이씨 왕가의 골육상잔도 건국이란 필생의 대업이 완성된 후에 벌어진 일이다. 목표의 성취가 불행의 출발점이 되

1) 동 세션에는 Shaida Badiee(세계은행 이사; 좌장), Eduardo Sojo(멕시코국가통계지리정보연구소 대표; 발표), Pieter Everaers(Eurostat 환경통계국 국장; 발표), Pronab Sen(인도 통계청장; 발표), Geoff Bascand(뉴질랜드 통계청장; 발표), Martin Balepa(AFISTAT 사무총장; 발표), 이재창(고려대학교 교수, ISI 차기 회장; 발표)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2) 동 원고는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집필자의 개인 의견을 밝혀둔다.

는 이러한 비극은 동서고금,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 가족 등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행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가? 인간이나 사회 자체에 본질적인 결함이 존재하는가? 아마 이 문제는 외부 환경에 대응한 인간 욕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부로부터 큰 위협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인간 욕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된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 배고픈 보릿고개 시절 보리밥 한 덩이 먹는 것, 돈이 없지만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굶지 않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가 극복되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결국 서로 충돌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과 전쟁, 그리고 가난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지난 50여 년 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소득은 수십 배 이상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사회 환경이나 교육 여건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무어라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우리의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다양해진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우리들이 가졌던 욕구는 많이 별고, 잘 먹고, 잘 입고 등 아주 단순하고 단선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욕구도 점차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다양성을 갖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2.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복잡다양해진 국민들의 욕구를 누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욕구도 많지만, 국가가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효율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즉, 개인의 인센티브 체계에 의해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개인에게 위임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회 환경”이라는 재화가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효

과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가 공급할 것인가 민간이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개인의 비용 부담과 사회적 효용이 일치하지 않아 민간에 맡겼을 때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예를 들면 산책로, 공원 등)나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소위 “가치재”(예를 들면 인권, 의무교육 등)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가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어떤 수요가 존재하는지, 또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의 여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의 통계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GDP와 같은 경제 지표로 표현되는 양적 위주의 발전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행복하고 충실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과 측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통계 정보 지표를 사회지표라 하며, 우리나라도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사회지표는 국민 생활 및 사회 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부터의 측정이기 때문에 그 종류는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부분을 전부 포괄할 수는 없으며, 정부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부분부터 관찰하고 측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그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 정부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잘되고 있는 사회, 잘사는 사람들보다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사회의 어두운 부분 등에 대해 중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고, 선진국들도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발전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발전 측정에 대한 통계는 “우울한 보고서”(Gloomy Report)의 속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이 미흡한 사회일수록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회 발전 측정 결과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 발전, 진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통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왜 국가통계인가?

현대 사회에서 통계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되지만, 그 생산은 반드시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많은 통계 정보를 생산하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중요한 정책 정보로서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야, 특히 사회 발전의 측정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국가통계인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가 통계, 그리고 국가통계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정부와 민간이 필요로 하는 통계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국민 전반에 관한 통계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민간에서 공급되기 어렵다. 민간은 주로 기업 활동의 기초 정보로서 통계를 작성하나, 이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의료 수요와 공급 실태를 알고 싶어 하지만, 민간은 자기가 병원을 설립하여 충분한 채산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둘째, 통계는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대한 수요를 국가 전체로 합하면 매우 크지만 개개인으로서의 자기가 비용을 들여 스스로 통계를 만들어야 할 만큼 절박하게 수요가 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담당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양의 통계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셋째,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한다고 해서 조사를 포기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한을 갖는 것은 정부이다.

넷째, 통계의 중립성 견지를 위해 국가 기능이 필요하다. 통계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전반으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기관이 작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국가 안에는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립성을 갖는 것이 국가(정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란 국가 전체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이라 해서 반드시 중립성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 통계 작성기관에서 국가 통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가통계인의 자세와 능력

사회 발전의 측정을 포함한 국가 통계에 있어서 국가 기관과 국가통계인의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국가통계인은 어떠한 자세와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국가통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지적하고 싶다. 이 세 가지 능력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객관성은 현실의 사회 현상(fact)에 대해 일체의 가치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측정·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해 집단에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통계 행정에서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될 때 국가통계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국가통계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통계인의 역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를 전달하는 선에서 책무가 완수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정책 대응은 다른 정부기관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립성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객관성이 반드시 중립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인들의 중립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비로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립적인 기관이 통계를 작성하여야만 그 객관성도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저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통계 기관, 통계인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통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정보의 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국가에는 반드시 중립성을 견지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중립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 법원이나 감사원, 언론 등이 그 대표적 기관일 것이다. 그러나 통계 기관이 견지해야 하는 중립성은 이들 기관의 중립성과는 차별화된다. 예를 들면 법원의 중립성이란 “중립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하지만, 통계 기관이나 통계인의 중립성은 “가치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이란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 통계 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통계의 작성은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또 여러 이익 집단, 심지어는 정

부기관으로부터도 통계인들의 중립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통계인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때 비로소 이러한 그룹들과의 정당한 토론이 가능하고 통계 작성기관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가통계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결국은 객관성도 중립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발전의 측정을 위해서 국가통계인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사회 발전 측정 지표와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능력을 개개인이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 및 계층, 그리고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통계인들과 교감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절

국제보건원조 현황

[세계 보건 자금 조달 : 보건개발원조 추이]

제3차 OECD 세계포럼 3일차(10월 29일) 오전의 부문의회의 '보건' 세션¹⁾에서는 보건과 관련하여 정책과 인간 행동 양식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증거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증거를 활용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를 고찰한다. 그리고 보건과 관련하여 간과하고 있는 증거와 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보건지표 판정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²⁾에서 발간한 「2009년 세계 보건 자금 조달 : 보건개발원조 추이」 보고서³⁾의 개도국 보건 개선에 대한 주요 흐름을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유추하고자 한다.

1. 세계 보건 자금 조달 개요

개도국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개도국의 보건을 개선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 개도국의 질병에 대한 부담은 매우 높은 데 반하여, 이들

- 1) 동 세션에는 Christopher Murray(미국 워싱턴대학교 및 보건지표 판정연구소 교수; 좌장), Steve Lim(미국 워싱턴대학교 조교수; 발표)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 2)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지표판정연구소(IHME)는 세계 보건 상태와 의료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보건 분야의 개입, 발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7년에 개소하였다. 이 연구소는 BMGF(Bill&Melinda Gate Foundation), 워싱턴 주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다. IHME는 세계 보건 상태와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체들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세계 보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3) 여기서는 IHME에서 발간한 「Financing Global Health 2009: Tracking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는 개도국의 보건 부문의 원조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핵심 질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 지출과 관련하여 보건개발원조(DAH)와 공공 및 민간 부문별 지출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2009년 보고서에서는 DHA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서 정부 보건 지출과 민간 보건 지출 관련 정책보고서가 2-3년 내에 추가로 발간될 예정이다.
- 4) 개발도상국이란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 구분에 의해 분류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을 말한다.

국가가 세계 보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개도국의 보건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한 보건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DAH)⁵⁾도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개도국의 보건 개선을 위해, MDGs의 8개 추진 목표 중 3개를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정하였다.

보건 정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세계 보건의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 보건 발의와 각국의 보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데, 현재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원조하는 보건 지출금을 나타내는 국민보건계정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HO에서는 1998년부터 국민보건계정 작성을 개도국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중요한 노력이지만, 보건 지출을 측정하는 방법과 데이터의 활용성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IHME에서는 보건에 투입되는 보건개발원조(DAH)와 정부 및 민간 지출 부문의 주요 자금 조달 추이를 검토하고 있다.

● 보건개발원조(DAH)

개도국의 보건시스템에서, 기부금과 같은 외부 원조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러한 외부 원조의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그 특성과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 보건 커뮤니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IHME는 1990년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비교 가능한 DAH 추정치를 매년 산출하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와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DAH 연구는 다음의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보건원조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주는가?
- 다양한 질병 분야, 간접 유형, 지역을 망라한 세계 보건 재원 분포를 통해 현 세계 보건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제시하는가?
- 원조를 추적하는 정보시스템은 투명한가? 그리고 이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며, 표준화시킬 수 있는가?

● 정부 보건 지출

개도국들의 보건시스템에 대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입과 외부 자금 모두를 고려

5) 보건개발원조(DAH)는 개도국의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현금 또는 현물 기부를 말한다.

하여 정부 지출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HME는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정부 보건 지출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타당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발원조와 국민보건계정 간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의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 1달러의 외부 원조가 다양한 수령 국가들의 정부 보건 지출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가?
- 정부는 보건 부문의 해외 원조 때문에 국내 자금을 재배치해야 하는가?

● 민간 보건 지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대부분 개도국의 총 보건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개인을 경제적 파국으로 치닫게 하거나 해당 가정을 빈곤층으로 내몰기도 하는데, 개도국들은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의료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 보건 지출에 대한 비교 가능하고 정확한 추정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IHME는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민간 보건 지출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보건개발원조(DAH) 측정 연구

개발원조에 대한 비용 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DAH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 부문의 외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DAH의 규모와 영향력이 거의 분석되지 못했었는데, 이는 DAH를 규정하는 개념적 문제와 측정의 어려움으로 DAH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개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재원 추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즉, 원조 재원, 원조 형태 등의 보건 관련 원조 내역을 파악하고, 외부 원조를 받는 국가 등 그 고려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DAH의 자금 흐름 측정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측정하는 데는 실제로 수많은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세계 보건 자금의 흐름에 대한 기존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⁶⁾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보건 부문의 원조만을 반영하므로 모든 외적 원조를 파악하지 못하며, 연간 지불금과 보조금 수령 기관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세계 민간단체나 NGO에서 지원하는 보건 활동에 대한 질적 정보도 부족하며, 원조를 받는 기관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기금이 중복 산출되는 등 정확한 보건 원조 자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DAH에서 규정되어야 할 개념과 측정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보건 재원을 추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보건 원조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1) DAH의 개념 규정

● 원조 기관

DAH를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 기관들을 세계 보건원조 채널이라 하며, 그 관련 기관은 <표 1>과 같다

● DAH의 자금 흐름

<그림 1>은 DAH의 기구별 양상과 어떻게 자원이 보건원조 채널들을 통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단순화한 것이다. DAH의 자금 출처로는 기부국의 재정 부처, 상환 대부금, 민간 자선단체나 기업 등이 있다. DAH의 원조 채널은 원조 기금을 보건 프로그램과 연구 수행기관으로 교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DAH의 지원 대상은 개도국들의 보건 부처나 지역 NGO, 선진국의 세계 보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다양하다.

DAH의 원조 채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양자 간 개발원조기구의 경우 자금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행 기관과 타 원조 채널에 원조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재단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으

6)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DAC)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기구로 1960년 설립되었다.

〈표 1. 세계 보건원조 채널〉

세계 보건원조 채널	기관
양자 기구	다른 정부 및 비정부 활동 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영국 국제개발부(DFID) 등 OECD-DAC의 22개 회원국
민간 기관	보건 프로그램과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보건기관들에게 기부하는 민간단체들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BMGF) 등
	정부, 기업,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보건 프로그램과 연구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국제 NGOs
다자 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수령한 자금으로 보건 영역의 재정 원조, 기술 원조, 프로그램 코디네이션, 질병 감시, 정책 안내를 제공하는 UN 산하기구들 - 세계 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국제연합 HIV/AIDS 합동프로그램(UNAIDS),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전 세계 기부 국가들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하고, 모집한 재원으로 개도국의 재정 및 기술을 원조하는 기관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유럽집행위
민·관 협력체	새롭고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특정 질병에 대하여 지원하고 세계 보건 발의를 하는 민·관 협력체 -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GFATM), 국제백신·면역연합(GAVI) 등

※ 사용된 약자는 다음과 같다.

- DFID :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GFATM :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 GAVI :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그림 1. DAH의 자금 흐름〉



로부터 받은 기부를 타 채널이나 수행 기관에 교부하는 역할을 한다. UN 산하기관이나 NGO와 같은 채널들은 주로 수행기관의 역할을 겸하므로 자금을 자체 세계 보건 프로그램 수행에 사용하기

도 하고, 기타 세계은행 등의 기관들은 주로 공적 자금이나 민간 자금을 다양한 수행 기관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한다.

● DAH의 원조 형태

IHME는 DAH를 개발도상국의 보건 개선을 위해 세계 보건 채널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및 현물 기부로 정의하고 있다.

- 재정 기부는 보건 보조금 및 대부금을 포함한 모든 지불금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부 기관에서 수령 국가로 보내진 총지불금뿐 아니라 저금리 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을 통한 대부금을 포함한다.
- 현물 기부는 의료 서비스, 약품 지원, 기술 원조, 질병 감시, 제반 관련된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DAH의 측정

측정은 직접적인 보건 분야를 위한 원조에 국한하였으며,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이나 위생, 인도주의적 원조 등 유사한 분야들에 대한 원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조 채널들의 세계 보건 연구비 지원이나 자체 연구 등을 포함하며, 기관의 주목적이 개발원조가 아닌 글로벌 보건연구기관, 생의학 연구기관, 정부보건연구기관, 제약회사, Wellcome Trust와 같은 민간 재단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데이터 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세계 보건원조 채널들이 지원하는 모든 보건 관련 기부를 추적하여 DAH를 측정하였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출처들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개도국에 속하지 않은 OECD 비회원국들의 양자 간 원조와 개도국들 간의 양자 간 원조 제공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간 재단과 NGO에 대한 자료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원조 채널 기관의 수입과 보건 관련 지출에 대한 모든 가용할 만한 데이터를 기존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연례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으로부터 추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원은 아래와 같다.

- 각 채널별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반영하는 총 자금 흐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 양자 간 원조기구, EC, GFATM, GAV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개발은행(IADB), BMGF이 원조하는 보조금 및 대부금 등의 정보가 있는 프로젝트 차원 데이터베이스

● DAH의 총 규모 측정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모든 세계 보건원조 채널에서의 보건 관련 기부금을 합산하여 연도별 DAH의 총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에는 보조금과 대부금을 조성하는 기관들의 지원금 및 현물의 원조 비용과 UN 산하기구나 NGO의 보건 관련 프로그램 지출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부금 중복 산정을 막기 위해 원조 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 기금 출처에 따른 DAH 분류

각 채널별 수입 원천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적 출처와 사적 출처로 구분하였다. 단, 각 채널별 수입은 원조금을 제공하는 기관에 교부한 원조 비율의 합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 DAH 구성 요소의 분석

EC, GFATM, GAVI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조 유형, 수령 국가 및 특정 질병, 질병 부담 및 국민소득 등의 구성 요소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보건 재정의 지원 분야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중점 논의되고 있는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보건 부문 예산 지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향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질병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정부의 간섭 등의 내용까지도 확대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3. DAH의 측정 결과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원조의 총 규모를 추정하여 보건원조에서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금 출처, 기부 국가, 원조 유형 등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추정치는 2007년 미국 달러 가치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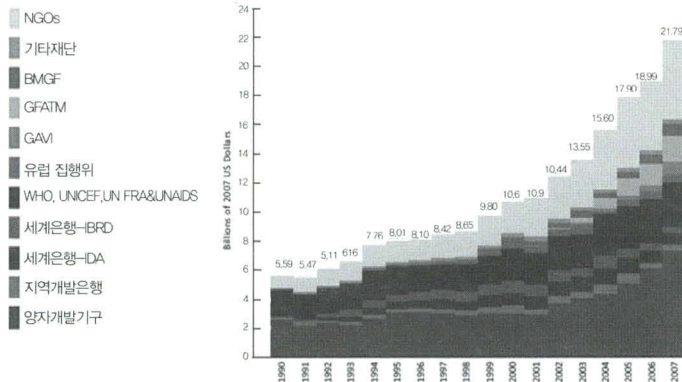
1) 원조 채널별 DAH 규모

지난 10년간 개도국의 보건 개선을 위한 개발원조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양자기구, 다자기구, 개발은행 등이 지배적으로 보건 분야에 원조를 했으나, 최근 GFATM과 GAVI와 같은 세계 보건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발의기관들이 글로벌 의료 난제 및 특정 질병 퇴치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여 원조 지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DAH의 연간 총 규모를 원조 채널별로 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1990년 56억 달러에서 2007년 218억 달러로 4배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01년까지는 대략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를 보건원조 채널별로 검토해 보면, 조사 기간 동안 채널 간 상대적 기부율이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보건원조에서 양자 간 원조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46.8%에서 2001년 27.1%로 낮아졌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34%를 차지하였다. UN 산하 기관들은 1990년의 32.3%에서 2007년 14%로 낮아졌으며, 세계은행과 지역은행들은 2000년에 총 의료 원조의 21.7%까지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7.2%로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2002년 전체 보건원조에서 각각 1% 미만이던 GFATM과 GAVI는 2007년에는 각각 8.3%와 4.2%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민간단체인 BMGF와 NGO 또한 전체 보건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NGO의 보건원조의 흐름은 그 재원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2007년 NGO의 해외 보건 지출(54억 달러)은 전체 보건원조에서 25%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림 2. 1990~2007년간 원조 채널별 DAH 규모, 2007년 달러 기준>



2) 원조 자금 출처별 DAH 규모

원조 자금 출처별 DAH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재정 부처에서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적으로 전체 보건 원조에서 23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전체 조사 시기 동안 공공 DAH의 최대 기부자로 드러났다. 그 외 기부를 많이 한 국가로는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정부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보건원조가 증가(1998년 19%에서 2007년 26.7%)하여 전체 보건원조 규모의 증가에 일조하였으며, 특히 민간단체 중 BMGF, 민간 기업, 미국에 기반을 둔 NGO 들이 보건원조의 주요 출처임을 알 수 있었다. 2007년도 민간단체의 지원금은 총 DAH에서 2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50% 이상은 BMGF와 기업들이 기부한 것이었다.

3) 기부 국가별 DAH 규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원조한 기금을 모두 고려하면, 전체 DAH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비율이 1990년 34.6%에서 2007년 51.1%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이 보건원조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보건에 대한 원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 국가의 국민소득 대비 보건원조 비율로 보았을 때 미국은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각국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 기관 및 사적 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원조금을 산정하였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미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NGO의 보건원조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소규모로 추정되므로 전반적인 보건원조의 추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보건원조 수령 지역별 DAH 규모

지역별로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DAH는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DAH의 상대적 비율은 1990년 9.7%, 2001년 13.8%, 그 후 2007년 22.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일부 HIV/AIDS에 대한 막대한 원조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3>에서 '글로벌' 범주는 특정한 원조 수령국을 정하지 않고 보건 연구와 다른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그 글로벌 범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이 수령한 총 DAH는 질병의 부담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원금이 높은 편이나, 일인당 소득이 낮을수록 일인당 의료 지원비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분배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질병 부담이 낮은 일부 중간소득 국가들(콜롬비아, 이라크, 아르헨티나)은 오히려 많은 비율의 지원비를 수령한 반면, 이보다 훨씬 빈곤하고 질병 부담이 높은 기타 국가들(말리, 니제르, 버키나 파소)은 상대적으로 거의 자금을 수령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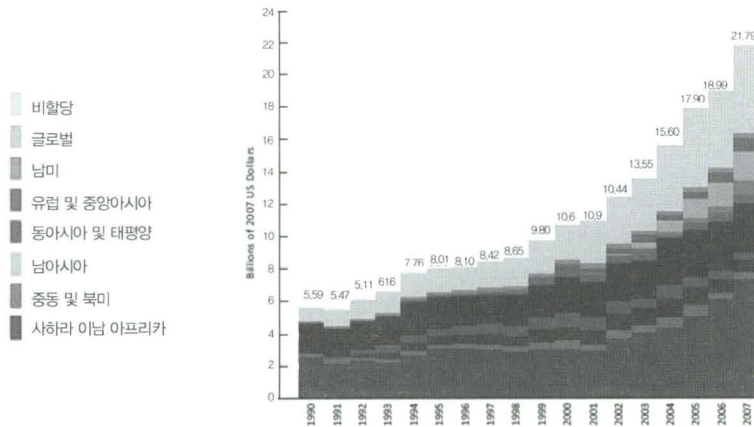
5) 원조 유형별 DAH 규모

연간 보건원조 자금 유형을 보조금, 대부금, 현물의 비율로 나누어 볼 때 현물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원조 및약품 기증 등의 현물 지원은 2007년 전체 보건원조에서 약 40%(218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6) 특정 질병 및 보건 부문 지원별 DAH 규모

HIV/AIDS 지출액은 1990년 2억 달러에서 2000년 8억 달러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 2007년에는 5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말라리아에 대한 원조금은 2005년 이후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7년의 총 원조액 218억 달러 중 8억 달러로 말라리아에 대한 원조 비율(3.7%)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기부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반 보건 부문(9억, 4.1%)에 대한 지원도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1990~2007년간 원조 수령 지역별 DAH 규모>



4. 시사점

세계 보건원조는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02년부터 가속화되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뿐 아니라, 주요 세계 보건 활동 기관, 민간 자선단체, NGO, 기업 등에서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DAH의 증가는 HIV/AIDS 퇴치를 위한 기금 확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나, 세계 보건의 다른 분야의 원조에 의해서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세계 보건원조의 확대는 세계 보건과 관련한 기구들의 주요 변화에 따른 것이다. GFAT와 GAVI와 같은 세계 보건 발의기관들이 세계 보건 기금의 동원과 유입을 위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NGO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마찬가지로 개도국 정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양자 간 원조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유엔 산하기구들과 세계은행은 보건원조의 비율 측면에서 점차 위치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현재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조 수령 국가들, NGO, 세계 보건원조 관련 기구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

개도국의 보건원조 지원 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질병 부담을 갖고 있는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국가들보다 보건 원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 나라들도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 및 정치적 목적, 특정 질병 퇴치 전략 등에 따라 수령하는 보건 원조금이 매우 상이하였다. 국가별 배분 경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보건원조 흐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 정책을 계획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자들이 그들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원조 보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며, 세계 보건 개입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전문 정책 보고서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데이터의 연속성과 데이터 수집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미국에 근거 두지 않은 NGO나 민간 재단의 재원은 데이터의 연속성의 문제로 이번 DAH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개도국으로부터 다른 개도국으로 유입된 재정적 자원이나 OECD 비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중국 등)가 개도국으로 원조하는 자원을 제외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중심으로 산정하여 많은 기부 기관 등이 약속한 원조 지

원금을 제외했다는 점이다. 넷째, 현물 기증에 대한 가치 측정에 있어서, 현 방법론에서는 현물을 현금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나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유통비 등에 대한 측정의 한계로 인하여 이 수치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OECD 세계포럼 3일차(10월 29일) 오전의 부분회의 '아동의 웰빙'세션¹⁾에서는 한 사회의 미래 주역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에 대한 웰빙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측정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이양희 교수(성균관대학교, 현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원고를 통하여 아동의 웰빙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아동의 웰빙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아동이 안전감을 느끼고 건강하며 행복한 상태를 뜻한다. 아동의 웰빙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아동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입각하여 아동의 성격, 능력 및 재능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The African Child Policy Forum, 2008).

웰빙은 아동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정책, 국제 사회의 성장 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웰빙의 적용 범위가 이와 같이 다양한 만큼 그 의미도

1) 동 세션에는 이양희(한국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발표), Dominic Richardson(OECD 고용노동사회국 담당; 발표), Asher Ben-Arieh(이스라엘 예루살렘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발표), Nicolas Pron(UN DevInfo 사무총장; 발표), Yehualashet Mekonen Abegaz(아프리카 아동정책포럼;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데 웰빙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철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들은 웰빙을 보다 단일한 의미로 사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Camfield, Streuli, & Woodhead, 2009).

2. 아동의 웰빙에 대한 국제적 기준

아동의 웰빙을 보다 면밀하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인 모든 이들의 권리를 증진, 옹호 및 보호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국제법이다. 이는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3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9개 세계 인권 협약 중 최다 비준 기록이며, 54개 조항 내에 40개 이상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협약이다(Lee, 2009a; 2009b).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며, 협약에의 비준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가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 이행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아동의 신장 및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7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와 제24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적합한 생활수준과 최적의 건강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통해 아동의 웰빙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전문에서도 ‘가족은 사회의 기초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또, 제6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고, 2항은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

본 조항들은 앞서 언급한 아동의 웰빙 실현을 위한 부모, 지역사회, 국가의 노력에 당위성을 부여해 준다. 부모 및 주 양육자에게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계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는 주된 책임을 부여하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가는 부모 및 주 양육자를 지원하여 기본 의식주에 대한 관심과 물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됨과 동시에 아동의 웰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웰빙을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노력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즉, 아동 웰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국가의 높은 사회 복지 수준뿐 아니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행과 노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다각도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유엔은 아동 웰빙을 여섯 개 차원, 즉 물질, 건강과 안전, 교육, 가족과 또래 관계, 행동과 위험, 주관적 웰빙으로 나누며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지표는 <표 1>과 같다(UNICEF, 2007).

〈표 1. 아동 웰빙의 차원 및 지표〉

차원	지표
물질	상대적 소득 빈곤, 실질 가장, 결핍
건강과 안전	예방접종, 유아 사망률
교육	아동의 학업 성취, 아동이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 비율
가족과 또래 관계	가족 구조, 가족 내 관계, 또래 관계
행동과 위험	건전 행동, 위험 행동, 폭력의 경험
주관적 웰빙	개인이 느끼는 건강, 학교 생활, 개인적 만족감

국가는 아동이 최적의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아동 복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은 국제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빈곤을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의 지표인 아동 웰빙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일 것이다.

웰빙의 주요 연구와 정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아동(18세 이하 아동 UNCRC)의 인구를 중요한 비율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웰빙은 아동 빈곤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는 물질적 요소에 초점을 두게 된다(UNICEF, 2005).

UNICEF(2007)의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인 22억 인구의 대부분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빈곤 속에 자란 아동은 건강의 결핍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질의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적고, 미래에도 낮은 임금이나 무직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고한다.

빈곤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취약함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건강, 학습, 행동의 문제와 더불어 학업 부진, 이른 나이의 임신, 낮은 기술과 포부, 낮은 임금, 실직 그리고 복지에 의존하는 것 등을 보고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평균 소득은 상대적 빈곤에 대한 기초적 측정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아동의 관점에서 비교의 기준은 다른 본질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 빈곤은 물질의 결핍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시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생활수준 및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원, 능력, 선택권, 안전 등의 결핍을 함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돈이나 물질적 재산의 결핍으로 기회의 부족과 다른 사람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초래하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권리를 위협당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문화와 교육적 자원 역시 아동의 물질적 안녕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기본권 중 발달권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는 아동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능력과 잠재성을 허락하는 아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실천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UNICEF의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2005』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OECD 국가들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동 빈곤 비율을 10%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Norway는 아동 빈곤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과 사회보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과 낮은 아동 빈곤율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NICEF 보고에도 가족과 사회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는 정부는 낮은 아동 빈곤율과 연관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도뿐 아니라 분배 방식에 따라서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측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원칙이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의 빈곤 수준은 사회적 경향, 노동 시장 상태, 정부 정책의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빈곤율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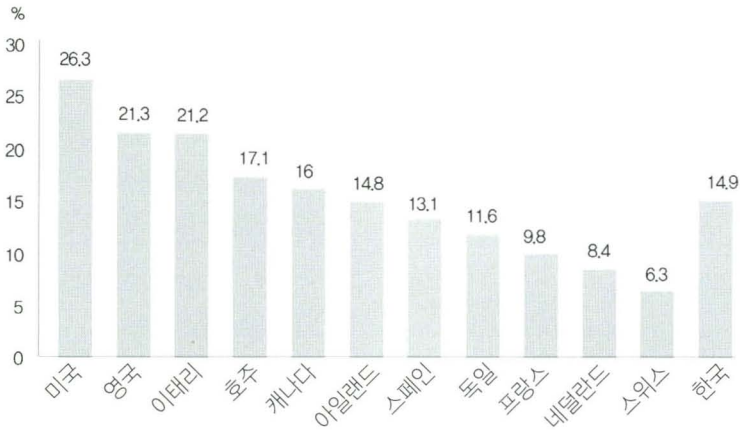
우선, 사회와 가족의 변화는 모든 국가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부모의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하면서 각 가정마다 아동의 평균 수가 감소함으로써 아동 빈곤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혼 등의 가족 해체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아동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변동이 매우 심한 노동시장 역시 아동 빈곤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1990년대 초 많은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침체, 기술 혁신, 지식에 대한 부가가치의 증가, 낮은 기술 인력의 이주, 낮은 임금, 민영화와 세계화의 경향 등의 특징을 보였다. 맞벌이 형태의 가정이 어느덧 기본이 되었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불가능해 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동의 삶에 변화를 초래했고, 따라서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대처를 요구하였다. 끝으로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의 변화도 빈곤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최악의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의 발전을 돕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UNICEF, 2005).

사회와 가족의 변화, 더 나아가 세계 경향의 변화는 이와 같이 모든 국가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 국제 NGO 단체인 PLAN(2005) 보고서 『Growing up in Asia』에 의하면 아시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인구의 절반이 경제 성장과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18세 미만 아동 중 3억 5천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PLAN은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쉽고 빈곤에 가장 취약하며 정책과 경제적 상황에 가장 불리한 집단이므로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투자하는 것이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 상실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고, 때로 아동과 청소년은 교육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발육 저하와 영양 부족 등의 건강상 문제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역시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장의 장기 실직, 이혼 등 가족 해체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 빈곤 문제가 실질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동 빈곤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2007년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김미숙과 배화옥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빈곤과 관련된 전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주: 외국 자료는 2001년 통계치이나 한국은 2004년 국민생활실태 원자료로 추계한 것임.
 출처: 김미숙, 배화옥(2007). *Bradbury & Jantti (2001) 재인용.

국적 규모의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 30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터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공식적인 아동 빈곤 수준에 대한 국가 통계를 제출하지 못했고, 각 정부 부처의 통계자료마저 아동 연령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아동 빈곤율 파악에 있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다른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03년의 경우 상대 아동 빈곤율은 14.9%로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배화옥(2007)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 즉 조손 가정 과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실직, 비정규직 또는 일시직과 같은 고용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아동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결과, 한국과 터키는 GDP 대비 가족 급여 비중이 최하위로 보고되었으며, 각종 세제 혜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조기 교육 서비스 참여율은 평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교육비 예산 지출 부문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OECD 국가들이 아동 빈곤 해결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 정책의 개선 및 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가족 지원 제도화와 정부 예산 책정(공적 가족 급여 지출, 출산/육아 관련 휴가제도, 보육 및 조기 교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아동 빈곤에 관한 OECD 국가들의 보고와 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 빈곤은 어찌 보면 아동이 속한 가정과 국가의 현실로 인해 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해 주는 일은 정부의 기본적 책임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IMF라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나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우선, 정부는 아동 빈곤과 관련된 장기 정책적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실시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통계적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방향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장기적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들에서처럼 아동을 위한 예산, 즉 'Child Budget'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끝으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경험하는 2차적 문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아동 빈곤 감소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 빈곤율 수준과 아동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3.
- 배화옥(2007). OECD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6, 73-87.
- Bradbury B., and M. Jantti,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Bruce Bradbury, Stephen P. Jenkins, and John Micklewright(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70.
- Camfield, L., Streuli, N & Woodhead, M. (2009). What's the use of 'Well-Being' in contexts of Child Poverty? Approaches to Research, Monitoring and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7), 65-109.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http://www2.ohchr.org>.
- Lee, Y. (2009a). Expanding human right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aying the groundwork for a twenty-first century movement.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18(1), 283-292.
- Lee, Y. (2009b). Child rights, child well-being, and child poverty. In J. Doek, A.K.
- Shiva Kumar, D. Mugawe, and S. Tsegaye (Eds.), Child poverty: Afric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pp. 17-26). Antwerp, Oxford, Portland: Intersentia.
- PLAN. (2005). Growing Up in Asia: Plan's Strategic Framework for Fighting Child Poverty in Asia 2005-2015.
- The African Child Policy Forum. (2008). The African Report on Child Wellbeing: How child-friendly are African government?. The African Child Policy Forum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5).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2005. Report Card No. 6.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7).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Report Card No. 7.

제3차 OECD 세계포럼 3일차(10월 29일) 오후의 부문회의 ‘기업의 지배 구조 및 사회적 책임’ 세션¹⁾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관련한 국내 논문 및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²⁾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유추하고자 한다.³⁾

1. CSR 개념

1990년대 중반, 나이키의 하청업체인 동남아시아의 한 공장에서 아동의 노동 착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이키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나이키의 이미지와 주식 가격이 급락하였

1) 동 세션에는 이승규(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소장; 발표), Elisa Lanzi(이탈리아 Eni Enrico Mattei 재단 대표; 발표)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2) WBC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비즈니스 리더십을 제공하고자 1995년에 창립되었으며, 에너지와 기후, 발전, 기업의 역할, 생태계 등의 4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3) 본 자료는 아래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CSR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을 뿐, CSR과 관련한 특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안병훈, 장대철(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역할”, 카이스트 사회책임경영센터, 상강연구협 논문

오문석(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레벨 업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소

정후식(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7-22

주철기(2009), “국제 CSR 이니셔티브: 역할과 전망”, CSR 국제 워크숍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콘라드아데나위재단(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울선언”, 경제위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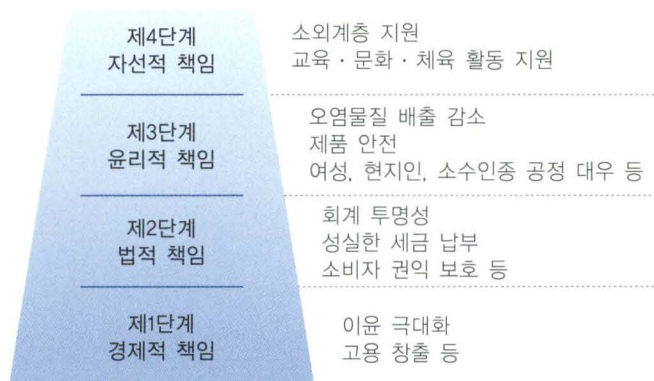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8), “Why measuring impacts on society makes business sense” GRI의 홈페이지, www.globalreporting.org/AboutGRI

으며, 이후 나이키가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였으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사례는 한 기업이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윤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다.

CSR은 기존의 기업윤리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기업도 개별 인격체와 동등한 '법적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권한 및 책임을 기업에게도 부과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 후 기업 윤리의 개념은 주주, 경영진, 고객, 종업원 등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국가, 지역사회, 언론 등 간접적 이해 관계자들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기업윤리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CSR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CSR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기업 그 자체는 물론,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CSR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법과 윤리적 책임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카롤은 기업이 지녀야 할 책임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기업은 주주나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후식(2007)은 CSR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 법령과 윤리의 준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기업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기업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기업의 네 가지 책임>



2. CSR 동향

1) 국제 동향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NGO에서는 CSR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⁵⁾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⁶⁾의 ISO26000 등이 있다.

● UNGC

UNGC는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 4대 행동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 기업들에게 성과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f Progress)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표 1.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행동 영역	원칙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기준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5. 아동노동을 철폐한다.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8. 환경적인 책임을 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4) UNGC는 CSR 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으로, 기업들의 인권 보호, 노동권 보호, 환경 보전, 부패 방지를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7월 출범하였으며, OHCHR, UNDP, UNOUDI, UNEP, ILO, UNIDO의 6개 주요 유엔기관에 의하여 활성화되었다. 현재 약 130개 국가 5,000여 기업과 1,500개의 시민사회와 비사업기관 등 6,500개 이상의 회원 기업이 있다.

5) GRI는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와 유엔 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관으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제공한다.

6)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적 활동이나 과학 기술 경제 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ISO가 개발한 표준 중에서 ISO14000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환경 성과 향상의 입장에서 다양한 환경 관리 측면을 평가한다. 2009년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ISO26000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각 기업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며, 특히 CEO들의 검토를 통해 향후 기업의 성과 개선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원칙과 지표를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 NGO, 컨설턴트, 회계사 등과 함께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GRI 가이드라인은 1999년과 2000년, 2006년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부분 개정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인권과 노동에 관한 부분 개정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 ISO26000

CSR의 규범화는 국제적 협약과 각국의 법제화된 형태뿐만 아니라 ISO에 의한 사회적 책임 경영 인증 시스템의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2010년 발표 예정인 ISO26000에서는 회계, 환경, 노동 등의 이슈에 관해 CSR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인증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ISO26000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을 중시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기타 국제 동향

그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성과와 CSR에 대한 측정 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측정 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위험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⁷⁾와 영국의 FTSE4Good 지수⁸⁾가 있다.

또한 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

7)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는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선도 기업들의 재무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개발에 착수하였다. DJSI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기준에서 다우존스 글로벌 주식시장 지수(Global Total Stock Market Index)의 2,500대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DJSI 실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지수를 통해 기업의 기회와 위기를 평가하고 있다.

8) FTSE4Good 지수는 2001년 출범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된 기업의 책임 기준에 부합한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들 기업으로의 투자를 독려한다.

기 위한 도구로서 다국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⁹⁾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 시민의식의 장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부패의 톨로서 PACI(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를 개발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2) 국내 동향

국내 기업들이 CSR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외환 위기가 끝나면서부터이다. 당시 기업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 콘서트와 같은 문화행사 지원, 장학금 제공, 착한 기업 이미지를 위한 언론 홍보 등에 주력하였다. 그 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 활동으로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기업의 윤리 경영과 지배 구조 등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 가치 논리와 기업의 경제적 업적주의 외의 다양한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산업정책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에코프론티어 등의 컨설팅 기관이 참여하여 CSR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009년 6월에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CSR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하였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울선언 - 다섯 가지 행동 강령 >

1.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 및 사회와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2.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조화로운 추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확신한다.
3. 법과 게임의 룰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제적 가치의 최적화를 모색한다.
4. 단기적 결과와 업적에만 치중하기보다 중장기적 원칙과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5. 주주 이익을 중시하되, 주주 이익이란 이해 관계자 이익과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확대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

9) 2000년에 수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 공개, 노동 조건, 환경 책임, 반부패, 소비자 이익 보호, 경쟁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원칙을 다룬다.

3. 기업의 영향력 측정

기업들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가 최근 발간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이 왜 기업에 의미가 있는가 (Why measuring impacts on society makes business sense, 2008)」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영향력 측정 사례와 과정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측정 결과에 기반하여 이해 관계자들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기여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 모델과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표 2>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표 2. 기업의 영향력 측정을 통한 이점〉

이점	세부 내용
위기 관리	변화하는 사회 조건과 요구를 예측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신규 사업 운영	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고, 신규 시장 개척, 유통 혁신, 공급 체인 지역화를 도모한다.
시장 점유율	브랜드 및 고객에 대한 충실도를 확보하고, 상품시장 점유율을 보호한다.
지역사회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보다 좋은 정보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정부 및 규정기관	기업 운영 허가를 위한 관계를 개선한다. 프레임워크 조건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파트너십	기업의 영향력을 최적화하도록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업원	종업원을 매료시켜 고용 상태를 유지시킨다. 종업원의 열정과 충성심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1) 사례 1: 유니레버 사례(기업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미친 영향력)

세계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는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유니레버는 옥스팜¹⁰⁾과 공조하여 기업의 전반적 활동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 발전, 빈곤 퇴치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는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에서부터 벽지의 저소득 소비자 대상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대규모 생산자 및 공급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공급 체인보다 유통과 소매 부문에 미친 영향력이 2배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연구를 바탕으로 유니레버는 2005년 자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는 유니레버가 직간접적으로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 기존의 경제방법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로 유니레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분야뿐 아니라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유니레버는 두 지역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자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가치를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산업체,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다국적 기업과 사회 발전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협력 기관들과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을 통해 기업 운영을 파악해 봄으로써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 사례 2: 보더폰 사례(모바일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력)

영국계 이동통신업체인 보더폰¹¹⁾은 개인, 비즈니스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휴대폰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업의 미래 잠재시장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연구(Social-Economic Impact of Mobiles, SIM)에 착수하였다.

SIM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휴대폰 이용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초기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휴대폰 이용자들을 조사하였고, 후속 연구에서는 휴대폰 이용이 건강관리와 소액 대출(Microcredit)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심도 깊게 조사하였다.

10) 옥스팜(Oxfam)은 1942년 영국에서 결성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구호단체로 성장한 기관.

11) 보더폰(Vodafone)은 2006년 경제전문잡지 포춘(Fortune)지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이행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영향력은 보더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였으며, 휴대폰의 용도 및 가치, 소유 형태는 선진국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휴대폰을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서 비록 휴대폰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실제 휴대폰의 영향 범위는 휴대폰 가입자의 수를 훨씬 능가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고, 휴대폰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소매업자들과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공급하는 아프리카 지역 기반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및 시골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최근 보더폰은 사회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휴대폰 신규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 그 중 M-PESA¹²⁾라는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 케냐에는 이 M-PESA를 사용하는 고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 보더폰은 케냐 지역 정부와 공조하여 M-PESA를 이용한 연금 지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티그룹과 함께 휴대폰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으며, M-PESA 프로그램을 인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더폰은 각 정부와 공조하여 휴대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리고, 휴대폰의 경제적 잠재력을 조성하는 효율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SIM 연구를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 연구로 간주하여 보더폰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보더폰의 SIM 프로젝트는 휴대폰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사업 전략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결정을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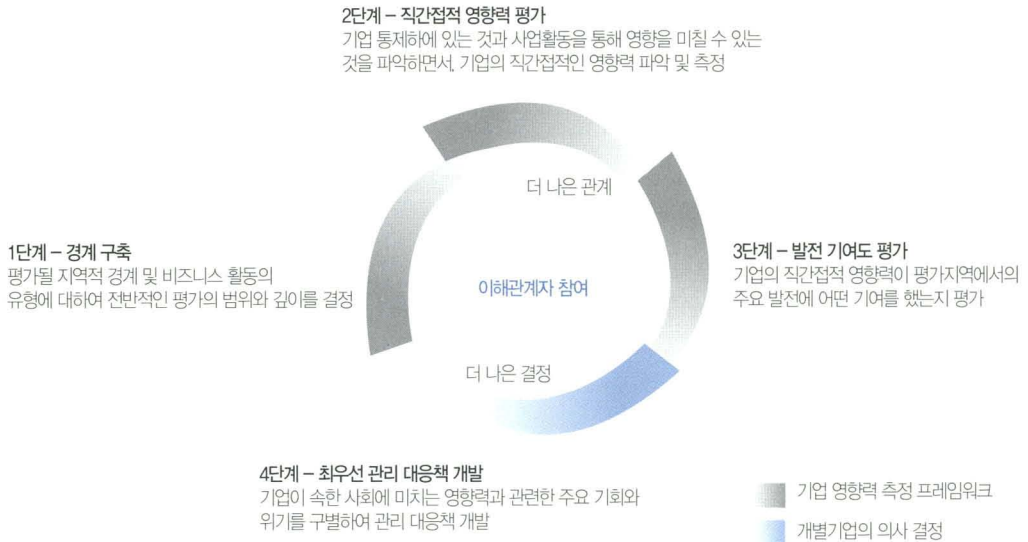
3) WBCSD 기업 영향력 측정 프레임워크

2006년 봄 WBCSD는 기업의 사회 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 가능하고 세계 도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시간에 걸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측정 방법론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BCSD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4단계의 방법론에 기초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지리적 경계

12) M-PESA에서 M은 mobile를 의미하여 PESA는 동아프리카 원주민어로 돈(money)을 의미한다.

〈그림 2. WBCSD의 기업의 영향력 측정 기본 단계〉



및 사업 활동의 영역 관점에서 평가와 관련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영향력을 측정하며, 3단계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사회의 영향과 관련하여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경영 전략

〈표 3. WBCSD 기업 영향력 측정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세부 내용
기업 활동에 바탕	기업을 위하여, 기업에 의하여 구축
적극적으로 기업 공헌 파악	전통적인 리포팅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
이해 관계자 참여 장려	기업의 영향력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기업이 그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개 대화의 장 지원
유연성 확보	기업 운영 지역이나 비즈니스 사이클 내 활동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기존 톨 보완	기존 방법들을 활용(예: 글로벌 리포팅 구상 등)

을 개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보다 나은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WBCSD의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다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3일차(10월 29일) 오후의 부문의회의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세션¹⁾에서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평화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러한 평화 측정 활동이 실제 평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작성하는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WPI)²⁾와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³⁾와 EIU⁴⁾에서 발표하는 글로벌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GPI)⁵⁾를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 논의될 내용을 유추하고자 한다.

1. 평화의 개념

평화에 관한 연구는 냉전체제 당시에는 주로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쟁 억제, 국제분쟁 해결, 군비 축소 등 폭력적인 형태의 갈등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 1) 동 세션에는 Steve Killelea(호주 Global Peace Index 대표; 좌장), Toshiya Hoshino(일본 오사카대 공공정책학 교수; 발표), Kevin Clements(뉴질랜드 평화학연구소 교수; 발표), 김진현(한국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발표)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 2) 세계평화지수는 우리나라의 세계평화포럼(비영리기관)에서 200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 여기서는 2008년 세계평화포럼에서 발간한 「세계평화지수 2008」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였다.
- 3)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비즈니스, 평화, 경제 개발에 있어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이다.
- 4)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1946년에 설립된 이후, 200여 국가의 거시 경제 지표, 산업 지표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치 전반에 대한 분석과 중장기 예측을 하고 있다.
- 5) 경제평화연구소의 논문 “Global Peace Index: 2009 Methodology, Results and Findings”, “Global Peace Index - 2007 Discussion Paper: Peace and Sustainability: Cornerstones to survival in the 21st century”와 Global Peace Index 홈페이지(<http://www.visionofhumanity.org>)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에는 전쟁이나 국가안보를 포함하면서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평화는 간단히 정의내리기는 어려우나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소극적 평화란 국가 간 폭력적인 충돌이나 내전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⁶⁾ 반면, 적극적 평화란 자유, 평등, 정의, 환경보호, 번영과 같은 사회의 제반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별 국가나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적, 제도적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세계평화포럼에서 작성되는 WPI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 충돌이나 갈등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억압이 없는 상태로, 집단 간 사회 갈등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해결되고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삶의 기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GPI도 적극적 평화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아직은 폭력의 부재 상태로서의 평화를 측정하고 있으나, 어떤 문화적 특성과 제도가 평화의 상태와 관련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평화 측정

현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안보, 외교 등 모든 영역이 복합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국제 사회는 어느 한 가지 해법이나 특정 국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협조와 이해 하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세계평화포럼에서는 세계 평화의 정보체계를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WPI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평화 수준을 계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지구촌 전체 구성원들이 자국 및 세계 각지의 평화 수준을 높이도록 자극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제평화연구소에서는 국가 간 상대적 평화 정도를 측정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GPI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PI는 평화의 잠재적 결정 요인이나 잠재적 동인을 발현시켜 평화로운 사회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 조

6)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6

〈표 1. WPI와 GPI 비교〉

구분	World Peace Index(WPI)	Global Peace Index(GPI)
목적	평화의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세계 평화 향상에 기여한다.	세계의 상대적 평화 정도를 측정하여 평화 창출 및 유지를 도모한다.
측정 분야	3개 분야(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3개 분야(국내외 분쟁, 군사화, 사회 안전 및 안보)
자료 및 지표 선정	미시간대학교의 Correlates of War Projec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등	국제전문가(학계, 평화 관련 연구소장 등) 패널 활용
조사 대상	76개국*	144개국
최초 작성 연도	2000년	2007년
작성 기관	한국 세계평화포럼	영국 경제평화연구소 및 EIU

* 세계평화포럼은 1차적으로 양질의 평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1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2차적으로 그 중 결측값이 많은 국가를 제외한 76개국을 추려내어 이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성을 위한 다양한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1) 측정 분야

WPI와 GPI 모두 평화의 측정 영역을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WPI는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로, GPI는 현재 국내외 분쟁, 군사화, 사회 안전 및 안보로 분류하였는데, WPI가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지표에서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지표의 측정 분야는 <표 2>에 자세히 나와 있다.

〈표 2. WPI와 GPI의 측정 분야〉

WPI	GPI
정치	현재 국내외 분쟁
1. 역사적, 국내 정치적 갈등 1-1. 내전 1-2. 쿠데타, 정치적 폭동, 정치적 갈등 2. 민주화 및 정치 능력 2-1. 민주화 정도 2-2. 인권 보장 수준 2-3. 정치적 투명성(부패) 3. 국내 정치적 갈등 3-1. 내전 3-2. 쿠데타, 정치적 폭동, 정치적 갈등 3-3.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무력 분쟁의 종식, 비군사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합의 및 조치)	1. 국내외 분쟁 발생 건수 (2002-07) 2. 조직적인 분쟁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 수 (국외) 3. 조직적인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 (국내) 4. 조직적인 분쟁의 심각도 (국내) 5.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
군사·외교	군사화 (무장화)
1. 역사적 국가 간 갈등 1-1. 전쟁 경험 1-2. 식민지 경험 1-3. 지정학적 조건 2. 군사화 정도 2-1. 군사비 2-2. 병력 수 2-3. 대량살상 무기의 소유·실험 관련 국제협약 3. 국제 정치적 갈등 3-1. 전면 전쟁 3-2. 전투 3-3. 폭력 행위 3-4. 정치 외교적(비군사적) 사건 3-5.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 및 단결, 평화 증진 사건 및 조치)	1. GDP 대비 군사 지출비 2. 10만 명당 군인 수 3. 10만 명당 재래무기 수입량 4. 10만 명당 재래무기 수출량 5. UN 평화유지 미션 지원금 6. 10만 명당 대량무기 총계 7. 경량무기에 대한 접근도 8. 군사 역량
사회·경제	사회 안전 및 안보
1. 안전 및 안정 1-1. 생태적·사회적 안전 1-2. 개인적 안전 1-3. 사회적 안전 2. 불평등과 배제 2-1. 빈곤과 결핍 2-2. 차이와 불평등 3. 삶의 질과 사회적 보장 3-1. 삶의 질 수준 3-2. 사회보장 수준	1. 불신 수준 2. 인구 대비 난민 수 3. 정치적 불안정 4. 인권 경시 수준 5. 테러 발생 가능성 6. 10만 명당 살인 건수 7. 폭력 범죄 수준 8.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 9. 10만 명당 수감자 수 10. 10만 명당 경찰 수

2) 측정 방법

● WPI

WPI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세부 척도들은 평화가 훼손될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도록 측정된 후 0점(평화)부터 1점(비평화)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⁷⁾한다. 그런 다음 동일한 하위 영역에 속하는 세부 척도들을 산술평균하여 하위 영역의 갈등 수준을 측정하고, 1에서 그 값을 뺀 다음 100을 곱하여 0점(비평화)부터 100점(평화)의 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이렇게 하위 개념의 평화지수가 도출된 후에는 상위 개념의 평화지수는 이들 하위 지수들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된다.

사회경제 영역의 ‘안전 및 안정’의 평화지수 산출 과정을 예로 들어 보자. 안전 및 안정 부문은 생태적·사회적 안전, 개인적 안정,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된다. ‘안전 및 안정’의 평화지수는 먼저 이들 세 하위 영역의 갈등 수준을 구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하여 ‘안전 및 안정’의 갈등 수준을 계산하고, 이를 1에서 뺀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하위 영역의 갈등 수준을 구하는 과정을 ‘개인적 안정’ 영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인적 안정은 스트레스 정도, 여가 시간, 구조적 불안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개인적 안정 영역의 측정 지표>

지표	측정 지표	비고
스트레스	1인당 연간 담배 소비량 (A)	값의 범위 : 0~4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평화적 상태로 간주
	10만 명당 마약범죄 사범률 (B)	
여가	여가 시간	값의 범위 : 0~4 여가 시간이 적을수록 비평화적 상태로 간주
	- 주 40시간 초과 노동시간 (C)	
구조적 불안	10만 명당 남성 자살률 (D)	값의 범위 : 0~4 특정 사회의 남성 자살률이 높을수록 비평화적 상태로 간주

7)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지표에 절대적 최솟값과 최댓값이 존재하는 경우 0부터 시작하는 값으로 변환한 다음 최댓값으로 나누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지표의 절대적 최솟값과 최댓값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측치들의 평균에 2배의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분포상의 상위 95% 값’ 중 작은 값을 최댓값으로 설정하고, 5분위 수를 계산하여 이에 근거하여 각각에 0부터 4의 값을 부여한 후, 최댓값으로 나누어 분포가 0에서 1의 값을 갖도록 재조정한다.

개인적 안정의 갈등 수준은 먼저 세부 측정 지표들을 0과 1 사이 값일 가지도록 표준화한 다음,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text{개인적 안정} = [(A+B)/8 + (C/4) + (D/4)]/3$$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태적·사회적 안전, 사회적 안전의 갈등 수준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 다음 세 영역의 갈등 수준을 산술평균하여 안전 및 안정의 갈등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1에서 뺀 다음 100을 곱하여 안전 및 안정 영역의 평화지수를 산출한다. 사회경제의 다른 하위 영역인 '불평등과 배제', '삶의 질과 사회적 보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화지수를 산출하게 되고, 이들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사회경제 영역의 평화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영역의 평화지수가 작성되면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적으로 WPI를 산출하게 된다.

● G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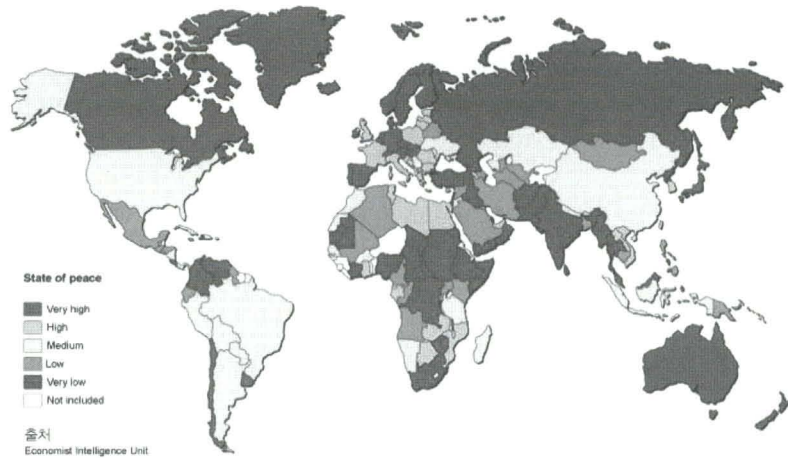
GPI의 23개 구성 지표들은 전문가 패널에 의해 선정되는데, 정성적 지표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군사비나 수감자 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는 1차적으로 10점 척도로 배점 후 최종 지표 산정 과정에서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정량적 지표는 EIU의 국가분석팀에 의하여 5점 척도로 변환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GPI 작성 시 전문가 패널은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국내 상황 및 국외 상황을 분리하여 두 개의 하위 평화지수를 산출한 후, 국내 평화지수에는 60%, 국외 평화지수에는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종합지수를 작성하였다. 이는 국내의 평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적 갈등이 낮아지는 관련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3. 세계 평화 현황

세계 평화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는 아프리카나 아랍권보다 평화 수준이 높으며, 중동 지역은 이라크 전쟁,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오랜 갈등 관계 및 전반적인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평화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GPI를 통해 본 세계 평화 정도〉



1) 2008년도 세계 평화 현황

「2009년도 GPI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4개국 중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국 중 14개국은 서유럽과 중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북유럽 5개국⁸⁾은 GPI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편, 한국은 중상위인 33위를 차지하였고, 북한은 131위에 올랐다. 미국은 83위로 상대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분류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일반인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범죄 수감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전쟁과 내전의 비극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꼽혔다.

2) 한국과 뉴질랜드의 평화 비교

2008년에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꼽힌 뉴질랜드와 중상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평화 수준을 비교하여 보자. 뉴질랜드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국내외 분쟁'과 관련한 세부 항목들은 모두 1점으로 평화로운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3점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군사화' 영역에서도 군사비 지출이나 군인 수, 무기

8)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수입 등의 점수가 높아 비평화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사회 안전 및 안보'의 경우 뉴질랜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 등 특수한 정세로 인하여 국내외 분쟁이나 군사화에 대한 정책을 단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안전 및 안보 차원에서 정치적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 존중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사전 교섭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4. 뉴질랜드와 한국의 GPI 세부 지표 점수* 비교〉

주요 영역	세부 항목	뉴질랜드	한국
현재 국내외 분쟁	- 국내외 분쟁 발생 건수 (2002-07)	1	1.5
	- 조직적인 분쟁의 심각도 (국내)	1	2
	-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	1	3
군사화 (무장화)	- GDP 대비 군사 지출비	1	1.5
	- 10만 명당 군인 수	1	2
	- 10만 명당 재래무기 수입량	1	1.5
	- 군사 역량	3	4
사회 안전 및 안보	- 정치적 불안정	1,25	1,875
	- 인권 경시 수준	1	2
	- 테러 발생 가능성	2	1
	- 10만 명당 살인 건수	1	2
	- 폭력 범죄 수준	2	1
	-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	1	3
	- 10만 명당 수감자 수	1.5	1

* 전체 23개 지표 중 차이가 나는 14개 지표만 제시하였다.

4. 평화로운 국가가 주는 시사점

세계 평화지수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① 대체적으로 사회가 잘 통합되고 경제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평화로운 국가들은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취하며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확고히 한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들은 안정된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무역

을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영위할 수 있는 유기적 흐름을 조성한다. 내부적으로도 평화로운 국가는 경제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② **평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국가는 기업을 위해, 기업은 국가를 위해 서로 긍정적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국가 모두는 공익, 공평 그리고 시스템 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평화로운 국가는 포용성이 있으며 이를 인류 전체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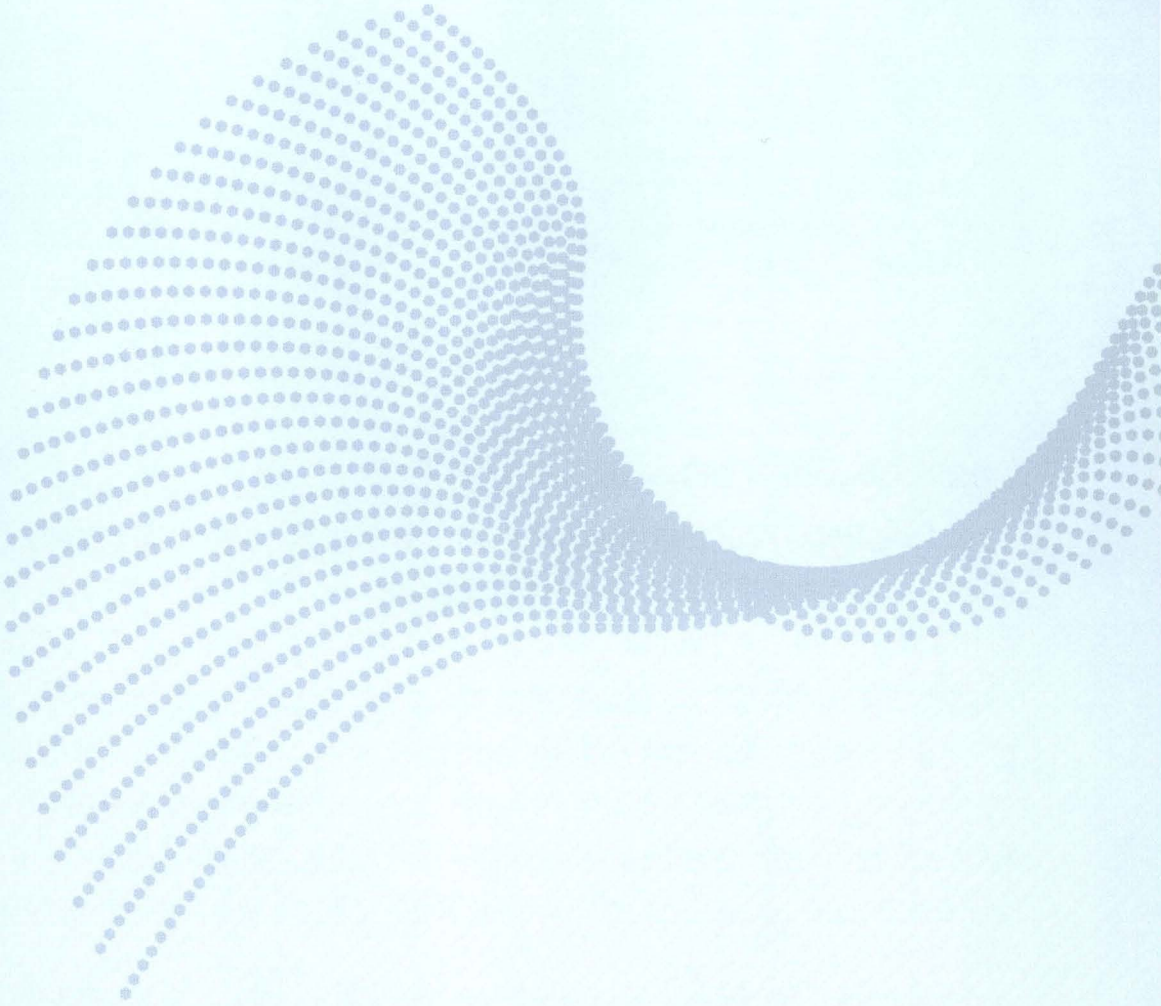
사회의 불만, 갈등, 소외 및 배타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주류 계층이 가진 특권과 비주류 계층에게 필요한 권리 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계층 간 건설적인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들이라 할지라도 유지시킨다.

④ **평화로운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를 한다.**

상위 20위에 있는 국가들도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평화는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폭력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주변국과 공동의 안보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외적 안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장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1 절

기후 변화

[기후 변화와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 : 생태효율성과 성장의 질]

제3차 OECD 세계포럼 3일차(10월 29일) 오전의 부문회의 '기후 변화' 세션¹⁾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정책과 인간 행동 양식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증거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증거를 활용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와 증거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정래권 기후변화대사의 원고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성장의 양(Quantity)과 질(Quality)

2006년에 영국의 니콜라스 스텐 경에 의해 발표된 “스텐 보고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피해가 향후 매년 GDP의 5% 정도가 될 것이며, 간접적인 피해까지를 포함한다면 기후 변화 비용이 GDP의 약 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스텐 보고서”의 경고는 GDP의 양적인 확대를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현재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요즘 들어 5%의 양적 성장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GDP의 5%에서 20%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GDP의 총량이 통계상으로는 5%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피해를 제하면 실제 경제 성장은 오히려 더 줄어들

1) 동 세션에는 Anders Wijkman(로마클럽 부의장; 발표), Paul Dickinson(영국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대표; 발표), 정래권(한국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GDP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값싼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후 변화의 비용이 우리 경제 규모의 5~20% 정도까지 이른다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성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성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교통 체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 손실 비용은 1990년대 중반 한때는 GDP의 4%를 상회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약 2.9%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체증 비용이란 교통이 막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용과 운전자 노동생산성 손실비용(교통체증 시간에 우리나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환산)과 차량의 추가적인 감가상각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 배기가스 매연의 공기 오염과 건강에 대한 피해 비용,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의 피해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교통체증의 실제적인 비용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교통체증의 직접적인 경제 손해 규모가 이미 GDP의 2.9%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근 경제 성장이 3%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기후 변화나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은 차치하고 교통체증이라는 비용 하나만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장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통체증 비용은 현재의 GDP의 총량만을 집계하는 통계 방식으로는 파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GDP 총량의 증가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성장의 양” 위주의 패러다임을 “성장의 질”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성장의 질은 경제와 생태 간의 균형을 위한 생태적인 질(Ecological Quality)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통체증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0.79%, 영국은 약 1.25%, 미국은 약 0.65% 수준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들 국가와 통계상으로는 동일한 양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들 국가들보다 GDP 통계상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의 교통 체계가 일본

과 같이 철도, 지하철, 대중교통 위주로 설계되어, 우리의 교통체증 비용(2.9%)을 일본 수준(0.79%)으로 낮출 수 있다면, 실제로는 약 2.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비용이 이렇게 높은 것은 교통체계가 자가용·고속도로 위주의 미국식 교통체계를 따르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철도, 지하철,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교통 부문의 체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철도, 지하철,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도 대폭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GDP 총량에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경제 비용은 교통 부문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량의 22%를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 주는 통계치는 없으나 과거에 건설된 대부분의 오래된 아파트나 상용 건물들의 단열 수준과 창호의 단열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건물 부문에서 낭비하는 에너지 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우리가 건물 벽의 단열을 강화하고 고단열 창호로의 교체를 통해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면, 우리는 상당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에너지 효율과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의 양만을 추구하여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에는 아파트의 숫자가 중요하였으나 이제는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와 낮은 아파트가 다르게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이다. 과거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교통체계의 설계나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에 에너지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경제 성장의 총량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양만을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척도로서의 유용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들을 많이 건설하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총 생산과 소비를 합산한 GDP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대형 자가용을 대량 생산 판매 하여도 GDP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에너지 수입 부담이 늘어나서 오히려 경제 활동과 에너지의 효율은 낮아지게 된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집약도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양만을 추구하게 될 경우 에너지 안보와 생태 위기는 더욱 악화됨으로써 결국에는 GDP의 5~20%에 달하는 기후 변화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 생태효율성을 향상시켜 에너지 안보와 생태 비용 절감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존의 GDP 총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의 에너지 효율과 성장의 생태적인 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는 21세기의 경제,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의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의제 21”(Agenda 21)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원래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개발, 사회 발전, 환경 보존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실 경제에 적용하기 위한 운용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태적인 질에 성장의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실천 가능한 경제 운용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다르다.

2.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

1) 생태효율성

현재 우리는 금융 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석유 등 주요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자원 위기,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생태 위기의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3중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 시장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도 기존의 자유방임적 자유시장 원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원의 위기와 생태의 위기는 우리에게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희소하고 자원과 환경(물, 공기, 기후, 산림 등)은 얼마든지 가용하다는 전제 하에 자본과 노동만을 경제재로,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는 가격이 없는 자유재로 보고 자본과 노동의 최적 배분에만 중점을 둔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자본 노동만이 희소하고 생태 자원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오히려 자본과 노동은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가용한데 비해, 생태 자원은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판촉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못해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생태 자원이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에 기초한 GDP만을 위주로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자원 사용의 효율성, 좀 더 넓게는 생태 용량 사용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국민총생산에서 환경오염 비용을 뺀 녹색 GDP라는 개념이 한때 논의되었으나, 이 개념은 오염의 개념을 좁게 규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의 비용과 같은 생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석유 등 주요 자원의 가격이 치솟자 중국 등 일부 국가와 전문가들이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 사용의 효율성만을 주목하는 경우, 자원의 채굴과 사용에 따른 생태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게 되어 자원 위기에 대한 대처는 가능하나, 생태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대표되는 생태 위기와 자원 위기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생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생태효율성이란, 단위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생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일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생태 자원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태 자원의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부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태 자원이란, 경제 발전에 사용되는 또는 경제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토지, 물, 에너지, 산림, 공기, 기후, 오존층, 생물 다양성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모든 생태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생태효율성은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사용되는 생태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에 대한 부담과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생태효율성이란 용어는 원래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단위 생산 과정 당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90년대 초에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아태 환경 개발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MCED)에서 처음으로 “생태효율성”을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과 소비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확대한 “녹색성장” 각료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동 개념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양립시킬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보다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²⁾

기후 변화는 현재의 GDP 총량 위주의 양적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 위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산림 파괴, 수자원 고갈, 물과 공기의 오염,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생태 위기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 향상

2) 당시 저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환경 국장으로 있으면서 “생태효율성” 향상을 녹색성장의 기초 개념으로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Pursuing Green Growth in Asia and the Pacific” edited by Raekwon Chung, Euston Quah, Cengage Learning Asia Pte Ltd 참조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³⁾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탄소 집약도 개선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에너지 역시 다양한 생태 자원 중의 하나인 만큼 이를 생태효율성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⁴⁾

특히, 생태효율성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시사점은 기존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소득이 향상되면 필수록 오히려 생태효율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의 처리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환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비 부분에서는 에너지의 과다 소비, 자가용의 대형화 등 과소비가 발생하여 생태효율성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2)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 패턴

아직 국제적으로 생태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확립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태효율성의 개념에 근접한 유용한 지표 중의 하나로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라는 측정 방식이 있다. 생태 발자국은 각 국가의 1인당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생태 자원의 양을 토지의 넓이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2003년도 각 국가의 1인당 생태 발자국을 보면, 일본은 1인당 4.4헥타르로 9.6헥타르인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생태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1인당 소득을 달성하고 있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5.6헥타르로 일본보다는 약간 높으나,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생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생태 발자국으로만 보자면 일본이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으며, 유럽은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4.1헥타르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국민 소득 수준은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소득 수준을 반영할 경우 우리의 생태효율성, 즉 동일한 소득 수준을 위해 소비하는 우리의 생태 자원의 효율성이 일본의

3)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나, 여기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경제의 에너지와 생태효율에 대해서만 다룬다.

4) 기후 변화와 에너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는 탄소 집약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생태효율성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미국보다도 우리의 소득 수준 대비 생태효율성이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2000cc 이상 대형 자동차의 비율이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20% 수준인 독일과 일본, 12.8%인 영국보다 훨씬 높은 30% 수준으로 60% 수준인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고, 1500cc 이하의 소형 자동차는 11.5%로 61%인 일본, 52%인 영국, 23%인 독일보다 월등히 낮으며, 1.9%인 미국에 이어 역시 세계 두 번째로 낮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 하겠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높은 교통체증 비용도 우리의 낮은 생태효율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최근 경제 성장률이 3~4%라는 점과 우리의 국방비가 GDP의 2.6%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생태효율성이 낮은 자가용 위주의 교통체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교통체증 비용은 우리가 불필요한 CO2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인당 가용한 생태 용량(Bio-capacity)이 0.5헥타르로 0.7헥타르인 북한, 0.8헥타르인 중국보다도 작다. 일본은 0.7헥타르, 미국은 4.7헥타르로 가장 크며, 프랑스는 3헥타르, 영국은 1.6헥타르이다. 우리의 생태 용량은 세계 평균인 1.8헥타르나 아태 지역의 평균인 1.0헥타르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자원의 경제 성장 단위당 사용 효율이 가장 낮은 생산-소비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생태 발자국을 보면, 일본과 유럽, 미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 각기 다른 수준의 생태효율성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생태 발자국에서 볼 때 일본은 경제 성장 패턴의 생태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 주거, 도시 계획,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계 등 많은 면에서 에너지와 생태 자원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미국식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과연 일본식의 패턴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의 패턴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향후 지구의 생태-환경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3) 중국의 사례

생태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측정 방법과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경제 성장이 다양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경제 성장에 대한 생태효율성을 측정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제 1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자원절약 환경 친화적인 사회”(Resource Efficient & Environment Friendly Society, REEFS)를 설정하고, 단위 경제 성장을 위해 소요되는 주요 자원의 양과 환경오염의 양을 측정 한 자원-환경 성과지표 (Resource-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REPI)를 개발하여, 주요 52개 국가에 대한 자료와 중국 내 각 지역별 지표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자신들의 자원 사용 효율성과 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지표가 포괄적이고 완벽한 생태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성장과 직결된 주요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생태에 대한 영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생태효율성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GDP 통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자신들의 경제 성장의 질을 파악하고, 특히 자원 사용과 환경에 대한 오염 최소화 면에서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처럼 일인당 생태 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인구 밀도는 높으며, 단위 면적당 경제 생산-소비 활동의 밀도가 높고,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나라야말로 우리 여건에 맞는 생태효율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따른 자원 위기와 기후 변화와 같은 생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기존의 GDP 총량 확대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성장의 질 향상 위주의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하겠다.

3.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 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녹색화를 통해 생태효율성을 높이고 성장과 환경 간의 조화와 함께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며 시의적절한 비전(vision)이라고 하겠다. 대통령도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였듯이, 제한된 생태 용량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구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삼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 발전 역사상 이미 선진국이 된 유럽,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도 그들이 우리처럼 아직도 개발 도상 단계 또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으며, 현재 발전 도상에 있는 어느 다른 개도국들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노력은 세계 경제 발전사에 유례가 없는 선구자적인 노력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거의 항상 선진 국가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왔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우에는 벤치마킹할 나라나 모델이 없다. 일각에서는 유럽 등의 일부 국가들이 이미 녹색성장에서 우리를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제조업 단계를 넘어선 후기 산업 사회의 경제 구조를 가진 서비스와 지식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로 우리와는 경제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며, 우리의 경우처럼 경제 구조가 제조업 위주의 단계에 있으면서 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탈동조화(de-coupling)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정책들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들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전략과 10대 추진 방향,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은 우리와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별로 없는 선도적인 노력이며, 다른 개도국들이 참

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모델을 우리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녹색 성장 전략은 기존의 경제와 환경에 대한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의미가 있다.

니콜라스 스텐 경이 “스텐 보고서”에서 향후 GDP의 5~20%에 달할 기후 변화의 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매년 GDP의 1~2%를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였듯이, 현재까지의 경제와 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은 환경에 대한 대처가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스텐 보고서”의 결론도 우리가 장래에 기후 변화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GDP의 1~2%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환경 간의 관계를 Zero-Sum 게임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기후 변화에 투자를 한다면, 장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 기술 개발과 시장의 형성을 통해 오히려 더욱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접근 방식이다. 즉,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Win-Win 게임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기후 변화라는 생태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Win-Win 게임이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기후 변화 경제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니콜라스 스텐 경도 아직 그러한 경제학 모델이 충분히 제시된 예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왜냐하면 아직 어느 나라도 그러한 접근 방식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창의성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 위기, 생태 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생태효율성 개선 방향

기후 변화라는 생태 위기와 자원 위기에 동시에 대처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는 만큼, 생태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로는 가격 구조,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소비 패턴-라이프 스타일, 녹색 기술과 산업 구조를 꼽을 수 있다.

1) 가격 구조

“스틴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의 실패”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시장의 실패라는 뜻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시장 가격이 기후 변화의 생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수준의 화석연료를 사용토록 조장하여 기후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경제학 교과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듯이, 생태 자원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도 역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탄소, 오존층 등과 같은 생태 자원의 경우 대부분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생산 비용과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은 반영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비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불하는 화석연료의 시장 가격과 생태 비용을 반영한 생태 가격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여기서 생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충분히 억제하여 기후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준의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가격보다는 월등히 높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가격이 높을수록 생태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도 높다는 것은 다양한 OECD의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화석연료를 포함한 각종 생태 자원의 시장 가격을 올려서 생태 가격 간의 격차를 줄여 주는 것이다.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도물 가격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일인당 수도물 사용량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003년도 OECD의 국가별 물 자원 이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물 가격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 자원의 시장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격 구조의 조정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와 산업 경쟁력

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까지 높다는 것을 이미 OECD의 각종 보고서들이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세원(稅源)을 소득에서 탄소로 바꾸어 주는 생태 세제 개혁(Eco-Tax Reform, ETR)을 통해 소득세를 낮추고 탄소세를 높여 나가면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총액 - 즉 세수는 늘리지 않고 동일하게 -을 유지(Revenue Neutrality)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고용과 성장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이 이미 이러한 세제로의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시행을 통해 실제로 이중배당 효과를 거두었다고 OECD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생태 세제 개편(ETR)은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탄소세를 늘림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생태 자원의 가격이 되는 에너지와 탄소의 가격을 높여서 생태효율성을 개선하며, 동시에 고용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탄소세만을 높인다면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산업계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우나, 생태 세제 개편의 경우에는 세금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만큼 보다 용이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도 친환경적 세제 개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중배당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추진 방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비용을 무시하거나, 값싼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자원 및 생태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생태 자원의 생태 가격을 반영한 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간접자본 시설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운용 구조라고 한다면, 교통체계나 건물, 도시설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조물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위

낙 싸고 기후 변화 문제가 인식되기 이전에는 교통체계나 건물, 도시 설계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나 생태효율성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나, 기후 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에너지와 생태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교통체계의 경우와 같이 자가용 위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위주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 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나가야 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과 창호의 단열을 강화하고 도시의 설계도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선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가 경제 전반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심각한 교통 체증이 물류 운송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과 신문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75년~2006년 동안 우리의 경제 규모가 7.6배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는 7.4배 늘어났으나, 수송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15.8배 증가하여 10.8배가 늘어난 산업 부문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다.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물류 운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의 교통체계, 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해와 참여도 또한 중요하다.

3) 소비 패턴-라이프 스타일

우리 경제의 생태효율성 향상에 있어 가격 구조,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아울러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의 인식 구조와 생활양식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가용과 각종 가전제품, 아파트의 크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소비 부문이 에너지 소비와 생태효율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생태 발자국이 보여 주듯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의 3분의1 수준이나, 소비 수준은 선진국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소득 수준 대비 생태효율성은 소득이 향상될수록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도 소비자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대형 자가용과

대형 가전제품만을 선호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생태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신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일으킬 기후 변화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의식 구조가 자리 잡아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생태 세제 개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 생태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가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생태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1992년 개최된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21세기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Agenda-21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을 중요한 문제로 규정한 바 있으며, OECD에서도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소득의 상승에 따른 과소비가 향후 주요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제를 다루어온 바 있다.

일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라고 하면 소비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소비가 줄면 성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나, 지속가능한 소비는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성장, 즉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녹색 기술과 산업 구조

가격 구조, 사회간접자본 시설, 소비자의 의식 구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 즉 녹색 기술이 부족하다면 생태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녹색 기술의 개발과 향상에 대해 적극적인 R&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녹색 성장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아울러 녹색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녹색 기술이 개발 초기에는 상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계와 정부가 효과적인 R&D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

나는 정부가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의 기준 등과 같은 각종 환경 기준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환경 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개발된 기술도 수요와 시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 환경 기준은 기술 개발의 촉진제 역할도 할 뿐 아니라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산업계에서는 환경 기준의 강화에 대해 부담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경 기준의 강화가 에너지 효율 강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고 소비자들도 높은 환경 기준의 제품을 선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가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이므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미 OECD에서도 경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환경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경제 규제와 환경 규제가 혼동되어 경제 규제 완화 조치들이 환경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산업 구조도 점진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중화학 공업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효과도 높은 서비스 및 지식 산업으로 구조를 고도화해 나갈으로써, 생태효율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경제 성장의 지표

기후 변화라는 생태 위기와 자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양이 아니라 성장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성장의 질이 생태효율성 개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면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는 과연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일까?

앞의 중국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생태효율성이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태 자원의 가격 수준,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소비의 생태 효율, 녹색 기술 수준, 환경 기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맞는 생태효율성 지표는 이러한 각 요소들의 효율성 수준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돗물과 전기처럼 생산 원가 이하의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생태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휘발유의 경우처럼 가격이 국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태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수준,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교통 체증 비용, 대중교통 분담률, 녹색 기술 수준, 환경 기준 수준 등을 종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통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생태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절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과 주요국의 녹색성장 추진 동향]

제3차 OECD 세계포럼 2일차(10월 28일) 오전의 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세션¹⁾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정책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에 대처함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동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강연회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원고를 통하여 한국과 주요국의 녹색성장 추진 동향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정책, 경제, 생활 등 전 부문에서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환경’, ‘탄소’, ‘녹색’, ‘자전거’라는 용어가 요즈음처럼 자주 언급되는 시기도 없었을 듯하다.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국가의 일치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녹색성장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더하여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글로벌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1) 동 세션에는 김상협(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 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 좌장), 에밀 살림(인도네시아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소렌 허맨슨(덴마크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 발표), 구자영(SK에너지 대표이사; 발표),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Stephan Albrechtskirchinger(세계에너지협의회 홍보담당국장; 토론)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으며, 산업 구조가 녹색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와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택하였다. <제3의 길>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인 기든스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저탄소 미래의 긍정적 모델을 창조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²⁾한 바 있다. 이렇듯이 우리 정부는 지금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여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못한 선택이 아닌, Early mover로서 앞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국제무대에서 녹색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긍정의 방향성이다.

익숙하지 않은 길에는 언제나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녹색성장은 당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된 위기관리와 대응을 통해 성장 기회를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추진 정책을 소개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동향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배경

● 지구 온난화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지구는 가뭄, 홍수, 폭염 등 기상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2030년에는 북극에서도 여름엔 얼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2) Anthony Giddens,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Polity, 2009), p1-16

다. 이제 지구 온난화는 극단적인 기후,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식량 부족, 동식물 멸종 등 인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2003년 유럽 폭염으로 약 3만 5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1500여 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액이 11조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 발표된 세계자연보호기금 보고서에 의하면, 북극 빙하가 녹으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홍수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³⁾

그간, 지구 온난화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 활동 등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태양의 운행 주기 또는 화산 활동 등 자연적 요소가 원인이며, 이상 기후 현상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IPCC⁴⁾ 제4차 보고서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듯이 산업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을 초래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IPCC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0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0.74°C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세기말 평균 기온이 6.4°C, 해수면이 59c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럴 경우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1,5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며, 생태계의 70% 이상이 멸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기상 이변에 예외일 수 없어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톤은 기후 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준 재앙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렇듯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향후 인류에게 닥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3) “북극빙하 녹으면 세계인구 25% 홍수 피해”, <연합뉴스> (2009.9.2), <http://news.naver.com/> (2009.9.15)

4)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 1988년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이다.

● 해외 동향

이러한 지구 온난화라는 지구촌 난제에 직면하여 세계인은 생존의 문제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범지구적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2년 190여 개국의 참여 하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에 교토의정서⁵⁾를 채택하여 선진국(Annex I)⁶⁾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 이상 감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 12월에 발리로드맵 채택을 계기로 2012년 이후의 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우 추가적인 감축 조치(Further Commitment)를 하고, 개도국은 국가별로 적합한 감축 조치(NAMAs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를 제시하도록 권고되었으며, 2009년 12월 코펜하겐 총회에서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기후 변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코펜하겐 총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기후 변화 협상은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기후 변화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과감한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행동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많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국, 인도, 우리나라 등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아니나 신흥 경제국으로 온실

5)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수정안으로,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회의(COP3)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6) Annex I에는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선진 38개국을 지정하여, 각 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각 국별로 1990년 기준 -8~10%로 차등하여 감축하도록 하였다. Annex I에 속해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92%, 26개국), 미국(93%),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94%, 4개국), 크로아티아(95%),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100%, 3개국), 노르웨이 (101%), 오스트레일리아(108%), 아이슬란드(110%)로 총 38개 국가가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가스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중국과 인도 등이 2013년 이후 기후 협약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新기후 체제는 무의미하다고 얘기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기준으로 세계 9위⁷⁾이고,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2013년 이후 기후 협약 체제에 관한 기후 변화 협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 에너지 위기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가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배럴당 20달러에 불과했던 유가가 2008년도 7월경에는 배럴당 140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4월에는 52달러까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최근에 또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가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에 따라 에너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세계 5대 1인당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심한 구조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변동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 시 GDP 증가율은 0.35% 하락, 물가는 0.23% 상승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 하락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중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8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1,415억 달러에 달하여 국내 총수입액의 32.6%를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총 수출액 1,109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의 동향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7)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2009.9)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도 미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석유 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석유 등 과도한 화석연료의 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는 에너지 위기와 함께 화석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화석연료의 현 사용 추세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우리나라 녹색 에너지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88%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주요 그린 에너지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7년 기준으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심한 전략 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녹색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

최근 2~3년 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근래에 경기 바닥론이 대두되면서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은 소비 부진, 투자 둔화 등 실물경제에서 하강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방국가의 경기 둔화,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은 어느 한 국가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중화학 공업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93년에 GDP 규모면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으로 11~15위로 성장에 있어서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등 낮은 고용지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일본과 호주의 적자폭 확대에 對 선진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對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무역 흑자가 실현되고 있어 대 선진국과 대 개도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탄소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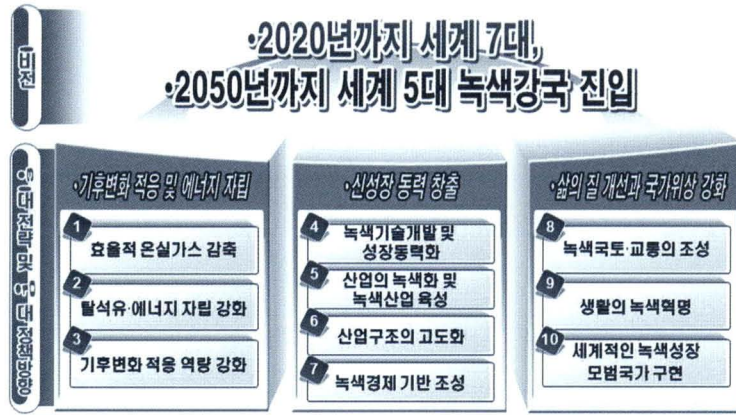
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과 녹색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남들보다 앞선 선도시장을 개척창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 규제 등 녹색보호주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및 추진 방향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경축사를 계기로 미래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발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자,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단순히 기후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즉, 환경을 고려하면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질적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이루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0년 1월 27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2005년 '아태 환경과 개발 관련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ESCAP 등에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6월말에는 OECD 각료이사회(한승수 총리가 의장)에서 '녹색성장'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이 가시화되었다. 2009년 7월에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및 재정 소요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채택하고,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의 2% 수준인 총 10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에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에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그림 1. 녹색성장 비전 및 정책 방향〉



출처: 녹색성장위원회(2009.7), 녹색성장 국가 전략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전략별 세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온실가스과 환경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에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세 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대비하여 각각 ① 21% ② 27% ③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 톤 CO₂) 대비 절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 8% 증가 ② 동결 ③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 감축 시나리오는 IPCC가 개도국에 권고한 15~30% 감축안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최근 15년 사이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두 배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감축 목표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년 중 적정한 시점에 감축 목표를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태

〈표 1. 녹색성장 비전 및 정책 방향〉

10대 정책 방향	세부 과제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배출 통계 관리 등 23개 과제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등 47개 과제
③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기후 변화 감시망 확충 등 49개 과제
④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Green Tech, 2015 Initiative 등 56개 과제
⑤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 산업 육성	녹색경영 확산,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 등 21개 과제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규 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등 36개 과제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금융 법제도 정비, 배출권 거래제 추진 계획 수립 등 54개 과제
⑧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	자원 순환형 녹색국토 구축 등 57개 과제
⑨ 생활의 녹색혁명	범국민 대상 녹색성장 평생교육 실시 등 32개 과제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선진·개도국 가교 역할 등 14개 과제

출처: 녹색성장위원회(09.8.15),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양열·풍력·지열·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원전 플랜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후 친화형 해양 관리 및 사전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주력 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은 물론 녹색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높은 비중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계가 앞으로 예상되는 녹색 보호 무역시대에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하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와 정부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녹색기술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따라서 녹색기술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녹색기술 분야별로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능동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녹색 R&D 투자와 그린 IT 지원을 확대하고, LED(Light Emitting Diode), 태양 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 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하고, 녹색기술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2009년 2% 수준에서 2012년 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08년 기준 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약 15% 수준인 녹색기술 개발 투자를 2013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2009년 1월에 도출된 27개 중점 기술에 대해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 상용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LED는 LED칩, 패키지 등 핵심 기술 개발에 2012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백열등,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동시에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 획득 전략, 핵심 지식 재산권 확보 전략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녹색기술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전략화를 위해 녹색기술의 표준 체제도 조속히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상세 전략 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전자, 철강 등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형의 기존 9개 경쟁 우위 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을 통해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을 확산시키고, Zero-Emission 산업 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며, 도시 광업 활성화 등 자원 순환형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2008년 12월에 수립된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신재생 기술 개발과 보급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원별 PRM(Product Road Map), TRM(Technology Road Map)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원 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보급 유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대폭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 개정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파급 효과가 큰 8개 전략 기술 개발 과제를 선정,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의 1,55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22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총매출액과 수출액이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신재생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2007년 135MW에서 2008년 450MW로 확대되고, 국산 풍력발전기도 2MW

급이 개발 완료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틀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를 차세대 IPTV, 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방송통신융합사업, 자동차건설 등 주력 산업에 IT를 융합시킨 사업,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 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의료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세제, 친환경 상품,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친환경적인 세제를 운영하고, 핵심 녹색인재를 육성하고, 녹색인력 수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9년 7월에는 자동차 연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자동차업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 원이 넘는 부동산금 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녹색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및 대출과 보증 확대, 녹색 PF(Project Financing) 확대, 녹색 예적금 상품, 녹색펀드 출시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 도시,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녹색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4대강, 새만금, 연안지역 등 녹색 지역 거점을 확대하고, 도시 내 다기능 생태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그린 빌딩과 그린 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을 둔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녹색소비, 생활 속의 녹색운동과 녹색생활 실천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녹색생활 실천 방법을 제시한 “녹색생활의 지혜”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소비문화에서 실생활의 녹색성장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 생활에 있어서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

에 대한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탄소 라벨링 인증 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를 3만 가구까지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소비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 효율 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 공간 창조도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 공동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함께 사는 지구촌에서, 대외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라는 국제 사회 공동 노력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소극적일 경우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이 있다. 경제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에 올라 있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2009년 12월에 개최 예정인 코펜하겐총회에서는 더 이상 기후 변화에 소극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녹색성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도국에 대한 녹색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⁸⁾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세부 추진 정책을 수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 기업, 소비자 중 어느 한 사회경제 주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사회경제 주체들이 모두 인식의 전환과 함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 달성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부문에서 녹색전환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녹색경영으로 전환하며, 소비자는 녹색소비 및 녹색생활양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8) ODA는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이 중 특정 지역 공중위생 관련 'brown ODA'와 대비하여 기후 변화, 종 다양성, 공해 및 수질 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를 'Green ODA'로 간주한다. (Hicks et al, 2008)(녹색성장위원회, 2009)

3) 동 정책의 기대 효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생활 방식, 근무 환경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와 사람이 함께 잘사는 길이다. 녹색성장으로 국가는 부강해지고, 사람은 건강한 행복을 이룰 것이고, 지구 환경도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에게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에 따라 동북아 내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미국, EU, 일본 주요 3개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저탄소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의 다자간 환경 협약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 전략 시너지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 변화 시장은 새로운 국제 협상과 외교 포지셔닝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 관리하여 기후 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여 녹색일류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2013년까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2020년에는 녹색성장을 통한 세계 7대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에서는 early mover로서, 이미 3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개도국의 모범사례를 제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여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전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5년간 녹색성장 투자를 통해 182조~20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6만~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2009년 6월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 투자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녹색투자를 확대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환경 하에서 LED, 스마트그리드, 탄소 저감 에너지 등 녹색 신사업 분야에서 녹색기술력을 축적하고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환경이 더욱 쾌적해진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오염 없는 청정 생활환경,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콘크리트가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페스티벌 광장, 야외 공연장, 수변광장, 예술광장 등 다양한 시설도 조성돼 문화예술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국민 개개인으로는 고효율 기기와 탄소 라벨링 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녹색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서민층에 대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향유하고,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뀌는 녹색혁명이 일어나 녹색선진국민이 될 것이며, 국가 브랜드도 높아질 것이다.

3. 선진국 및 개도국 사례

1)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동향

세계 각국은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녹색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와 위기를 긍정의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발 앞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동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 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시장과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녹색시장의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는 중이다. 선도자는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가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 설정 등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자국 내 규제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유리한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협약체제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반면 미국은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결성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추구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리더십 경쟁 하에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들은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닌 개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해 나갈 태세이다. EU와 미국 등 선진국은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탄소세,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 규제 등 녹색 보호주의의 움직임이 있다. 탄소 국경세,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함께 수출 및 제품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형 국가에는 부담과 제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기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U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하여 20% 감축하고 전력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바이오연료 10% 포함)로 높이는 '20-20-20' 법안이 2008년 12월 EU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이 발효되었다.⁹⁾ EU 기후변화 종합법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정, 회원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법제화,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 설정, 승용차 CO2 배출 기준 설정, 연료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7월에는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총리는 범 EU 탄소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럽의회는 2019년까지 EU내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완전 상쇄시키도록 하는 Zero-energy building(에너지 소비량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과 같거나 적은 고효율 건축물)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¹⁰⁾ 또한,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조명용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백열전구를 고효율 형광등이나 LED 등으로 대체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장 금번 9월부터 100와트(W)짜리 백열전구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2년 말까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40와트와 25와트 백열전구도

9) 'Council approves EU climate change package', <ENDS> (2009.4.6.), <http://www.endseurope.com/21076>, (2009.9.15.)

10) 'MEPs push back deadline for zero-energy buildings', <EurActiv> (2009.4.1.), <http://www.euractiv.com/>, (2009.9.15.)

판매가 금지되며, 2016년까지는 모든 백열전구가 유럽에서 사라지게 된다.¹¹⁾

독일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선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07년 8월에 「통합 에너지기후 변화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이용 등 3대 에너지 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9년 8월에는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국가발전계획에 5억 유로의 자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려는 일환으로 배터리 개발 등 연구 부문 및 전기 자동차 구매 인센티브로 사용될 전망이다.¹²⁾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1위의 풍력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1997년에 덴마크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삼소도(Samsø Island) 개발 프로젝트'를 우수작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삼소도」를 재생에너지 섬으로 지정하여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의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아닌 저소득저학력고령의 농부들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으로, 10년 내에 100% 재생에너지 자립의 섬, 100% 탄소 중립적인 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섬내 주요 전력 수요의 10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연소 공장 건설로 섬 난방의 70%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채기름을 활용하여 자동차·경운기 등의 연료로 사용한다.

당초 삼소도는 덴마크 중앙에 위치한 인구 4,200명, 면적 114km²의 작은 섬으로 66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섬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덴마크 평균소득보다 20% 이상이 낮은 섬으로 10년 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이 6만 5천 톤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마이너스 1만 5천 톤의 「탄소 네거티브 섬」으로 변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11) '유럽서 백열전구 사라진다', <한국경제신문> (2009.8.31), <http://www.hankyung.com/> (2009.9.15)

12) 'Germany seeks 1 million electric cars by 2020', <Pointcarbon> (2009.8.19), <http://www.pointcarbon.com/news/1.1194235>, (2009.9.15)

풍력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본토에 판매 중이다. 이렇듯 삼소도 프로젝트는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투자 소득 증대 등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삼소도가 재생에너지 섬으로 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아 최근 이 곳에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섬 내 고용 창출 및 관광 수입 증대, 섬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 등 다양한 간접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은 2008년 12월 세계 최초로 기후 변화 법안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할 계획이고, 향후 12년 동안 1,000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린 혁명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Renewable Obligation)를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변화기금(Environment Transformation Fund)을 통하여 저탄소에너지 신기술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 7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이행 백서를 발간하여 부문별 목표 수치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다.¹³⁾ 또한,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09년 9월부터 가계 등 각 부문이 201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 줄인다는 목표에 서약하도록 하는 10:10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각 부문별 지원 대책 및 모범 사례를 마련하였다.¹⁴⁾

네덜란드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수평선보다 낮은 치명적인 자연환경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체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상황에 있다. EU의 정책 목표 아래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기존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5%에서 2020년 2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액을 1990년 대비 30%까지 감축할 예정이며, Clean and Efficient Program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5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


13) 'UK adopts plan for low-carbon transition by 2020', <ENDS> ('09.7.15.), <http://www.endseurope.com/21802>, (2009.9.15.)

14) 'New plan to help homes cut emissions starts today', <Press Release> (2009.9.1.), <http://www.decc.gov.uk/>, (2009.9.15.)

도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6월 미 하원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1990년 대비 약 4%)하고, 2050년까지 83%를 추가 감축하며, 온실가스 미감축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안보 법안(Waxman-Markey)’을 통과시켰다. 또한 2009년 5월 연방정부는 연비 기준(2016년 1갤론당 35.5마일 : 1리터당 15Km)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미국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에서 2009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승인 하였다.

일본은 2007년 5월에 발표한 「Cool Earth 50」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후쿠다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감축(1990년 대비 8% 감축에 해당)하는 중기

〈표 2. 주요국 녹색성장 추진 내용〉

국가	주요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 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05)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20%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 (Directives)」 발표('09.4)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는 범 EU 탄소세 도입 요구('09.7.1)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세계 최초로 기후 변화 법안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08.12)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09.1)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2009년 예정) ·연방정부 연비 기준('16년 35.5mpg) 발표('09.5.19) ·미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등 14주가 '09년부터 시행 가능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승인 ('09.6.30) ·온실가스 미감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안보법안(Waxman-Markey)” 하원 통과('09.6.27)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1990년 대비 약 4%), 2050년까지 83% 감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 발표('07.5)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08)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하는 중기 감축 목표 발표('09.6.10)

출처: 녹색성장위원회('09.8.15),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2009년 4월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하여 전기 차, 천연가스 차, 하이브리드 차, 클린디젤 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해 자동차 중량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신 그린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일본,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하여, UN의 지구환경기금(GEF),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 등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을 하는 동시에,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Cool Earth Partnership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00억불 상당의 기금으로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20억 달러는 무상원조 및 기술지원 형태로 적응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개발청(DFID)와 환경부(DEFRA)가 공동 관리에 있는 개도국 지원 기금인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al Fund'로 3년간 8억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은 'International Climate Protection Initiative'라는 개도국, 신흥국, 동구권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2008년 1.2억 유로를 조성, 이 중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6천만 유로, 기후 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6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2억 달러의 Global Initiative on Forests and Climate 기금을 조성하여 주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최빈 개도국(LDCs)과 군소 도서 개발국(SIDS)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효과적 정책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를 발족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천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 적응, 삼림 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청정개발 체제 참여 확대, 자연재해 위험 방지, 기후 변화와 개발 전략 통합 등 5대 우선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만 2030년 이후 연간 1,040~1,440억 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¹⁵⁾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G77 등 개발도상국은 기존의 ODA 지원 외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이

15) 녹색성장위원회('09.7)에서 재인용, 원출처 : UNFCCC('09.3), Investment and Financial flows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 및 기술 지원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 개도국의 관련 정책 추진 동향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Post-2012 기후협력체제에서의 개도국의 참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중국과 인도 등 선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 크다.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미비한 상태에 있는 빈곤 국가와 생활 터전이 취약한 빈곤층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나타나고, 개도국의 빈곤 감축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¹⁶⁾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빈번한 자연재해로 이어져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식량 안보, 보건, 토지 이용과 환경 등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기후 변화 이슈는 개도국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개도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농업 등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2009년 4월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며, 쌀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고, 1990년 대비 2100년까지 이들 4개국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4.8도, 해안선이 70cm 상승할 것이며, 지역 전체가 2100년까지 GDP의 6.7%(세계평균 2.6%)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경작 감소가 필리핀의 경우 75%, 인도네시아의 경우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가 늦을 경우 식량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개시설 개선, 유통망 확충, 쌀 생산 장려를 위한 투자, 녹색성장 프로그램 마련 등이 권고

16) 2000년 9월 UN이 채택된 의제로, 세계 빈곤 수준을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자는 행동 계획

되고 있다.¹⁷⁾ 이러한 개도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개도국의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기후 변화 이슈 및 녹색성장에 대한 대응은 경제 발전 정도와 산업구조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5월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하였고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키르기즈, 브루나이, 중국 등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의 정책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동남아 저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한국에서 지원해 준 ODA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7년 이후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된 중국은 2008년을 기해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제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비를 GDP 대비 매년 4% 감축하여 5년 안에 20%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¹⁸⁾ 2009년 5월 발표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계획을 작성 중이다. 총 투자 규모는 2020년까지 약 2조 위안(한화 400조 원)으로 예상되며, 풍력(1조 위안)과 태양광(3천억 위안)이 주력 분야이다. 아울러 중국은 2007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기금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발표하였다. 재정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는 탄소세 도입 관련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중국의 제1위 해외 유전 개발 기업인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중국 산서성 따통(大同)에 300억 위안 규모의 석탄가스화 프로젝트 추진을 2009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인도는 지난 15년간의 공식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현재 세계 전체 CO2 배출량 중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2031년까지 인도의 온실가스

17) 'ADB: Climate Change to Hurt Southeast Asia', <Wall Street Journal> (2009.4.27), <http://online.wsj.com/>, (2009.9.15.)

18) 'China gives top priority to meeting challenge of climate change', <중국 Xinwha> (2009.2.2), <http://news.xinhuanet.com/>, (2009.9.15.)

배출량이 40~73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⁹⁾ 인도는 2012년 이후 기후협력체제 하에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그 대신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인도는 총리가 의장인 '기후변화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였다. 2008년 6월에는 기후변화행동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10,000MW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 사용 효율을 20%까지 제고할 예정이며, 23%의 녹지 수준을 3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 8월에는 Singh 인도 총리는 연간 에너지 사용의 5% 절감을 통해 1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내는 국가 에너지효율화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집약 기업에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ESCerts(Energy Savings Certificates) 거래를 허용하는 'Perform, Achieve and Trade(PAT)'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개 펀드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⁰⁾

다음으로 아세안 회원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은 기후 변화 이슈 대응을 위하여 정부 내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산업구조와 국가적 환경에 따라 환경문제를 국가 개발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7월 기후 변화 정책 수립 및 국제 협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7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기후변화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기후변화국가개발계획지침서(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Indonesia Response to Climate Change)를 발간하여 국가종합개발계획의 하부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0년간의 무분별한 천연림 개발 및 산불로 인한 열대림 황폐 등으로 국내 산업과 환경이 파괴되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어 황폐 산림 복구 및 열대림 보호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와 인도네시아 차관 공여국 등에서도 차관 공여 계획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황폐지 복구 조립 및 천연림 보전을 요구하였다.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탄소 배출권 조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자국 내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황폐 산

19) 'India admits emissions could treble over 20 years', <Pointcarbon> (2009.9.2), <http://www.pointcarbon.com/news/>, (2009.9.15.)

20) 'India to launch trading of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s', <Pointcarbon> (2009.9.2), <http://www.pointcarbon.com/news/>, (2009.9.15.)

림 복구 및 열대림 보호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인도네시아는 주요 21개강 유역 3백만ha에 대해 황폐지를 복구하여 조림하고, 산림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 사업(Forest and Land Rehabilitation Movement)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이 사업 종료 이후 2007년 11월부터는 “Green Movement”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열대림 국가의 권익 보호 및 Post-2012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주도로 “11개 열대림국회의(F-11)”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펄프, 합판 산업이 발달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친환경 자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기후변화 TF(Presidential Task Force on Climate Change, PTFCC)를 구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기후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2012년을 목표로 에너지 수요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 취약지역, 고위험 인구 집중 지역, 식량 생산 지역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한 집중적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 적응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ODA 기금, 기술 원조, 배출 허가권 판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방대한 인프라 구축 소요를 감안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탄소 교통, 에너지, 농업, 산업 및 주거를 위한 기술의 공유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2006년 12월 바이오연료법(Biofuel Act of 2006)을 제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연료 생산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공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를 조기 비준하였고, 기후 변화가 자연 자원, 환경, 사회경제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 변화 적응 방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2008년도 상반기에 기후변화대응국가목표프로그램(NTP: National Targe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초안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NTP의 전략 목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실현 가능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저탄소 경제 지향 성장 기회를 얻어 기후 변화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구의 기후체제를 보호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2006년 4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위원회(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를 조직,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등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개발 과제의 실행 및 협력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타 사업과 환경 분야를 결합하여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2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액션프로그램(NAPA)'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기후포럼('09.5월)에서 캄보디아는 2009년 1월부터 한국의 무상원조사사업(KOICA)과 UNESCAP의 지원으로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라오스는 2004년 2월 National Adaptation Program of Action(NAPA)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물, 산림, 토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국토의 70%를 녹화하고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수송체계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동아시아기후포럼('09.5월)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얀마도 이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석유와 디젤 사용을 줄이고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계획을 소개하고, 미얀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채택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태국은 2007년 6월 온실가스관리청(TGO/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을 설립하고, 국가 환경 질 강화와 보전을 위한 20년 정책과 장기 계획(1997-2016)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2008-2011)을 수립하여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R&D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 6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태국은 202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4기(4000MW) 건설 및 총 전력 수요의 9%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2002년 기준 0.5%에서 2011년 8%까지 확대키로 하고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CDM 프로젝트에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관리청은 재무부, 국영은행 등과 더불어 태국탄소기금(Thailand Carbon Fund) 조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9년 4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녹색기술 성장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에는 에너지 효율 증진과 제5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온 것이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제5의 에너지원 정책(2000년)”과 “제8차 말레이시아개발계획(2001~2005)”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기존 석유, 가스, 석탄, 수력

에 바이오매스,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추가되어 제5대 에너지원으로 지정되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는 바이오매스 분야(주로 팜유)이며, 그밖에 매립지가스, 광전지, 소규모 수력발전, 태양열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4월 이후 신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목표와 전략 정도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목표는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며, 전략으로는 모든 분야에서의 녹색기술 장려 및 효율적 시행, 신규 녹색사업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8년 3월에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을 발표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저탄소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기술 개발 강화 및 인력 양성,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싱가포르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지속성장 청사진(Blueprint for Sustainable Growth of Singapore)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의 중기 목표로 에너지원단위 35% 감축, 재활용률 70%로 제고, 기존 건물 80% 이상 녹색화 등을 설정하고, 실천 전략으로는 ①에너지 효율 제고(산업, 건물, 수송, 가정 분야별), ②도시 환경 업그레이드, ③녹색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개발도상국들도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Governance를 구축하고 경제와 산업구조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개발 역량과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강화하고 자국민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는 기후 변화와 녹색의 화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시의 적절한 정책 추진과 이에 필요한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공동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 경쟁력도,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은 환경 정책은 투자 정책이며, 이는 미래 성장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 성장에 국민 경제부터 생활, 국제 사회의 위상까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의 방향은 세 갈래이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고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삶의 질과 우리의 위상 제고이다. 녹색성장은 과거 요소 투입형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에서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녹색시장이 급성장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9년은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력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한편으로는 선진국들이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산업을 육성한 후 개도국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했듯이, 지금도 선진국 자신들은 이미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개도국에게 불리한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한 거라고 얘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혼자 고립되어 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료 수입과 상품 수출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서 지구촌의 시스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 변화, 에너지와 경제 위기 해결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지구촌의 문제 해결은 마치 공기와 같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더 나은 국제 사회의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력 체제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 계획 등 정책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의무 감축 대상 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이미 국제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협상의 핵심이슈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행동(NAMAs)에 대해 포괄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2008-2012년간 2억 달러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통해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개도국에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며, 20세기에 식민지 지배, 전쟁, 극단적 빈곤 등 개도국의 보편적인 고통 유형을 모두 극복하고 사상 유례가 없는 고

속 성장을 달성한 저력을 보였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1년 반만에 극복해 내고 IT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IT 강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도 있다. 이제는 녹색성장으로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때이다. 녹색성장은 지구적인 친환경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정부가 녹색산업, 기술, 생활 전반에 걸쳐 큰 관심 속에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때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의 변화 속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7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7
- 녹색성장위원회 : 기후변화협상 워크숍 자료집, 2009.7
- 외교통상부 :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 사례집, 2008.11
- 외교통상부 : 2009년 동아시아 기후포럼 결과(2009.5.29), 2009.7
- 지식경제부 : 녹색성장 해외정책 연구, 2009.7
- 녹색성장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2009.8.15
- Anthony Giddens :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Polity, 2009
- OECD/IEA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STEDI MEDIA, 2009

부 록 1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내의 주요 연사

제 3차 OECD 세계포럼 국내외 주요 연사

일시		세션		초청 연사
10.27. (화)	11:30~12:30	전체	개회식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이인실 (한국 통계청장)
	09:30~11:00	부문	발전 측정 : 새로운 증거, 새로운 이니셔티브	이영선 (한국 한림대 총장)
	14:00~16:00	전체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다닐로 튀르크 (슬로베니아 대통령) 바데 오마르 알다파 (UN 서아시아 경제위 사무총장) 세르게이 스테파신 (러시아 감사원장)
	16:30~18:00	전체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김중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예니 클루크만 (UNDP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장)
10.28. (수)	09:00~10:30	전체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장 뵈 필루시 (프랑스 국립경제동향조사국 대표)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데이비드 그린 (호주 재무국 거시경제그룹 국장) 팔리 레홀라 (남아프리카 통계청장) 현오석 (한국 KDI 원장)
	11:00~12:30	부문	OECD 국가의 웰빙 측정	크리스토퍼 호에니 (미국 현행지표 대표) 이재열 (한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덕진 (한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인적 자본과 능력 배양	파올로 세스티토 (이탈리아 중앙은행 구조경제분석부 부장) 권대봉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불평등	수만 베리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원윤희 (한국 조세연구원 원장)
			신뢰 측정과 형성	벤 리머 (호주 총리실 차관) 김용학 (한국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4:30~16:00	전체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파브리izio 바르카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국장) 제프 멀건 (영국 YOUNG 재단 대표) 양수길 (한국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6:30~18:00	부문	국가 통계인의 역할	샤이다 바디이 (세계은행 개발데이터그룹 국장) 제프 바스켄드 (뉴질랜드 통계청장) 이재창 (SI 차기 회장, 한국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	김상협 (한국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 구자영 (한국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에밀 살림 (인도네시아 전 환경부 장관) 소렌 허맨슨 (덴마크 삼소에너지연구소장) 강성진 (한국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의회 역할			이혜훈 (한국 국회의원)	
일다운 일과 직장에서의 웰빙			김영기 (한국 LG전자 지원부문장 부사장)	

일시		세션	초청 연사	
10,29. (목)	09:45~11:00	부 문	모자보건 및 신생아 돌봄 분석 및 개선	크리스토퍼 머레이 (미국 워싱턴대 보건지표 판정연구소 소장)
			기후 변화	폴 디킨슨 (영국 탄소배출 공개 프로젝트 대표) 정래권 (한국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삶의 질	리처드 레이어드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로즈마리 카두루 (우간다 개발연구소) 김세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1:30~12:45	부 문	아동 웰빙	이양희 (한국 성균관대 교수)
	14:30~16:00	부 문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이승규 (한국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소장)
시민사회의 역할			신혜수 (한국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스티브 키멜리아 (호주 Global Peace Index 설립자) 김진현 (한국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정책 입안자에 대한 책임 부여			아르투로 곤잘레스 드 아라곤 (멕시코 감사원장)	
16:30~18:00	전 체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권태신 (한국 국무총리실 실장) 안토니오 마르자노 (이탈리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10,30. (금)	11:30~13:00	전 체	향후 과제 : 이행 약속 및 결론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 엔리코 지오바니니 (이탈리아 통계청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 OECD Secretary-General)

참 | 여 | 세 | 선

개회식/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Opening Session/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In a Time of Crisis
1일차(10,27,화), 11:30~12:30, 개회식/1일차(10,27,화), 14:00~16:00, 전체회의

<학력>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경제학 학사
영국 리즈대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1994~1998 멕시코 외무부 장관 역임
* 대화와 합의구축을 특징으로 한 글로벌 이슈 접근법으로 인정받음
1998~2000 멕시코 재정공공신용부 장관 역임
* 금융위기를 재발시키지 않고 행정 변화를 통해 경제를 조정한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
2006 (현) OECD 사무총장 역임
* 경제정책이슈에 대한 글로벌 대화와 논의의 허브로서 OECD의 역할 강화/OECD 내부의 개혁과 현대화 단행

<주요 활동>

모든 사람을 위한 물 재정에 관한 국제대책본부 의장
캐나다 기반 국제정치혁신센터 국제정치인문이사회 회원
캐나다 국제의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글로벌리스트 상 최초 수상



이인실 한국 통계청장
(Insill Yi, Commissioner, Statistics Korea)

참 | 여 | 세 | 선

개회식/삶의 질

Opening Session/Quality of life

1일차(10.27,화), 11:30~12:30, 개회식/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회의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1989~1990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1992~1999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 팀장
- 1999~2003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선임연구위원)
- 2003~2006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실장
- 2004~2007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여성 경제학자들 간 경제문제와 여성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층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립에 초석

- 2006 (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2009 (현) 한국 통계청장 역임

<주요 활동>

- 1995 한국금융학회 이사
- 2002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민간위원
- 2003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계전문위원



이영선 한국 한림대 총장
(Young-Sun Lee, President, Hallym University, Korea)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 : 새로운 증거, 새로운 이니셔티브
Measuring Progress: New Evidence, New Initiatives

1일차(10,27.화), 09:30~11:00, 부문회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1970~1976 한국은행 근무
- 1974~1978 미국 메릴랜드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원
- 1978~1981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1981~1986 연세대학교 부교수
- 1986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 1991~1995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센터 소장
- 2001~2002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 2002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 2003~2004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2007 제37대 한국경제학회 회장
- 2007 (현) 한국과학기술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 2008 (현)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 2008 (현) 한림대학교 총장

<저서>

- 『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2003)
-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1996)
- 『경제계획론』 (1989)



다닐로 튀르크 슬로베니아 대통령
(Danilo Türk, President of Slovenia)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In a Time of Crisis

1일차(10,27,화), 14:00~16:00, 전체회의

<학력>

슬로베니아 베오그라드 대학교 법학 석사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법학 박사

<경력>

- 1982~1992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법학과 교수
- 1983~1992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국제법 연구소장
* 국제사면위원회와 협력하여 구 유고슬라비아의 인권 문제 연구
- 1984~1992 유엔 차별철폐와 소수자보호 소위원회 위원
* 1991년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
- 1990~ 슬로베니아 국회 헌법위원회 위원
* 슬로베니아 헌법 중 인권 부문 공동 저자
- 1992~2000 슬로베니아 주UN대표부 대사
* 코소보, 이라크, 리비아, 콩고 등 현안
- 1998~1999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장
- 2000~2005 UN 정치외교 사무총장보 역임
* 코소보, 팔레스타인, 레바논, 미얀마, 북한, 동티모르 등 현안 연구
- 2005~2007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 국제법 교수
- 2007 (현) 슬로베니아 대통령
*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진보성향 정당 연합체의 지원으로 당선



바데 오마르 알다파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Bader Omar Al Dafa, Executive Secretary of UNESCWA)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In a Time of Crisis

1일차(10,27,화), 14:00~16:00, 전체회의

<학력>

미국 웨스턴미시간대학교 정치학·경제학 학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공공정책학 석사

<경력>

러시아 연방, 프랑스, 이집트, 스페인, 미국 카타르 대사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스위스, 멕시코 비상주대사
미주기구(OAS) 상임감사
* 아랍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미국 내 기타 비주류 인구에 대한 교육과 예술의 접근권 향상 위해 노력
카타르 외무부 유럽및미주문제국장
2007 (현) 유엔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주요 활동>

카타르 재단 통한 카타르 교육 향상 노력
* 도하 “교육 도시” 내 유망한 미국 대학 설립 추진
다양한 종교 지역사회를 조정하며 카타르의 종교적 자유 후원



세르게이 스테파신 러시아 연방 감사원장
(Sergey Stepashin, Chairman, Accounts Chamber of the Russian Federation)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In a Time of Crisis

1일차(10,27,화), 14:00~16:00, 전체회의

<학력>

- 구 소련 내무부 고등정치학교 졸업
- 군사 및 정치 아카데미 졸업
- 러시아 연방 정부 금융 아카데미 졸업

<경력>

- 1990~1993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표, 러시아 연방 국방 및 안보 최고 이사회 위원회 위원장
- 1993~1998 러시아 안보부 차관, 러시아 연방 방첩 업무 감독, 연방 안보 서비스 감독, 국가 행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 1999 러시아 연방 총리 및 러시아 연방 두마*의 부의장으로 선출
* 제정 러시아 의회
- 2000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임명
- 2002~2005 유럽최고 감사기구 회장
- 2005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으로 감사원장 재임명



김중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Choongsoo Kim,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of
Korea to the OECD)

참 | 여 | 세 | 선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Progress for the People through People

1일차(10.27.화), 16:30~18:00, 전체회의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1983~1989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89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부원장
1991~1993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993~1995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1995~1997 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주 프랑스 대사관 공사)
1997 재정경제원 경제부총리 특별보좌관(1급)
1997~1998 한국 조세연구원 원장
1998~2002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교수
2002~2005 제11대 한국개발연구원장(KDI)
2004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민간자문위원
2005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6 미래와 경제 정책개발위원장
2007~2008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
2008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08 (현) 주OECD대표부 대사

<저서>

『주택보급현황과 당면과제』 (1984)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1986)



예니 클루크만 UNDP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장
(Jeni Klugman, Director,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참 | 여 | 세 | 셴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Progress for the People through People

1일차(10.27.화), 16:30~18:00, 전체회의

<학력>

영국 옥스퍼드대학 개발경제 · 법학 석사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 박사

<경력>

1991~1992 UNDP 인간개발보고서 작성에 참여
세계은행 에티오피아 · 수단 수석 경제학자
* 수단 연합평가미션 지휘

세계은행 빈곤그룹 수석 경제학자
* 빈곤퇴치전략 보고서의 개념화와 착수에 기여

UNICEF, ADB, WIDER 자문관

(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장

* 경제학자로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빈곤·노동시장·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관리에 기여하는 등 인간개발 활동에 주력



장 뵈쉴 피뚜시 프랑스 국립경제동향조사국(OFCE) 대표
 (Jean-Paul Fitoussi, President, The French Economic Observatory)

참 | 여 | 세 | 셴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s to Measure Progres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 법학 및 경제학 박사

<경력>

1979~1983 플로렌스 유럽연구대학교 교수

1984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방문교수

1990~1993 유럽부흥개발은행 경제위원장

2000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고문

프랑스과학연합상 수상 및 레지옹 도뇌르 수훈

(현) 프랑스 파리정치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경제연구소장

* 연구주제는 인플레이션·실업·자유무역의 이론 및 거시경제정책의 역할

(현) 프랑스 국립경제동향조사국 대표

<저서>

『현대 거시경제 이론』(1983)

『유럽의 슬럼프』(1988)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2001) 수상자
(Joseph Stiglitz,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Columbia Univ. USA)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s to Measure Progres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애머스트대학 학사
캠브리지대학교 및 옥스퍼드대학교 석사수료
M.I.T 경제학 박사

<경력>

1966~1967 M.I.T 경제학과 조교수
1967~1974 예일대학 경제학연구재단 및 경제학과 교수
1974~1976 스탠포드대학 경제학 교수
1976~1979 옥스퍼드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1979~1988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교수
1993~1995 OECD 경제정책위원회 의장
1993~1997 미국 경제자문관이사회 회원 및 위원장 활동
1997~2000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겸 수석경제학자
2001 노벨 경제학상 수상
* 비대칭정보시장이론으로 '정보경제학'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
2008 (현) 사르코지 자문,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현)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저서 및 주요 활동>

「세계화와 그 불만」(2002)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2006)

* 미 행정부 및 IMF, IBRD,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문제점 비판

Ford재단, 에너지정책연구, 미국 국무부, OECD, 세계은행 등 자문활동
글로벌개발센터이사회, 국제노동기구위원회, 국제경제협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약 관련 등
다수 국제기구 위원 및 위원장 등으로 활동



데이비드 그윈 호주 재무부 거시경제그룹 국장
(David Gruen, Executive Director, Macroeconomic Group, The Treasury, Australia)

참 | 여 | 세 | 선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s to Measure Progres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생리학 박사
호주 국립대학 경제학 박사

<경력>

호주 국립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구과학자
1991~1993 미국 프린스턴대학 우드로 윌슨 대학원 경제학과 방문교수
호주 준비은행 경제 분석 및 연구팀 연구원
1998~2002 호주 준비은행 경제연구팀장
2003 (현) 호주 재무부 거시경제그룹 국장



팔리 레홀라 남아프리카 통계청장/PARIS21 공동의장
(Pali Lehohla, Statistician General of South Africa/
Co-Chair of PARIS21)

참 | 여 | 세 | 셴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s to Measure Progres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가나대학교 인구학과 졸업
레소토대학교 경제학 및 통계학 학사

<경력>

1982~1992 보푸타츠와나 통계청 인구통계학자
* 1985, 1991 보푸타츠와나 센서스 관리
1992~1995 NW Prov 통계청 과장
1995~2000 남아프리카 통계청 인구조사국장
* 1996 남아프리카(SA) 센서스 관리
(현) 남아프리카 통계청장/PARIS21 공동의장 역임



현오석 한국 KDI 원장
(Oh-Seok Hyun,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참 | 여 | 세 | 셴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s to Measure Progres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1973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 1976~1985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 1982~1984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 1984~1986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 1986~1987 경제기획원 인력개발기획과 과장
- 1989~1991 세계은행(IBRD) 조사부 연구원
- 1993~1996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 1996~1997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심의관
- 1999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 1999~2000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 실장
- 2001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
- 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재정금융위원
- 2004 (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2004 (현) FTA 민간자문회의 위원
- 2007 (현) 관세청 FTA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8~2009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크리스토퍼 호에닉 미국현황지표 대표
(Christopher Hoenic, President & CEO, The State of the USA)

참 | 여 | 세 | 셴

OECD 국가의 웰빙 측정
Nat'l Initiatives to Measure Well-Being, Societal Progr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ECD Countries

2일차(10.28.수), 09:00~10:30, 전체회의

〈학력〉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 학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국제정치·법·경제학 석사
Tufts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플래처 스쿨(Fletcher School) 법·외교학 석사

〈경력〉

정보기술 및 통신 산업 관련 기업 설립 및 운영
* 대규모 통상 및 정부 조직의 임무수행 개선을 위한 지식기반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복잡한 문제 해결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모델 개발
* 이를 바탕으로 인간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에 투자, 상업화, 특허 취득
CIO매거진 리더십 관련 칼럼니스트
* 편집의 우수성 인정받아 국가 상 수상, 현재 전 세계 1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됨
맥킨지 컨설팅 컨설턴트
(현) 미국회계감사원(GAO) 정보관리 및 기술문제 국장
* 미국 21세기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환을 위한 회계감사원의 노력을 조정, 이에 대한 하나의 발의로서, 미국 발전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 핵심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대표

〈저서〉

「문제 해결 여행」
* 대규모 전문적 문제 해결의 실천에 관한 저서



이재열 한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Jaeyeol Yee, Professor,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 Korea)

참 | 여 | 세 | 션

OECD 국가의 웰빙 측정
Nat'l Initiatives to Measure Well-Being, Societal Progr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ECD Countrie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의회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1997~200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2000 (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편집위원
2000~200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2002~2003 미국 워싱턴대학교 객원교수
2003~2004 한국이론사회학회 운영위원
2004~2007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2006 (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08 (현)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저서〉

『사회과학의 고급통계분석』 (2005)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저, 2006)
『시계열로 분석한 한국사회의 사회 안전지표』 (2006)
『양극화와 한국사회』 (2006)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2006)
『신뢰와 사회의 질』 (2007)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2008)



장덕진 한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Dukjin Chang, Professor,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 Korea)

참 | 여 | 세 | 선

OECD 국가의 웰빙 측정
Nat'l Initiatives to Measure Well-Being, Societal Progr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OECD Countrie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회의

<학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1999~2002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
200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2006~2007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방문교수
2007 (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파올로 세스티토 이탈리아 중앙은행 구조경제분석부 부장
(Paolo Sestito, Chairman, Employment, Labor & Social Affairs Committee, Bank of Italy)

참 | 여 | 세 | 션

인적 자본과 능력 배양
Human Capital and Building Capabilitie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의회의

<학력>

이탈리아 나폴리대학교 경제통상학 학사
이탈리아 ISTAO대학 경영학 석사
영국 LSE대학 경제학 석사

<경력>

1984~1985 이탈리아 은행 밀란 지점 감사과 보조어시스턴트
1986~1991 이탈리아 은행 연구과 “비즈니스 사이클 및 단기 예측” 부서 경제학자
1991~1992 이탈리아 은행 연구과 “비즈니스 사이클 및 단기 예측” 부서 팀장
1992~1997 이탈리아 은행 연구과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부서 팀장
1997~1999 유럽위원회 DG ECFIN 경제자문관
1999 이탈리아 노동부 경제자문관
* 공공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담당/ 고용정책, 사회 상황 및 연금문제에 관한 수편의 보고서 작성/
2001년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하는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백서 작성팀에 참여

(현) 이탈리아 정부 노동및사회정책부 수석경제자문관



권대봉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Dae-Bong Kwon,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참 | 여 | 세 | 선

인적 자본과 능력 배양
Human Capital and Building Capabilitie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회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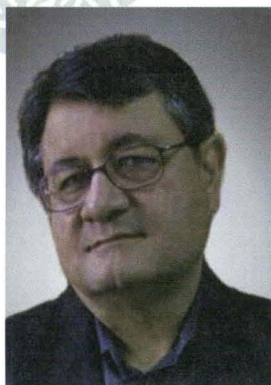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미시간주립대 문학석사
- 미국 미시간주립대 철학박사

<경력>

- 1990~1991 미국 미시간주립대 사범대 교육행정학과 조교수
- 199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1903~2005 서울평생교육연합 초대회장
- 2004~2006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및 한국평생교육학회 제22대 회장
- 200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2008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저서>

- 「평생학습사회교육」
- 「글로벌인재의 조건」
-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종합적 고찰」



수만 베리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 위원장
(Suman Bery, Director General, 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India)

참 | 여 | 세 | 선

불평등

Can we talk about progress when Inequality is growing?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회의

<학력>

옥스퍼드대학교 Magdalen College 학사
프린스턴대학교 공공행정학 석사

<경력>

인도 내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경제학자

* 인도 경제성장원동력, 개혁절차, 인구동향, 소비자시장기회, 중국과의 관계 등이 전문분야

1992~1994 인도 봄베이 준비은행 특별고문관

* 재정정책, 기구개혁, 시장개발및법률에 관한 주지사 자문

1972~2000 세계은행에서 다양한 역할

*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담당 수석 경제학자

2001 (현) 인도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 위원장

「인도 정책 포럼」, 「Margin: 응용경제연구저널」 포함 다양한 경제보고서의 발행인 및 수석편집인



원윤희 한국 조세연구원 원장
 (Yun Hi Won,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참 | 여 | 세 | 셴

불평등
Can we talk about progress when Inequality is growing?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의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1992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 2000~2005 행정자치부 정책평가자문위원회 위원
- 2000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
- 2001~2005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단장
- 2001~2003 국세청 소득표준(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 2003~20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200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화위원회 위원 및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운영이사
- 2005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근로소득보전세제연구기획 단원
- 20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07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대학원장 및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소장
- 2007 (현)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2008 (현) 한국재정학회 회장
- 2008 (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저서>

- 「주요국의 지방재정」 (1996)
- 「한국 조세제도의 선진화」 (1995)
- 「지방재정론」 (1993)



벤 리머 호주 총리실 차관
(Ben Rimmer, Deputy Secretary,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참 | 여 | 세 | 셴

신뢰 측정과 형성
Measuring Trust, Building Trust in a Time of Crisi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의회의

<학력>

호주 멜버른대학교 문학 및 법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MBA

<경력>

멜버른 교향악단, 호주 청소년 교향악단 및 기타 악단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
비영리분야에서 오랜 자원봉사활동

* 2002년 BCG 무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Noel Pearson과 활동 및 Cape York지역 토착민 지역사회 위한 활동

보스턴 컨설팅그룹 런던 및 멜버른 사무소 프로젝트 리더
호주 빅토리아주 사회정책국장/정책내각 사무국장

* 호주 정부국가개혁의제 이사회 관련 작업

(현) 호주 총리실 차관

* 중장기 전략정책 고문, 호주 정부 내 실행과 전달 이슈에 관한 총리 고문 담당



김용학 한국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Yong-Hak Kim, Professor, Sociology, Yonsei Univ., Korea)

참 | 여 | 세 | 션

신뢰 측정과 형성
Measuring Trust, Building Trust in a Time of Crisis

2일차(10.28.수), 11:00~12:30, 부문회의

<학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경력>

1992~ (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96~1997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9~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위원회 위원
1999~ 과학기술부 뇌과학심의위원회 위원
2004~ 한국 사회이론학회 부회장

<저서>

「고신뢰 사회를 향한 연결망 구축 방안」 (1997)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1998)
「소기업 연결망에서의 신뢰 창출」 (2000)
「경제위기의 충격과 신뢰 위기」 (2000)
「비교사회학」 (2000)
「사회 연결망 이론」 (2004)
「인터넷 시대의 사회적 위험」 (2006)
「온라인 사회연결망의 구조 분석」 (2006)
「사회 연결망 분석」 (2007)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2008)



파브리시오 바르카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국장
(Fabrizio Barca,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taly)

참 | 여 | 세 | 셴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New Measures, New Policies

2일차(10.28.수), 14:30~16:00, 전체회의

<학력>

이탈리아 로마대학 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석사

<경력>

1989~1990 미국 MIT 공대에서 연구수행
1994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연구수행
MIT · 스탠포드 · 보코니 · 모데나 · 파리 · 시에나 · 로마 · 파르마 대학교에서 경제개발, 기업재무, 이탈리아경제사 강의
이탈리아 중앙은행 연구개발과장
이탈리아 재무부 개발정책과장
OECD 지역정책 위원장
(현)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국장

<주요 활동>

기업이론, SMEs에 대한 증거, 기업지배구조, 이탈리아 자본주의와 지역정책의 역사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 발행

* 2009 독립 보고서인 유럽위원회의 '유대정책 강화를 위한 의제' 를 작성



제프 멀건 영국 Young 재단 대표
(Geoff Mulgan, Director, Young Foundation, UK)

참 | 여 | 세 | 선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New Measures, New Policies

2일차(10,28,수), 14:30~16:00, 전체회의

<학력>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교 전기통신학 박사
영국 옥스퍼드 발리올대학교 최고학위

<경력>

1993~1998 런던 싱크탱크 데모스(Demos) 설립 및 이사

* 영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인정받음

1997~2004 영국 정부 전략부서장, 총리실 정책실장

(현) 런던정경대학교 · 런던대 · 멜보른 대학 객원교수 역임 등 전 세계 30여 개국 강의

(현) 영국 Young 재단 국장

* 사회혁신·사회사업·공공정책에 관한 선도적 국제센터

<저서 및 주요 활동>

「좋은 파워와 나쁜 파워: 정부의 이상과 배신」 (2006)

「공공 전략의 기술 - 공익을 위한 영향력과 지식 동원」 (2009)

다양한 사회전략 분야, 원거리통신 · 투자 분야 등의 자문관으로 활동

고든 브라운 의원의 수석자문관 및 전 세계 수많은 정부의 자문관으로 활동

영국과 아일랜드의 미래 시민사회에 대한 카네기 연구 의장

BBC-TV 및 라디오 리포터 겸 국내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양수길 한국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Soogil Young, President, National Strategy Institute, Korea)

참 | 여 | 세 | 선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New Measures, New Policies

2일차(10.28.수), 14:30~16:00, 전체회의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1978~1981 국제경제연구원(KIEI) 수석연구원
1981~1993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1988 대통령자문 구조조정위원회 전문위원
1989~1993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1993 경제부총리자문관 (금융실명제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기획)
1993~1997 교통개발연구원(KOTI) 원장
1997~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1998~2000 주OECD대표부 대사
1999~2000 OECD Development Centre 자문이사회 의장
2001~2004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01~2005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금융포럼(Finance Forum) 의장
2001~2006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부회장
2001 (현) 서울금융포럼(Seoul Financial Forum) 부회장
2003~2004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2004~2006 국가경영전략포럼 대표
2006 (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2006 (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현)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산업분과위원장)

<저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국제경제 질서와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저서 및 논문 다수



샤이다 바디이 세계은행 개발데이터그룹 국장
 (Shaída Badíe, Director of Development Data Group, World Bank)

참 | 여 | 세 | 셴

국가통계인의 역할
The Role of Official Statisticians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정보관리학 석사

<경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 정보관리학 강의

세계은행 국제경제과 시스템분과장

(현) 국제 비교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CP) 수석 매니저

(현) 다수 통계조정그룹의 회원

* 개발결과 관·통계작업의 조화·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통계를 목표로 핵심 협력주체들과 긴밀한 협력

(현) 세계은행 개발데이터그룹 국장

* 세계은행 경제·사회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연례 세계개발지표, 세계은행 아틀라스, 글로벌개발재정(제2권) 발행/데이터그룹은 통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세계은행의 후원에 있어서 핵심 부서



제프 바스켄드 뉴질랜드 통계청장
(Geoff Bascand, Chief Executive of Statistics New Zealand)

참 | 여 | 세 | 셴

국가통계인의 역할
The Role of Official Statisticians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Otago대학교 지리학 학사
호주국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1981 재정부 경제분석전문가·경제전망과 과장
1996~1997 워싱턴 D.C. 기반 IMF 경제학자
1998~2004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그룹 팀장
2005 리더십개발센터 연구원상 수상
호주 Monash대학교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뉴질랜드 정부 부 통계전문가
2007 (현) 뉴질랜드 통계청장



이재창 ISI 차기회장, 한국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Jae Chang Lee, President-elect, ISI/Professor Emeritus,
 Statistics, Korea Univ.)

참 | 여 | 세 | 선

국가통계인의 역할
 The Role of Official Statisticians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학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수학과 석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수학과 박사

〈경력〉

- 1972 미국 모라비안대 조교수
- 1978 한국표준연구소 전산실 실장
- 1979~2007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1992 한국통계학회 회장
- 1993~1998 국제통계기구(ISI) 이사
- 1995 한국공식통계연구회 회장
- 1999 국제통계기구(ISI) 2001서울대회 학술위원장
- 2001 국제통계계산학회 회장 및 국제통계기구 부회장
- 2007 (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 2009 (현) 국제통계기구(ISI) 차기 회장

〈저서〉

- 「최신통계학」
- 「수리통계학개론」



김상협 한국 청와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
(Sang-Hyup Kim,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Future and Vision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참 | 여 | 세 | 선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박사과정수료)

<경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삼성물산 기획실 근무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정치부·지식부·기획팀 기자
매일 세계지식포럼 대변인
mbn 뉴스파노라마 앵커
매경 비전코리아 기획팀장
2004 SBS 보도본부 차장대우
2008 SBS 보도본부 미래부 부장
2008 (현) 청와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

<저서>

「디지털 컨퍼런스의 최전선」 (공저)
「미래한국리포트」 (공저)
「미디어 빅뱅」 (공저)



구자영 한국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Jayoung Koo, President & CEO, SK Energy, Korea)

참 | 여 | 세 | 선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미국 UC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재료공학 석사
미국 UC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경력〉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미국 엑손모빌 선임연구원
포스코 경영정책, 신사업본부장 상무
미국 엑손모빌 기술경영위원회 위원
미국 엑손모빌 기술혁신 매니저
2008 SK에너지 P&T 사장
2008 SK에너지 총괄사장
2008 (현)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 에너지·환경산업분과위원장
2009 (현) SK에너지 대표이사



에밀 살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경제학과 교수
(Emil Salim, Professor, Economics, Univ. of Indonesia)

참 | 여 | 세 | 셴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1972 (현)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78~1993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1983~1987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 위원
1993~2003 인도네시아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재단 의장
1994~2003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재단 의장
1994~1999 세계 삼림 및 지속가능개발위원회(WCFSD) 공동의장
1995~1999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의장
2000~2002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제10차 회의 의장
2001~2002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및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장
2001~2002 인도네시아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

<수상>

자예드국제환경상 수상(2005)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간 환경의 개선 및 자원의 지속가능 사용의 공헌자에게 수여
아사히 환경상 수상(2006)



소렌 허맨슨 덴마크 삼소에너지연구소장

(Soren Hermansen, Director, Samsø Energy Academy, Denmark)

참 | 여 | 세 | 선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의회의

<경력>

1997년 덴마크 삼소도가 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섬으로 지정된 후, 삼소도 주민 설득 및 국제사회에 삼소도 사례 홍보 등 “삼소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인물

* 타임지 가디언 등 세계 유명 언론에서는 삼소도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주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낸 허맨슨 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확신에 찬 리더십을 강조

2006 (현) 삼소에너지 아카데미 소장

2008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 부문의 영웅 (Heros of the Environment 2008)”

2009 덴마크인 최초로 환경 분야의 노벨상인 “예테보리 환경상*” 수상

* 2008년도 수상자 :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 현재 삼소도는 유럽 최초의 에너지 자립 섬으로서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탄소 배출량이 제로 이하)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떠올랐으며 본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이끌어 온 허맨슨 소장은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수많은 국제회의의 연사 등으로 초빙되어 삼소도의 성공 사례 공유



강성진 한국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Sung Jin Kang, Professor, Economics, Korea Univ.)

참 | 여 | 세 | 선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1999 일본 츠크바대학교 조교수
2003~2006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2006 (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2007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2008 (현)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2008 (현)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저서〉

「한국의 경제정책」 (2005)



이혜훈 한국 국회의원
(Hye Hoon Lee, Legislator, Korea)

참 | 여 | 세 | 선

의회의 역할
The Role of Parliaments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경제학 박사

<경력>

- 1994~1996 영국 레스터(Leicester)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996~2002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1998 유엔(UN) 정책자문위원
- 1998~20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단
- 2003~2004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2003 BH 고령사회대비 및 사회통합 대책반 전문위원
- 2004~2008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 2006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2006~2007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2008 (현)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 2008 (현)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저서>

-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공저, 1997)
-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공저, 2000)
- 「경제사회여건변화와 재정의 대응역할」 (공저, 2001)



김영기 한국 LG전자 지원부문장 부사장
 (Young-Ke Kim,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orporate Support Division, LG Electronics, Korea)

참 | 여 | 세 | 션

일다운 일과 직장에서의 웰빙
 Decent Work and Well-Being at the Work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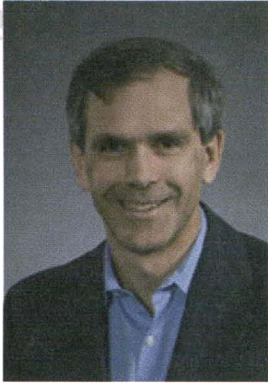
2일차(10.28.수), 16:30~18:00, 부문회의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브링갠영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 1979 (주)럭키 연지공장 노무담당
- 1983 럭키금성 기초실 인사팀
- 1996 LG그룹 회장실 인사팀장 이사대우 인사팀
- 1998 LG구조조정본부 인사지원팀장 이사 인사지원팀
- 1998~1998 LG구조조정본부 인사담당 상무
- 2000~2000 LG전자(주) HR부문장 전무
- 2000 (현) LG전자(주) HR부문장 부사장
- 2004 (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제3대 회장
- 2006 (현)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2008 (현) LG전자 지원부문장 부사장



크리스토퍼 머레이 미국 워싱턴대 보건지표 판정연구소 소장
(Christopher Murray, Institute Director,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USA)

참 | 여 | 세 | 셴

모자보건 및 신생아 돌봄 분석 및 개선
Analysing and Improving Maternal and Neonatal Car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회의

<학력>

미국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학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국제보건경제학 박사
미국 하버드 의대 박사

<경력>

1991~1998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학, 국제보건경제학 조교수
1998~2000 WHO 정책집단을 위한 보건정책, 증거와 정보에 대한 글로벌 프로그램 국장
2001~2003 WHO 정책집단을 위한 증거정보 사무총장
2003~2005 미국 하버드대학교 글로벌 보건 발의 국장, 인구 및 개발 연구센터 부장
2003~2007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 공공정책과 교수
(현) 미국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 보건 교수 겸 보건지표판정연구소 소장

<저서>

「글로벌 질병 부담과 리스크 요인」(2006) 외 13편 등



폴 디킨슨 영국 탄소배출 공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Paul Dickinson, Coordinator, Carbon Disclosure Project, UK)

참 | 여 | 세 | 선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의의

〈학력〉

영국 Bath대학교 책임성 및 기업실천학 석사

〈경력〉

영국 환경연구교수단체 회원

보험회계사연구소 회원

아이네트워크* 회장

* EyeNetwork: 유럽 최대 화상회의 예약 서비스

대규모 독립기업홍보 회사 RufusLeonard 설립자

(현) 영국 탄소 배출 공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전 세계 500대 기업에 온실가스배출량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여 이를 투자에 연결시키고자 함. 현재 기관투자단체 사무국에 4조 달러 재산을 제공.

〈저서〉

「아름다운 기업」(2000),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과 공저한 기업의 브랜드화에 관한 저서를 포함하여 5권의 저서 집필



정래권 한국 외교통상부 기후변화 대사
(Rae Kwon Chung, Ambassado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Korea)

참 | 여 | 세 | 선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회의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력>

1991 외무부 과학환경과 과장
1993 주 프랑스 참사관
1996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1999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관
1999 외교통상부 환경과학담당 심의관
1991 주 인도네시아 공사
2003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장
2004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국장
2008 (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리처드 레이어드 영국 런던경제대학(LSE) 교수
(Richard Layard, Professor,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SE, UK)

참 | 여 | 세 | 셴

삶의 질
Quality of Lif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회의

<학력>

영국 캠브리지 킹스대학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1985~1992 고용연구소 설립 후 연구소장 역임
1985~1986 유럽정책연구센터 거시경제정책그룹 의장
1989~1992 세계개발경제연구소 세계 경제 그룹 공동 의장
1990~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성과 센터의 설립이사 겸 현재 프로그램 소장
* 1964 이래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소속
* 영국 재무성 및 국가경제개발국, 러시아정부 등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
1997~2001 정부 실업 정책 자문위원
2000~ 노동 상원의원
(현) 런던경제대학(LSE) 교수

<저서>

「실업: 거시경제적 성과 및 노동시장」 (1991)
「행복: 새 과학의 교훈」 (2005)
「우울증 보고서」 (2006)



로즈마리 카두루 우간다 개발연구·훈련소 대표
(Rosemary Kaduru, Chief Executive, Department Research & Training, Uganda)

참 | 여 | 세 | 선

삶의 질
Quality of Lif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의회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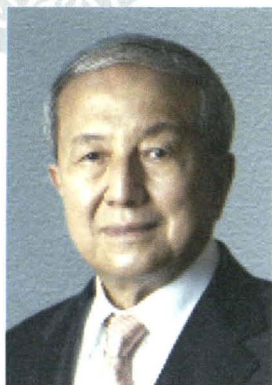
케냐 나이로비대학 법학과 학사
케냐 로스쿨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 개발연구센터에서 수학

<경력>

우간다 네덜란드개발기구에서 5년간 근무
* 지역과 국가차원의 시민사회 조직 증진 및 강화에 역점
케냐, 우간다,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옥스팜 지사에서 근무
* 개발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관리
2007 마드리드 클럽의 아프리카 여성지도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합류
(현) 우간다 개발연구소(DRT) 대표 겸 연구팀장

<주요 활동>

수년 동안 여성지도자 장려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에 참여



김세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Cae One Kim, Chairm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orea)

참 | 여 | 세 | 선

삶의 질
 Quality of Life

3일차(10.29.목), 09:45~11:00, 부문의의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벨기에 브뤼셀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
 벨기에 브뤼셀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 박사

〈경력〉

1962~1994 벨기에 브뤼셀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권
 1966~1967 EEC 대외경제관계성 근무
 1968~1969 벨기에 브뤼셀대 유럽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71~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81~1985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985~200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86~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987~1993 산업연구원 감사
 1987~1999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의원
 1988~1991 통신개발연구원 원장
 1988~1989 국제경제학회 회장
 1991~1994 금융통화위원회 운영위원
 1992~1996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1993~199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1993~1998 통신개발연구원 이사장
 1994~2004 한국EU학회 회장
 1995~199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995~1998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8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
 2002 (현) 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대표
 2004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6 (현) 서울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센터 초대 운영위원장
 2008 (현)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고문



이양희 한국 성균관대 아동심리학 교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Yanghee Lee, Professor,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gwan Univ./Chair,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참 | 여 | 세 | 셴

아동 웰빙
Childhood Well-being

3일차(10.29.목), 11:30~12:45, 부문회의

〈학력〉

미국 조자타운대학교 불문학과 학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특수교육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

〈경력〉

2000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어린이환경위원회 정책위원
2002~2004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장
2003 (현)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한국인 최초)
2003~2006 UN 아동기금(UNICEF) 이사
2004~200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기획단 위원
2004~2006 한국아동학회 이사
2004 (현) 한국장애아동인권연구회 회장
2004 (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07 (현)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아프리카아동정책포럼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7 (현) 법무부 아동법교육자문위원단 위원

〈저서〉

「한국의 아동지표」 (2001)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2001)
「행동요법」 (2001)
「한-미-불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이상적인 모성행동」 (2002)
「교육·그 숲을 걷는 이들의 발걸음」 (2003)
「어머니의 정, 양육 행동, 그리고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 (2003)
「신고 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2003)



이승규 한국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소장
(Seung-Kyu Rhee, Professor/Director, CSR, Research Centre
at KAIST)

참 | 여 | 세 | 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3일차(10.29.목), 14:30~16:00, 부문의의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

<경력>

1987~1993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1~1992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사이먼 경영대학원, Fulbright 방문교수
1993~1996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1996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조교수, 사회책임연구소장



신혜수 한국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Heisoo Shin, Professor,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 Korea)

참 | 여 | 세 | 선

시민사회의 역할
The Role of Civil Society

3일차(10.29.목), 14:30~16:00, 부문회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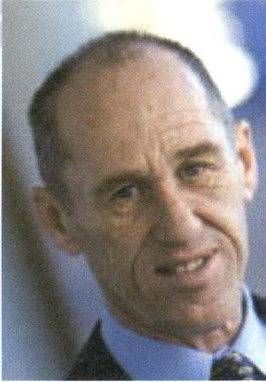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대 대학원

<경력>

1995~200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1997~ 정무2장관실 여성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
1999~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00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
2004 (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인권 박물관 공동상임추진위원장
2005~2008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8 (현) 이화여대 국제대학 겸임교수, 2008세계여성인권대회 추진위원장

<저서>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1994)
「비빔밥설거지 며느리 시키고 늘은밥설거지 딸 시킨다」 (1996)
「한국 풍속산업, 정치경제학」 (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中 논문 (1997)
「여성인권운동의 국제화와 한국화」



스티브 키렐리아 호주 Global Peace Index 설립자
(Steve Killelea, Founder, Global Peace Index, Australia)

참 | 여 | 세 | 선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Can we measure Peace? Does it help in achieving it?

3일차(10,29,목), 14:30~16:00, 부문회의

<경력>

2000 The Charitable Foundation*설립

* 호주 내 최대 규모의 민간 해외원조 재단,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활동

2001 Smarter Capital 창립

* 기술투자 전문 벤처기업

호주정보산업연합회(AIIA) 위원회 위원 역임

2007 세계평화지수(GPI) 고안*

* 주로 Economist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에서 분석

2008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창립*

* 경제(비즈니스) 및 평화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비영리연구기관

(현) OECD 글로벌 프로젝트 자문단 (Advisory Boards) 활동

(현) 세계종교평화위원회(World Council of Religions for Peace) 위원 활동

(현) Integrated Research Ltd* 대표

*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 전문 기업으로 스티브 키렐리가 창립



김진현 한국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Jin Hyun Kim, Chairman, The World Peace Forum, Korea)

참 | 여 | 세 | 선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Can we measure Peace? Does it help in achieving it?

3일차(10,29,목), 14:30~16:00, 부문의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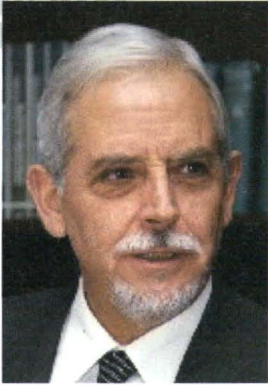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니만펠로과정 경제개발 수료
광운대학교 명예공학박사
고려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경력〉

1958~1966 동아일보 기자, 차장
1967~1980 동아일보 논설위원, 경제부 부장, 보도국 부국장, 편집국 부국장
1981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1984 영국 워윅대학교 초청교수
1985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1990~1993 제13대 과학기술처 장관
1993~199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1995~1999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997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999~2000 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
2001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2002 (현) 세계아동공동체(ICC) 국제고문
2008 (현)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2008 (현) 녹색성장포럼 대표
2009 (현)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

〈저서〉

「한국의 선택」 (1988)
「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1993)
「한인 삶의 조건과 미래」 (1996)



아르투로 곤잘레스 드 아라곤 멕시코 감사원장
(Arturo González de Aragón, Auditor General, Superior
Audit Office, Mexico)

참 | 여 | 세 | 선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 부여
Keeping Policy Makers Accountable

3일차(10.29.목), 14:30~16:00, 부문의의

〈경력〉

- 1979 SOMEX, S.A. 은행 기업관리국장
- 1979~1982 멕시코 국가예산기획처 예산관리재정국장
- 1982 정부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통상 현대화 및 규정 위원회” 사무국장
- 1984~1985 멕시코시티정부 평가및기획처장
-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공공부채위원회 의장
- 2002~2009 멕시코 감사원장 및 멕시코 최고감사 및 정부통제기구 협회장
- 2004~2007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경영이사회 부의장
- 2007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경영이사회 의장
- 2002 (현) 멕시코 감사원장



권태신 한국 국무총리실 실장
(Tae-shin Kwon, Minister, Prime Minister's Office, Korea)

참 | 여 | 세 | 선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New Policies, New Behaviours, New Institutions

3일차(10.29.목), 16:30~18:00, 전체회의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영국 시티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금융 석사

<경력>

- 1976 제19회 행정고시 합격
- 1989~1991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과장
- 1991~1994 재무부 국제기구과 과장
- 1994~1997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 교육문화예산과 과장 등 역임
- 1997~1998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부장
- 199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 1998~2001 주영국대사관 재경관
- 2001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 2004~2005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 2005~2006 재정경제부 제2차관
- 2006 주OECD 대표부 대사
- 2008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
- 2009 (현) 국무총리실 국무실장(장관급)



안토니오 마르자노 이탈리아 경제노동위원회(CNEL) 위원장
(Antonio Marzano, President, National Economic and Labour Council, Italy)

참 | 여 | 세 | 셴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New Policies, New Behaviours, New Institutions

3일차(10.29,목), 16:30~18:00, 전체회의

<경력>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2기 집권 시 생산적 활동부(Productive Activities) 장관
2008~2009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미래 위원회 위원장

* 지아니 알레마노 로마시장의 지휘로 설립된 위원회로, 로마시의 국내외 역할을 강화시킬 발전방향 파악, 문제 분석, 프로젝트 제안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함

(현) 경제 및 재정 정책학/금융 정책 역사학 교수

* 로마 사피엔자대학교·LUISS-Guido Carli 대학에서 강의/Abruzzo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학장

(현) 이탈리아 경제노동이사회 이사장

2009 (현)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의장

<저서 및 수상>

「거시경제 정책」

제 35회 Premio Scanno상 수상

* 학문 연구 활동에서 그 헌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상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
(Pier Carlo Padoan, Deputy Secretary-General, OECD)

참 | 여 | 세 | 선

향후 과제 : 이행 약속 및 결론
(Next Steps: Commitments and Conclusions)

4일차(10.30,금), 11:30~13:20, 폐회식

〈학력〉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1998~2001 이탈리아 총리 경제 자문관 역임

* 국제 경제 정책 담당

2001~2005 IMF 이탈리아 사무총장 역임

* 재임기간 동안 다수 이사회위원회 의장 및 회원으로 활동/유럽 조정 관련 활동

(현)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현) 이탈리아유럽재단(Fondazione Italianeuropei*) 소장

* 경제 및 사회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둔 이탈리아 정책 싱크탱크

(현) OECD 사무차장

* OECD 미래 전략 비전 개발에 기여/OECD와 기타 국제기구들 간 협력 담당



엔리코 지오바니니 이탈리아 통계청장
(Enrico Giovannini, President, Italian Statistical Institute)

참 | 여 | 세 | 셴

향후 과제 : 이행약속 및 결론
(Next Steps: Commitments and Conclusions)

4일차(10.30.금), 11:30~13:20, 폐회식

〈학력〉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1992 국가통계연구소의 경제계량연구서비스장

* "국가통계연구소 연례 보고서" 1·2호 작성 감독(1992~1993)

1993~1997 국가통계연구소의 국민계정및경제분석부서장

1994~1995 국가통계연구소의 보급및데이터은행국부서장

1997 국가통계연구소의 경제통계국장 역임

2000~2009 OECD 수석통계학자 겸 통계국장 역임

* 새로운 OECD 통계 전략 설계 및 실행/사회발전의 측정에 관한 글로벌프로젝트 발족

2009 (현) 이탈리아 통계청장

〈주요 활동〉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 회원

세계경제포럼에 의해 발족된 "사회발전 벤치마킹" 글로벌 이사회 의장

이탈리아 통계협회, 국제통계연구소, 대학간경제계량위원회(CIDE), 이탈리아 통계협회 의회에서 활동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계량경제 전문가로 활동

로마 토르 베르가타대학교 경제통계학과 전임교수 역임

부 록 2

제3차 OECD 세계포럼 전시회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n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주 제 :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전시기간 : 2009년 10월 27일(화) ~ 30일(금), 4일간

전시장소 : 벅스코 전시장 2-A홀 (4,418m²)

전시규모 : 참가업체 60여개

주 최 : 통계청, OECD

개최배경 :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이라는 OECD 세계포럼의 주제하에 통계시각화 기술, 친환경 녹색기술, 삶의 질 향상 사례 등을 소개하고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

전시품목

발전 측정: 통계시각화관

- 통계관련 IT기반 다양한 응용 서비스
 - 통계시각화 및 지식화 툴, 의사결정 지원 IT 기술 등

비전 수립: 녹색성장관

- 친환경·저탄소 제품: 전기/전자/사무기기, 가구/사무용품, 생활소비재 등
-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등),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에너지 저장, 소형열병합, 초전도체 등)
- 녹색기술정책: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학회 등의 연구기술, 정책 등
- 시민단체 활동: 환경관련 단체의 각종 활동 및 사례 등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관

- IT용·복합서비스: 통신서비스, 가전제품, 건설 등 관련 IT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 등
- 삶의 질 향상 신기술: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의 신규 기술 및 연구 성과 등
- 시민단체 활동: 삶의 질 향상 관련 단체의 각종 활동 및 사례 등

대한민국 홍보: 대한민국 홍보관

- 녹색성장 등 전시회 주제 관련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 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공식행사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 개막식

행사명 :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 개막식
 일 시 : 2009. 10. 27(화)
 장 소 : 전시장 2-A홀

부대행사

Exhibitors' Presentation Area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에서는 전세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서비스, 기술, 제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공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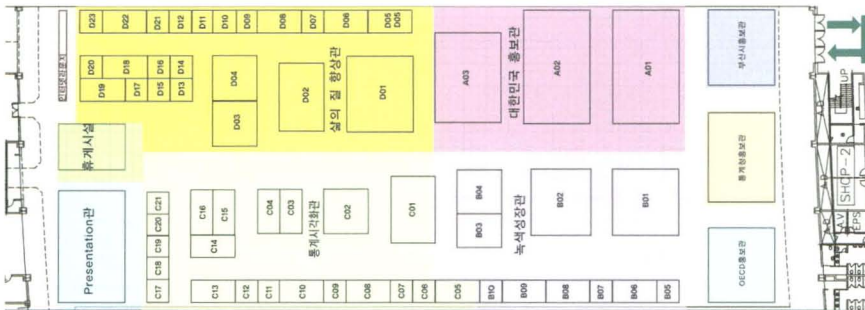
일 시 : 2009. 10. 27(화) ~ 10. 30(금)
 장 소 : 전시장 2-A홀 Presentation관

Visitors' Choice Award

제3차 OECD 세계포럼 국제전시회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행사로 참가객들의 투표를 통해 부스디자인, 마케팅활동 등 전시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최고의 전시업체를 선정하는 행사입니다.

일 시 : 2009. 10. 30(금)
 장 소 : 컨벤션홀 3층 301호

전시장구성



주관기관 홍보관-3업체 30부스

- OECD 홍보관 10부스
- 통계청 홍보관 10부스
- 부산시 홍보관 10부스

대한민국 홍보관-3업체 42부스

- 대한민국 홍보관 - 3업체 42부스
- A01 녹색성장위원회(독립 15부스)
- A02 삼성전자인사 (독립 15부스)
- A03 (주)씨티엔티 (독립 12부스)

주제관 - 54업체 120부스

- 녹색성장관 - 10업체 33부스
- 통계시각화관 - 21업체 38부스
- 삶의 질 향상관 - 23업체 49부스



The 3rd OECD World Forum
 International Exhibition on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제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발행 : 2009년 9월

인쇄 : 2009년 9월

발행인 : 이인실

발행처 : 통계청

총괄지휘 : 김진규, 김설희

공동기획 : 강유경, 박승근, 진유강, 박소진, 박소연

디자인 및 진행 : 예감기획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우 302-701)

전화 : 042-611-5214

팩스 : 042-611-5216

홈페이지 : <http://www.kostat.go.kr>, <http://www.oecdworldforum2009.org/>

OECD 세계포럼의 이해

제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